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요약	①
--------------------------------------	---

I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1
----------------------------------	---

1. 예산안 개요	1
가. 세 입	1
나. 세 출	2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4
가. 세 입	4
나. 세 출	5
3. 세입 · 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
가. 세 입	16
나. 세 출	17

II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24
--	----

1. 세입	24
가. 관유물대여료	24
2. 한반도 평화 조성	30
가. 프로그램 개요	30
나.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32
다.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36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8
가. 프로그램 개요	38
나.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40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44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7
가. 프로그램 개요	47
나.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49
다.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59
5. 국제기구분담금	62
가. 프로그램 개요	62
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및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65
6. 다자관계 협력	73
가. 프로그램 개요	73
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75
7. 국제 안보 협력 강화	81
가. 프로그램 개요	81
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82
8. 국제개발협력	86
가. 프로그램 개요	86
나. ODA 선진화	89
나. 인도적지원(ODA)	95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100
가. 프로그램 개요	100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01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105
가. 프로그램 개요	105
나. 공공외교 역량강화	107
다. 디지털 공공외교	121
1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5
가. 프로그램 개요	125
나. 재외국민 보호	127

12. 여권업무 선진화	132
가. 프로그램 개요	132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33
13. 경제외교	137
가. 프로그램 개요	137
나.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139
다.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142
14.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146
가. 프로그램 개요	146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147
15.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53
가. 프로그램 개요	153
나.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155
다.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60
라.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163
16. 재외공관운영	167
가. 프로그램 개요	167
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168
17. 외교 행정지원	171
가. 프로그램 개요	171
나.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75
다.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179
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83
18. 한국국제협력단	187
가. 개 요	187
나. 총 괄	192
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95
라.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02
마.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203

바.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204
사. 글로벌 연수	208
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219
 19. 한·아프리카재단	226
가. 개요	226
나. 총괄 검토	228
다.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232
 Ⅲ. 2026년도 외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38
 【국제교류기금】	238
1. 개 요	238
가. 수입 계획안	238
나. 지출 계획안	240
다. 자산운용 현황	242
라. 재정운용 계획 및 국제교류기금의 적립금 현황	243
2. 주요사업별 검토	245
가. 한국학 기반확대	245
나. 글로벌 인적교류	249
다. 정책공공외교강화	253
라. 글로벌 협력강화	258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요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증액	감액	주요 검토의견
총괄	-	7	-	○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396	-	313	○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 적정 추산을 통한 재편성 필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7,500	-	-	○ 신규 조직 신설 시 직제 외 공무원 채용을 통한 인력 증원 부적절
2026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6,760	-	-	○ 「2026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525	-	-	○ 내역사업 조정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성과 달성 필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0	-	-	○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의 연례적 불용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579	360	-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증액 검토 필요 ○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비용 일반용역비 전환 신중 검토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6,727	-	-	○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내실 있는 준비 필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207,156	-	-	○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73,569	-	-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예산의 감액 사유 검토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7,218	-	-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국제기구 다변화 및 비유엔기구 진출 노력 필요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005	-	-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운영에 대한 성과 중심 예산 집행 필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증액	감액	주요 검토의견
ODA 선진화	1,066	-	-	○ 재외공관의 ODA 모니터링 확대 · 강화 필요
인도적지원(ODA)	331,503	-	-	○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안과의 불일치 ○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예산 일원화 필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774	-	-	○ 국제법률기구 진출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18,857	-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신설에 대한 타당성 · 중복성 및 기존 사업(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과의 통합 필요성 검토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신규사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국민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가칭 ‘위디플’) 구축, 기존 인프라 개선 ·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디지털 공공외교	2,427	-	-	○ KOREAZ 채널의 구독자 증가세 지속 및 콘텐츠 생산성 강화 필요
재외국민 보호	13,920	-	-	○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공모전 시상금 집행의 비목 적정성 확보 필요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139,077	373	-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 예산 증액 검토 필요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6,982	-	-	○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의 우회적 증액 지양 필요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3,236	-	-	○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예산 운용의 실효성 강화 필요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721	-	-	○ 기후 · 에너지 · 과학기술 분야 외교의 집행을 제고를 통한 사업 실효성 강화 필요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의 운영 내실화 및 기 능 강화 필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증액	감액	주요 검토의견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481	-	-	○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외교 역량 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학사관 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필요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332	-	-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의 집행을 제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성과 강화 필요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신규)	850	-	-	○ 지역전략 수립·이행의 체계적 추진 및 내실화 필요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057	-	-	○ 재외공관 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면밀한 편성 필요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1,644	-	-	○ 외교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DR) 구축 예산 확보 필요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13,962	-	-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 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957	-	-	○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총괄	-	-	-	○ 종료예정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률 관리 및 후속 조치 필요
지역별(국가별) 원조	858,646	-	감액	○ 인도네시아(ODA) 사업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한 감액 필요 ○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역량강화 사업’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에 따른 재검토 필요 ○ 중앙아시아 지역 의회 관련 ODA 사업의 집행을 제고 및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글로벌 연수	73,940	-	-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사업 준비 여부 검토 필요 등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준비 철저 필요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52,930	-	감액	○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의 한국국제협력 단으로의 이관 부적절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증액	감액	주요 검토의견
한·아프리카재단				
총괄	4,420	-	-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확보 필요 ○ 고유사업비 축소로 인한 위탁사업 비중 과다 구조 개선 필요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801	-	-	○ 조사·연구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개발 노력 필요
국제교류기금				
한국학 기반 확대	13,505	-	-	○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사업 내실화 및 자원 다 각화 노력 필요
글로벌 인적교류	2,090	-	-	○ 한중청년교류사업, 재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확충 필요
정책공공외교강화	6,570	-	-	○ 해외정책연구기관 지원사업의 환류체계 점검 및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
글로벌 협력강화	3,933	-	-	○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2026년 정상회의 대 비 역할 강화 필요

I.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273,679	348,243	74,564	27.2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396	396	-	-	외교타운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0	130	-	-	국고채무 및 국고보조금 등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7,203	7,203	-	-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160,745	215,819	55,074	34.3	영사세입 (사증 및 공증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1,000	1,000	-	-	재외공관 수입금 및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104,205	123,695	19,490	18.7	여권세입 (여권발급 수수료)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8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2,737억원 대비 27.2%에 해당하는 7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수입대체경비인 ‘면허료 및 수수료’ 관련, 사증 및 여권발급량 증가 예측에 따른 것임¹⁾

1) 정부의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입예산안은 674.2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외교부 소관 4,173억원의 비중은 0.06%임.

* 외교부 총세입예산안 : 4,173억원
 - 일반회계 : 3,482억원
 - 기금: 690억원 [국제교류기금(690억원)]

나. 세 출

1) 기능별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일반지출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인 건 비	405,923	417,481	11,558	2.8
기본경비	228,545	232,447	3,902	1.7
주요사업비	3,587,308	2,900,173	△687,135	△19.2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5,501억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4조 2,218억원 대비 6,717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 사유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조정 등 주요사업비 6,871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2)

2) 정부의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출예산안은 728.0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외교부 소관 3.6조원의 비중은 0.49%임.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정부 총 세출예산은 673.3조원이며, 외교부 4.2조원 비중은 0.62%임)

* 외교부 총 세출예산안:3조 6,028억원

- 일반회계 : 3조 5,501억원

- 기금 : 527억원 [국제교류기금(527억원)]

2) 본부 대(對) 재외공관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예산안	구 성 비			
		본 부	%	재외공관*	%
합 계	3,550,101	2,722,512	76.7	827,589	23.3
인 건 비	417,481	108,128	25.9	309,353	74.1
기본경비	232,447	59,094	25.4	173,353	74.6
주요사업비	2,900,173	2,555,290	88.1	344,883	11.9

* 프로그램명 : 재외공관운영

** 세부사업명 : (기본경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주요사업)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재외공관 안전강화,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3) 원화 및 달러화 예산의 구성

(단위 : 백만원, 천\$)

구 분	2025예산	%	2026예산안	%	증 감	%
합 계	4,221,776	100.0	3,550,101	100.0	△671,675	100.0
원 화	2,606,112	61.7	2,124,297	59.8	△481,815	71.7
달러화	1,615,664 (\$1,170,771)	38.3	1,425,804 (\$1,033,191)	40.2	△189,860 (△\$137,580)	28.2

※ 기준 환율(1\$당) : ('25년) 1,380원 → ('26년) 1,380원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관	항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비고
					(%)	
11 재산수입	541 관유물대여료	396	396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0	130	-	-	
12 경상이전수입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203	7,203	-	-	
13 채화 및 용역판매수입	65 면허료 및 수수료	160,745	215,819	55,074	34.3	
	69 잡수입	1,000	1,000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65 면허료및수수료	104,205	123,695	19,490	18.7	
소관 합계		273,679	348,243	74,564	27.2	

나. 세 출

1) 성질별 · 사업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1. 인 건 비	405,923	417,481	11,558	2.8
2. 기본경비	228,545	232,447	3,902	1.7
3. 사 업 비	3,587,208	2,887,693	△699,515	△19.5
- 완료사업(1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100	-	△100	순감
- 신규사업(2건)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11,630	11,630	순증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	850	850	순증
- 계속사업(107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988	919	△69	△7.0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647	574	△73	△11.3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34	792	△42	△5.0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609	1,496	△113	△7.0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133	7,500	2,367	46.1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616	2,437	△179	△6.8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6,760	△94	△1.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20	2,847	△573	△16.8
정상 및 총리외교	29,557	28,993	△564	△1.9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908	2,525	△383	△1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508	1,430	△78	△5.2
대러 전략외교 강화	264	319	55	20.8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337	3,579	242	7.3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515	6,727	3,212	91.4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649	4,420	△229	△4.9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23,580	114,086	△9,494	△7.7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	216,784	177,706	△39,078	△18.0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102,607	109,278	6,671	6.5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383,253	207,156	△176,097	△45.9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ODA)	-	75,216	75,216	순증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6,072	17,218	1,146	7.1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751	1,635	△2,116	△56.4
MIKTA 중견국 외교	244	232	△12	△4.9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451	428	△23	△5.1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57	57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1,010	961	△49	△4.9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005	3,005	-	-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43	1,843	-	-
베트남(ODA)	57,293	50,094	△7,199	△12.6
인도네시아(ODA)	17,114	18,566	1,452	8.5
캄보디아(ODA)	21,232	24,147	2,915	13.7
필리핀(ODA)	30,470	27,632	△2,838	△9.3
방글라데시(ODA)	14,044	10,125	△3,919	△27.9
몽골(ODA)	20,937	22,519	1,582	7.6
라오스(ODA)	27,290	25,256	△2,034	△7.5
스리랑카(ODA)	7,975	8,233	258	3.2
네팔(ODA)	14,653	16,850	2,197	15.0
파키스탄(ODA)	11,315	12,395	1,080	9.5
아시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59,292	△24,356	△29.1
인도(ODA)	250	699	449	179.6
미얀마(ODA)	1,327	5,342	4,015	302.6
가나(ODA)	20,583	18,795	△1,788	△8.7
에티오피아(ODA)	28,644	23,478	△5,166	△18.0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131,620	△47,346	△26.5
르완다(ODA)	17,733	19,850	2,117	11.9
우간다(ODA)	17,547	19,697	2,150	12.3
탄자니아(ODA)	17,931	18,508	577	3.2
세네갈(ODA)	12,507	9,148	△3,359	△26.9
이집트(ODA)	8,176	8,786	610	7.5
콜롬비아(ODA)	11,229	9,720	△1,509	△13.4
페루(ODA)	9,497	17,747	8,250	86.9
볼리비아(ODA)	17,250	13,180	△4,070	△23.6
파라과이(ODA)	11,100	9,364	△1,736	△15.6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5,356	30,272	△15,084	△33.3
우즈베키스탄(ODA)	22,020	20,258	△1,762	△8.0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9,972	53,749	△16,223	△23.2
키르기스스탄(ODA)	12,653	11,636	△1,017	△8.0
타지키스탄(ODA)	5,439	2,500	△2,939	△54.0
우크라이나(ODA)	5,055	5,025	△30	△0.6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43,026	127,245	△15,781	△11.0
글로벌연수(ODA)	67,973	73,940	5,967	8.8
국제기구협력(ODA)	80,015	35,030	△44,985	△56.2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45,230	52,930	7,700	17.0
협력사업 지원(ODA)	61,390	91,576	30,186	49.2
전략적 협력 강화(ODA)	6,400	7,300	900	14.1
ODA 선진화(ODA)	1,271	1,066	△205	△16.1
인도적지원(ODA)	677,503	331,503	△346,000	△51.1
민관협력사업(ODA)	65,000	49,518	△15,482	△23.8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523	6,774	251	3.8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423	2,488	65	2.7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2,346	1,789	△557	△23.7
공공외교 역량강화	15,754	18,857	3,103	19.7
디지털 공공외교	1,952	2,427	475	24.3
재외국민 보호	13,959	13,920	△39	△0.3
영사서비스 지원	720	870	150	20.8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3,893	139,077	15,184	12.3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557	1,147	△410	△26.3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870	1,507	637	73.2
2025 APEC 의장국	100,830	322	△100,508	△99.7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549	6,982	433	6.6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760	3,236	476	17.2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698	2,721	23	0.9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04	3,271	△33	△1.0
국내외 교육훈련	7,132	7,231	99	1.4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417	417	-	-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93	393	-	-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959	1,038	79	8.2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183	481	298	162.8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067	949	△118	△11.1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390	1,332	△58	△4.2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24,367	234,582	10,215	4.5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5,926	6,117	191	3.2
재외공관 안전강화	25,082	25,261	179	0.7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75,511	78,923	3,412	4.5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049	21,876	△173	△0.8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9,916	11,644	1,728	17.4
재외공관 행정 정보화(정보화)	1,801	1,801	-	-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13,254	13,962	708	5.3
정책연구개발	338	338	-	-
외교네트워크 구축	5,325	4,743	△582	△10.9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7,445	6,631	△814	△10.9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617	1,957	340	21.0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2,188	2,341	153	7.0
외교기록 개방 서비스 강화	286	286	-	-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500	505	5	1.0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4,373	4,373	-	-
외교홍보역량강화	2,041	2,041	-	-

2) 프로그램 · 단위사업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4,221,676	3,537,621	△684,055	△16.2
1100 한반도 평화 조성	22,101	23,325	1,224	5.5
113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988	919	△69	△7.0
1132 (평화체제 구축지원)	3,090	2,862	△228	△7.4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33	7,500	2,367	46.1
1134 (동북아시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9,470	9,197	△273	△2.9
1135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3,420	2,847	△573	△16.8
1200 정상외교	29,557	28,993	△564	△1.9
1231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	29,557	28,993	△564	△1.9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680	4,274	△406	△8.7
1331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908	2,525	△383	△13.2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772	1,749	△23	△1.3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1,501	14,726	3,225	28.0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337	3,579	242	7.3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8,164	11,147	2,983	36.5
2100 국제기구분담금	826,224	681,795	△144,429	△17.5
2131 (국제기구분담금)	826,224	681,795	△144,429	△17.5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2200 다자관계 협력	21,585	20,531	△1,054	△4.9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21,585	20,531	△1,054	△4.9
2300 국제 안보 협력 강화	4,848	4,848	-	-
2331 (사이버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4,848	4,848	-	-
2400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1,967,014	1,474,591	△492,423	△25.0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307,548	281,150	△26,398	△8.6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2,087	249,882	△52,205	△17.3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94,432	80,283	△14,149	△15.0
243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15,139	93,168	△21,971	△19.1
2435 (글로벌 프로그램)	336,244	289,145	△47,099	△14.0
2436 (협력사업 지원)	61,390	91,576	30,186	49.2
2437 (전략적협력강화)	6,400	7,300	900	14.1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743,774	393,717	△350,057	△47.0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23	6,774	251	3.8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6,523	6,774	251	3.8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2,475	25,561	3,086	13.7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2,475	25,561	3,086	13.7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4,679	14,790	111	0.8
273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4,679	14,790	111	0.8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2900 여권업무 선진화	123,893	139,077	15,184	12.3
2931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3,893	139,077	15,184	12.3
3000 경제외교	112,566	13,194	△99,372	△88.3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03,257	2,976	△100,281	△97.1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9,309	10,218	909	9.8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2,698	2,721	23	0.9
3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국제협력강화)	2,698	2,721	23	0.9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4,945	15,962	1,017	6.8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2,388	12,831	443	3.6
3532 (외교전략 수립)	2,557	3,131	574	22.4
4000 재외공관 운영	801,182	827,589	26,407	3.3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99,243	309,353	10,110	3.4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48,954	150,454	1,500	1.0
4012 (재외공관 운영)	22,099	22,899	800	3.6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224,367	234,582	10,215	4.5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106,519	110,301	3,782	3.6
7000 외교 행정지원	235,305	239,720	4,415	1.9
7001 (본부 인건비)	97,277	97,983	706	0.7
7002 (소속기관 인건비)	9,403	10,145	742	7.9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7011 (본부 기본경비)	50,261	51,671	1,410	2.8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7,231	7,423	192	2.7
7031 (외교 정보화)	47,020	49,283	2,263	4.8
7032 (외교정책연구(R&D))	338	338	-	-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21,734	20,836	△898	△4.1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2,041	2,041	-	-

3) 국고보조금 사업

<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증감률 (%)	비 고
총 계	688,747	317,655	△371,092	△53.9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50,054	6,917	△43,137	△86.2	■ 국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주포럼 개최비용 등) ■ 평택시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638,693	310,738	△327,955	△51.3	■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인도적지원(ODA) ■ 한-러 대화 ■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 사업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3,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1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여권발급 업무의 운영비 보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하는 제주포럼 비용 지원, 평택시의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APEC 지자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431억원 감액된 6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증감률 (%)	비 고
총 계	50,054	6,917	△43,137	△86.2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수입대체경비) (대행기관 국고보조)	5,610	5,610	-	-	국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원
■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 포럼지원	738	701	△37	△5.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및 국방협력· 민군관계 강화)	638	606	△32	△5.0	경기도(평택시) 지원
■ 2025 APEC 의장국 (APEC 지자체 지원)	43,068	0	△43,068	순감	경주시 지원

□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및 개도국 긴급구호 지원사업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80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인도적지원(ODA) 사업 내 해외긴급구호 감액(△3,281억원)에 따른 것임.

< 민간경상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638,693	310,738	△327,955	△51.3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96	91	△5	△5.0	제주평화연구원 지원 (국제평화재단 교부)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269	269	-	-	한-러대화
아중동국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강화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900	1,090	190	21.1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활동 지원 (한-중동 협력포럼 사업을 중동 지역 외교지평 확대사업으로 이전)
글로벌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532	532	-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국 지원
인도적지원(ODA) (해외긴급구호)	636,896	308,756	△328,140	△51.5	해외긴급구호 (KOICA 교부)

3.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세 입

< 2026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273,679	348,243	74,564	27.2	
재 산 수입	관유물대여료	396	396	-	-	외교타운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
재 산 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0	130	-	-	국고채무 및 국고보조금 등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7,203	7,203	-	-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
재 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160,745	215,819	55,074	34.3	영사세입(시증 및 공증 발급 수수료)
재 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1,000	1,000	-	-	재외공관 수입금 및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104,205	123,695	19,490	18.7	여권세입 (여권발급 수수료)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8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2,737억원 대비 27.2%에 해당하는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 출

1) 예산안 총괄

< 2026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일반지출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인 건 비	405,923	417,481	11,558	2.8
기본경비	228,545	232,447	3,902	1.7
주요사업비	3,587,308	2,900,173	△687,135	△19.2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6,717원(△15.9%) 감액된 3조 5,501억원이 편성되었음.

2)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교류 확대 ②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 지원 ③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 ④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 확대 ⑤ AI 플랫폼 기반 구축 지속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 사업에 2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미국내 중요 입법사항 추진(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을 위해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에 5억원 증액 편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에 6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국민주권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외교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에 9억원 신규 편성, 아프리카 국가와의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예산 32억원 신규 편성,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예산(68억원)을 편성하였음.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예산 3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하였음(106억원 → 107억원).

3) 세출예산안의 구성 및 특징

가) 개 요

세출 예산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2.6% 증액된 4,175억원, 기본경비는 1.7% 증액된 2,324억원, 주요사업비는 19.2% 감액된 2조 9,00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량적 편성이 어려운 인건비, 기본경비, ODA, 국제기구분담금 등은 전체예산의 79.9%에 해당하는 2조 8,352억원임.

외교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본부, 재외공관의 예산 비율은 전체 3조 5,501억원 예산 중 본부 예산 2조 7,223억원, 재외공관 예산은 8,2762억원으로 각각 76.7%, 23.3%임.

외교부 전체 예산에서 달러화표시 예산, 원화표시 예산 비율은 전체 3조 5,501억원 예산 중 원화예산 2조 1,243억원, 달러화표시 예산 1조 4,258억원(10억 3천만불)으로 각각 59.8%, 40.2%임.

나) 2026년도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내역

<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4,221,776	3,550,101	△671,675	△15.9
한반도 평화 조성	22,101	23,325	1,224	5.5
정상외교	29,557	28,993	△564	△1.9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680	4,274	△406	△8.7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1,501	14,726	3,225	28.0
국제기구분담금	826,224	681,795	△144,429	△17.5
다자관계 협력	21,585	20,531	△1,054	△4.9
국제 안보협력 강화	4,848	4,848	-	-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1,967,014	1,486,221	△480,793	△24.4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23	6,774	251	3.8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2,475	25,561	3,086	13.7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4,679	14,790	111	0.8
여권업무 선진화	123,893	139,077	15,184	12.3
경제외교	112,566	13,194	△99,372	△88.3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2,698	2,721	23	0.9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4,945	15,962	1,017	6.8
재외공관운영	801,182	827,589	26,407	3.3
외교행정지원	235,305	239,720	4,415	1.9

2025년도 외교부 프로그램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717억원(△15.8%)이 감액되었음.

전년 대비 감액된 프로그램의 내역을 보면,

①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3.8억원(△8.7%), ② ‘국제기구분담금’은 1,444억원(△28.0%), ③ ‘다자관계 협력’은 10.5억원(△4.9%), ④ ‘국제개발협력’은 4,808억원(△24.4%), ⑤ ‘경제외교’는 994억원(△88.3%)이 각각 감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동남아, 유럽지역 및 중앙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단년도 사업(‘한-싱가포르 수교기념 사업’(1억), ‘한-라오스 재수교기념 사업’(1억)) 종료 등에 따라 감액되었음.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5-’27년 우리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하락 및 일부 PKO 임무단 철수·예산 감소로 유엔 PKO 예산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95억원, 유엔PKO예산분담금 39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요 분야에 대해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차원에서 국제기구사업분담금·신탁기금 1,025억원이 감액되었음.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25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사업 종료

(△20억원)로 감액되었음.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전략적 개발원조 추진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사업 264억원,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사업 522억원,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사업 141억원, 중동 CIS 지역 국가원조 사업 220억원,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 471억원,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 3,50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예산 감액(△1,005억원)에 따른 것임.

전년 대비 증액된 프로그램을 보면,

① ‘한반도 평화 조성’이 전년 예산 대비 12억원(5.5%), 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32억원(28.0%), ④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가 31억원(13.7%) ④ ‘여권업무 선진화’가 152억원(12.3%), ⑤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이 10억원(6.8%) 증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사업이 23.6억원 증액되었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중남미·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교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따라 아중동지역국가

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32억원 증액되었음.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 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지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22억원,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여권 발급 서비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여권 예상 발급량 증가 등에 따라 152억원 증액되었음.

‘외교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은 외교전략과 정책 수립, 외교정보 역량 강화 및 외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 3억원, 지역전략수립 및 이행 사업(신규) 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Ⅱ.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가. 관유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³⁾에 따른 토지, 건물 등 정부 소유물에 대한 대여 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관유물대여료의 세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⁴⁾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51 관유물대여료	45	396	41	396	-	-
토지대여료 (51-511)	35	-	-	-	-	-
건물대여료 (51-512)	10	396	41	396	-	-

외교부의 2026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3)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 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2.8.

□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외교부의 세외수입 중 토지대여료는 2024회계연도부터 발생하였음. 이는 2023년 외교부 소관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입금⁵⁾과, 세종연구소 건물의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토지) 일부 점유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기인함.

2024년 2월 22일 지적측량 결과 세종연구소 건물이 외교부 소관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외교부는 과거 5년간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약 3,400만원을 수납하였음.

세종연구소 건물이 (주)LIG넥스원에 매각됨에 따라 향후 동 부지에 대한 토지대여료는 (주)LIG넥스원으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연간 약 700만원 수준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토지대여료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4	-	-	-	34	34	-	100	-	-
'25	-	-	-	7	7	-	100	-	-
'26(안)	-	-	-	7	7	-	100	-	-

(자료: 외교부)

5) 2024년 수납액 592,720원

그러나, 수입 규모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생략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세입예산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며,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실제로 2023년 외교부의 외청으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외교부의 토지대여료보다 규모가 더 작은 세입 항목들까지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⁶⁾하고 있음.

향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대여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교부는 세입예산의 투명성과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토지대여료 수입예상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2026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총 계	8,802	1,026	1,026	1,011	1,015	△11	△1.1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1	1	1	1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1	1	1	1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798	1,000	1,000	1,000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8,798	1,000	1,000	1,000	1,000	-	
65 면허 및 수수료	4	20	20	5	9	△11	△55.0
면허 및 수수료(65-651)	4	20	20	5	9	△11	△55.0
69 잡수입	-	5	5	5	5	-	-
기타잡수입(69-691)	-	5	5	5	5	-	-

□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 적정 추산을 통한 재편성 필요

1996년 이래 민간에 위탁 관리되던 외교센터를 2020년 외교부가 환수하여 국립외교원이 관리함에 따라, 동 센터 내 민간임대공간에서 건물대여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매우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건물대여료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328	328	328	100	100	-	-
2023	390	390	390	206	206	52.8	100		
2024	429	429	429	9.6	9.6	2.2	100		
2025.7.	396	396	396	28.8	28.8	7.2	100	-	-
2026(안)	396	396	-	-	-	-	-	-	-

이는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신설되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광화문으로 이전함에 따라, 외교타운 내 사무실을 유상사용허가 중이던 3개 공증업체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하여 중도에 철수하고, 1층 카페 업종 역시 2024년 1월 계약 종료 이후 민간임대 전 공간 모두 공실 상태가 길어진 데 기인한 것임.

최근 국립외교원은 민간임대 대상 6실 중 3실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장애인단체에 무상사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유상임대를 위한 3실에 대하여 1실은 임대가 완료되었고, 2실은 온비드 입찰공고 개찰 결과 응찰 업체에 낙찰 및 사용허가를 완료한 상태임.

<외교센터 층별 사무실 및 입점업체 현황>

2025.11.6.

연 계 부 록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시설지원팀 (301호) / (207.00㎡)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302호) / (169.55㎡)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303호) / (146.40㎡)	최경주 복지회 (304호) / (146.40㎡)	재외동포협력센터 (305~306호) / (376.55㎡)	3층
	아시아아너스 소사이어티협회 (201호) / (36㎡)	회계법인 세움 (202호) / (220㎡)	로 비		국립외교원 시설지원팀 관리공간 (203~205호) / (329.4㎡)	2층
	여권과 발급팀 (101호) / (281.85㎡)	장애인단체 카페 (102호) / (135.56㎡)			국립외교원 시설지원팀 관리공간 (103~105호) / (197.37㎡)	1층
	주차장(3,650.18㎡), 중앙감시실(94.44㎡)					B1층
	주차장(3,650.18㎡), 기계실(842.14㎡), 전기실(645.70㎡)					B2층

(자료: 국립외교원)

<2025년 외교타운 입점업체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징수결정액)	비고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102호)	2025.01.01.~2027.12.31.	무상사용허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아시아아너스 소사이어티협회 (201호)	2025.11.07. ~2027.12.31.	5.9(유상)	10회차 공고 개찰 결과 낙찰 및 사용허가 완료
세움 회계법인(202호)	2024.11.07.~2027.12.31.	38.4(유상)	국유재산법 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
최경주복지회 (304호)	2025.11.03. ~2027.12.31.	38.3(유상)	9회차 공고 개찰 결과 낙찰 및 사용허가 완료
재외동포협력센터 (305~306호)	2023.01.01.~2025.12.31.	무상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합 계		82.6	

(자료: 국립외교원)

이에 따라, 2026년도 실제 수납 가능 금액은 8,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건물대여료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실제 수납 전망과 괴리가 있음.

이는 예산 편성 시 기존 민간임대 6실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실제 수납 가능한 예산안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2. 한반도 평화 조성

가. 프로그램 개요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은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등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원,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 평화 조성			22,523	15,712	13,470	22,101	16,484	23,325
	[1131]북핵문제 협의지원		798	1,069	828	988	988	919
		[40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798	1,069	828	988	988	919
	[1132] 평화체제 구축 지원		2,667	3,097	2,636	3,090	3,090	2,862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513	647	517	647	647	574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878	878	834	834	792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020	1,572	1,241	1,609	1,609	1,496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188	5,133	5,133	7,500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188	5,133	5,133	7,500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34]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900	3,560	2,813	9,470	2,853	9,197
		[401]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900	3,560	2,813	2,616	2,616	2,437
		[402]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	-	6,854	237	6,760
	[1135]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전략적협력관계강화	11,983	2,688	2,005	3,420	4,420	2,847
		[401]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636	2,688	1,975	3,420	4,420	2,847
		[402]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581	-	-	-	-	-
		[404]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8,767	-	30	-	-	-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21억 100만원) 대비 12억 2,400만원(5.5%) 증액된 23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51억 3,300만원) 대비 23억 6,70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7개 세부사업은 모두 전년 대비 감액되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의 종료 등으로 전년도(34억 2,000만원) 대비 5억 7,300만원(△16.8%)이 감액된 2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는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지속적 강화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75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억 6,700만원(46.1%)이 증액됨. 이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실무급 교류에 6억 7,600만원, 한미동맹 기반 강화 및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12억 900만원,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 등 안보 분야 협력 심화·확대에 2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임.

< 2026년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합계	5,188	5,133	5,133	7,500	2,367	46.1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516	581	581	1,257	676	116.4
동맹기반 강화	2,545	2,380	2,380	3,589	1,209	50.8
한미 안보협력 강화	511	653	653	922	269	41.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및 국방협력·민군관계 강화	1400	1,225	1,225	1,438	213	17.4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217	294	294	294	-	-

□ 신규 조직 신설 시 직제 외 공무원 채용을 통한 인력 증원 부적절

외교부는 ‘미국 정책변화 동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세분석팀’ 신설에 2억 1,600만원, 州의 입법 동향 및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州 유력인사 발굴을 위한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신설에 1억 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미국 정책변화 동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세분석팀’은 석사급 연구원 4인을 채용하여 미국의 정책과 정세 변화를 분석하여 각 분야별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주정부·주의회 협력팀’은 석사급 연구원 2인을 채용하여 잠재력 있는 州 유력인사를 발굴해 州 주요 인사 관리 및 소관 州 인사 초청 사업을 지원하고, 州 현안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정세분석팀 및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세분석팀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내역사업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동맹기반 강화		
세부내역	연구원 4인 인건비	상용임금	161	연구원 2인 인건비	상용임금	67
		복리후생비	2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33		고용부담금	14
	운영비 20	일반수용비	20	운영비 105	일반수용비	20
		-	-		국내여비	5
		-	-		국외여비	80
	합계		216	합계		187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정세분석팀 및 주정부·주의회 협력팀의 연구원을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나, 공무직의 제도적 한계나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렵고, 정부조직법상 정규 직제에 포함되지 않아 직제 밖 인력 증원으로 인한 조직 팽창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채용 절차의 경우 공무원은 직렬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하긴 하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직의 채용은 소속 기관의 행정규칙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 등 공무원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됨.⁷⁾

또한 공무직은 복종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의 규정⁸⁾을 적용받지 않으며, 공무원과의 처우 불균형으로 인하여

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①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해지, 선발취소 등에 대해 예비 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⑤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7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직 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미국 내 정책 변화와 주정부 동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측면에서 신규 조직 신설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공무원 채용을 통해 상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이미 외교부 지역국 내 중국 정세분석팀(4인), 일본 정세 조사 분석팀(3인), 러시아 정세분석팀(1인)을 운영 중인바, 이러한 방식의 공무원 채용이 직제 우회를 통한 사실상 정원 증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임⁹⁾.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9)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직제 개정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한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직제 개정을 통한 공무원 증원을 바탕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인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제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다.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은 당초 2025년 개최예정¹⁰⁾이던 사업을 2026년으로 순연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합계	-	6,854	237	6,760	△94	△1.4
준비기획단 운영	-	746	-	755	9	1.2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	237	237	-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	5,871	-	6,005	134	2.3

□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2025년도에 개최예정이던 사업을 2026년도로 순연¹¹⁾한 것으로, 준비기획단 운영에 7억 5,500만원, 정상회

10) 2024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계기 정상 간 공동성명 및 한국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발표

11) 외교부는 행사 순연의 사유로 우리측의 대안제시 및 다각적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국내사정(12.3) 및 일부 중앙아 국가들의 정상 외교 일정 등 사유로 개최 일자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의 및 부대행사 개최에 6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은 순연하지 않고 2025년도에 2억 3,700만원을 유지하였음.

<2025년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반수용비(210-01)	60	• 회의·행사 관련 물품 구입 등: 7백만*5종 = 35백만원 • 수수료 및 자문료: 1백만*5회 = 5백만원 • 결과보고서 발간: 0.2백만*100부 = 20백만원
임차료(210-07)	24	• 회의·행사 관련 임차 : 6백만*4회 = 24백만원
국내여비(220-01)	3	• 국내출장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15천원*5회*4명 = 3백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	100	• 사전 업무협의 출장: 50백만*2회 = 100백만원
사업추진비(240-01)	50	• 전문가 간담회 및 협의회: 1.3백만*1회 = 20백만원 • 오만찬 및 선물: 3백만*10회 = 3백만원
합계	237	

(자료: 외교부)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에 대하여 외교부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성과사업 점검, 對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 예산을 유지¹²⁾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2026년 하반기(3-4분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바, 2025년도에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에는 결과보고서 발간(2,000만원), 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26년에도 일정 부분 집행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12) 외교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개최(9.23.) 등 고위급 교류 추진을 통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라고 함.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프로그램 개요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ASEAN¹³⁾) 및 유럽 내 각국과의 협력 확대, 대화채널의 확충 및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3개¹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964	5,334	4,397	4,680	4,680	4,274
		[1331]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2,505	2,908	2,908	2,525
		[401]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 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2,505	2,908	2,908	2,525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231	2,326	1,892	1,772	1,772	1,749
		[401]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 력 강화	1,981	2,034	1,678	1,508	1,508	1,430
		[402] 대러 전략외교 강화	250	292	214	264	264	319

13)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4) 동 프로그램은 2025년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세부사업 중 「유라시아 협력 추진」이 2026년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 內 내역사업으로 편입되어 2026년에는 2개의 단위사업 및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46억 8,000만원) 대비 4억 600만원(△8.6%)이 감액된 4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은 내내역 사업 중 ‘한-싱가포르 수교기념 사업’ 및 ‘한-라오스 수교기념 사업’ 등 2025년도 단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억원이 순감되었으며, 내역사업 구조개편 시행 및 일부 정책연구비 감조정에 따라 전년도(29억 800만원) 대비 3억 8,300만원 감액된 2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사업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내역사업 중 ‘유라시아 협력 추진’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9,700만원) 대비 7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한-EU 인태전략 강화방안 모색’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4억 2,000만원) 대비 7,1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동 세부사업은 전년도 (15억 800만원)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대러 전략외교 강화」 세부사업은 전년도(2억 6,400만원) 대비 5,500만원 증액되어 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각급 양자대화 실시 및 지원을 통한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관련 각급 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역내 다자 및 안보협력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및 남방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한-아세안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임.

< 2026년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B-A)	증감률 (B-A)/A
	결산	본예산 (A)	예산안 (B)		
합 계	2,505	2,908	2,525	△383	△13.2
한-해양동남아 협력	280	568	376	△192	△33.8
한-대륙동남아 협력	91	71	532	461	649.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587	760	582	△178	△23.4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198	141	138	△3	△2.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1,349	1,368	897	△471	△34.4

동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9억 800만원) 대비 3억 8,300만원(△13.2%) 감액된 2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조정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성과 달성 필요

동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개별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별도 사업 편성의 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편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¹⁵⁾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부터 사업 구조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음.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구조 개편 현황>

2025년 사업명	2026년 사업명
1. 한-동남아 국가 교류 협력 강화 •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 대륙 동남아와의 교류 협력 강화 • 동남아 지역 명예영사 활동 지원 • 해양 및 대륙 동남아 중소국가 관계유지 관리	1. 한-해양동남아 협력 • 해양동남아 국가와의 양자외교 • 인도네시아 교류협력 강화 • 한-해양동남아 협력 증진 사업 • 지방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중소국가 관계 유지 관리 • 동남아시아 지역 명예영사 활동 지원
2. 베트남과의 협력 기반 강화	
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전략사업 • 역내 소지역 협력 증진 사업 • 주아세안대표부활용 네트워크 강화 사업	2. 한-대륙동남아 협력 • 대륙동남아 국가와의 양자외교 • 한-베트남 교류협력 강화 • 한-메콩 협력증진사업
4.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 증진 • 역내 트랙 II 다자협력 증진 • 동아시아 다자포럼	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전략사업 • 한-아세안 네트워크 강화
5.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 인태지역 내 다자협력체제 강화 • 한-아세안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한-메콩 협력강화 사업 • 한-해양동남아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 • 인태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4.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 증진 • 역내 트랙 II 협력 증진 • 동아시아 포럼
	5.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 아세안 관련 다자협력체제 강화 • 한-아세안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

(자료: 외교부)

15)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2025.8.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각각 해양동남아와 대륙동남아에서 외교적 중요성이 큰 국가로서 타 국가와 달리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시 인도네시아는 작년 집행액 대비 18% 감액, 베트남은 작년 편성액 대비 15.5% 감액되었음.

<인도네시아, 베트남 관련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5개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인도네시아 16)	-	15	-	17	-	16	-	61	50
베트남	70	46	70	67	121	91	71	41	6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남아시아 내 유일한 우리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만큼 정부·의회 각급 협의 및 외빈 초청 사업을 통해 양국 실질 협력 확대·심화가 필요하여 2026년부터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며,

베트남의 경우 지난 8월 또 럽 당서기장 방한 이후 우리 정상의 방배가 유력하며 내년 초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지도부 편성 시 고위급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202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4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16) '22-'25의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교류협력을 위한 별도 예산이 미편성되어, '해양 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내역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교류협력으로 예산을 집행함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발전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아세안 내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 교류 확대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 예산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아세안국은 동 사업 예산에 대해 2024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등에 대해 비목에 부적합한 예산 집행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고, 2025년 예산 집행에서도 유사한 건¹⁷⁾이 발견되어 과목 정정을 한 바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에 대해 2026년부터 내역사업에 대한 전면 조정이 있던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하고 그에 맞는 자금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17) 국 워크숍 개최 시 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했어야 하는 금액을 일반수용비로 오집행한 사례 등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유럽·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적극적인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여 실질협력관계 증진 및 포괄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범유럽지역 회의체 및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다층적 외교를 심화하려는 사업임.

< 2026년도 유럽지역국가과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B-A)	증감률 (B-A)/A
	결산	본예산 (A)	예산안 (B)		
합 계	1,678	1,508	1,430	△78	△5.1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253	301	301	-	-
유라시아 협력 증진	171	97	90	△7	△7.2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49	340	340	-	-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25	46	46	-	-
한-EU 갈등예방 및 현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23	232	232	-	-
명예영사 보조금	87	72	72	-	-
한-EU 인태전략 강화방안 모색	361	420	349	△71	△16.9
한-중앙아 협력 포럼	309	-	-	-	-

동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5억 800만원) 대비 7,800만원 (△5.1%) 감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의 연례적 불용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은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 협력 강화」 사업 내 내내역사업으로, 이들 국가와의 실질 협력강화를 위한 각급 인사교류에 대한 국외업무여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이 전무함.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의 최근 5개년 집행 현황¹⁸⁾>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¹⁹⁾
본예산 (A)	7	7	7	7	7
집행액 (B)	0	0	0	0	0
집행률 (B/A)	0	0	0	0	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해 집행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나, 같은 내역사업 내 다른 내내역사업인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협력사업’의 경우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에도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18)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19) 2025년 10월 15일 기준

<남동유럽 · 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사업의 2025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집행액(B)	집행률(B/A)
남동유럽 · 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46	35.73	77.7
·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협력사업	39	35.73	91.6
·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	7	0	0

(자료: 외교부)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과의 인사교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5년 연속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이나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향후 외교부는 사업 여건의 면밀한 검토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프로그램 개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종전의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과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 사업은 중남미지역 및 아중동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대 중남미 및 아중동 지역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대 및 국가 인지도 제고, 외교정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57	46,147	44,945	11,501	11,501	14,726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694	3,695	3,471	3,337	3,337	3,579
	[40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94	3,695	3,471	3,337	3,337	3,579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10,463	42,452	41,474	8,164	8,164	11,147
	[40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69	3,288	3,139	3,515	3,515	6,727
	[402]	한-아프리카 재단 출연	4,771	4,425	4,425	4,649	4,649	4,420
	[403]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023	34,739	33,910	-	-	-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15억 100만원) 대비 32억 2,500만원(28.0%) 증액된 14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2025년 1억 8,600만원)」 및 「FEALAC 협력 강화 및 사무국 운영(2025년 5억 1,600만원)」 사업 예산이 각각 전년도 대비 1억 1,400만원, 1억 2,800만원 증액되어, 세부사업 예산이 전년도(33억 3,700만원) 대비 2억 4,200만원 증액되었고,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42억 3,700만원으로 편성(2025년 10억 3,500만원)되는 등, 동 세부사업은 전년도(2025년 35억 1,500만원) 대비 3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은 중남미지역 국가 및 지역 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남미 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며,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대 중남미 외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33억 3,700만원) 대비 2억 4,200만원(7.3%)이 증액된 3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합계	3,471	3,337	3,337	3,579	242	7.3
대중남미지역 전략적 진출지원	1,169	1,142	1,142	1,142	-	-
중남미 권역별 전략적 협력 확대	476	459	459	459	-	-
명예영사	52	54	54	54	-	-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385	390	390	390	-	-
중미카리브 지역과의 연대강화	553	496	496	496	-	-
FEALAC 협력강화 및 사무국 운영	546	516	516	644	128	24.8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증진	90	94	94	94	-	-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200	186	186	300	114	61.3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증액 검토 필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²⁰⁾」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미주기구(OAS),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중남미 지역기구에 우리 대학(원)생들을 파견하여 중남미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매년 25명 내외의 인원을 6개월간 파견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사업 최근 5년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파견 인원(명)	지역기구 수
2021*	420	0	420	0	0
2022	417	188	229	13	10
2023	411	411	-	25	16
2024	359	351	8	21	14
2025	359	340	19	20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1년 미파견
(자료: 외교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사업 파견 지역기구(2025년)>

기구명	본부 소재지	인턴 파견 국가	기능(설립 목적)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스위스	페루 (중남미 지역본부)	노동기준 제정, 고용·사회보호 촉진, 노동권 보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대한민국	멕시코 (사무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프로젝트 지원

20) 내역사업명 변경 : 구 「차세대 중남미 진출 인력 양성」 →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기구명	본부 소재지	인턴 파견 국가	기능(설립 목적)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사무소)	안데스 지역 국가 공공·민간 부문 필요 자원 확보 및 지속 개발 지원, 산업 현대화를 위한 차관 제공
라틴아메리카의회 (PARLATINO: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Parliament)	파나마	파나마	중남미·카리브 지역 의회 간 협력 및 입법 교류 촉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ALADI: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우루과이	우루과이	회원국 간 양·다자 협정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 시장 달성 추진
미주기구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국	미국	미주지역의 민주주의·지속가능한 개발·자유무역 증진, 역내 사회문제 해소 노력
세계식량기구 (WFP: World Food Programme)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전 세계 식량지원, 기아 및 영양실조 퇴치, 인도적 구호 활동 수행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UN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칠레	칠레	유엔 산하 지역경제위원회로, 중남미 지역 경제발전·사회 개발 증진 및 관련 활동 조정, 역내·외 국가와의 경제관계
이베로아메리카교육과학문화기구 (OEI: 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스페인	온두라스 (사무소)	종합개발, 민주주의, 지역통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문화 등 분야에서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국가간 협력 증진
이베로아메리카사무국 (SEGIB: Ibero-American General Secretariat)	스페인	스페인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조정
중미통합체제 (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 지역의 자유·평화·민주주의·경제발전 달성
카리브국가연합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해 지역 역내 경제권 창설, 카리브 국가의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협력 증진

※ 일부 기구 약칭은 스페인어 공식 명칭의 약자임.
(자료: 외교부)

2025년 예산안 기준 파견 인턴 1인당 평균 소요 금액은 약 1,604만원으로, 동 금액은 인턴에게 지급하는 정착비·체재비²¹⁾ 및 인턴 파견 MOU에 따라 일부 지역기구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포함함.

21) 정착비 : 미국 \$3,000, 중남미·스페인 \$3,400 / 월 체재비 : 미국·스페인 \$1,407, 중남미 \$1,250

그런데, 외교부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은 2009년 최초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7년째 1인당 지원금액이 동결된 상태로, 2009년 대비 현재 인턴 파견 지역의 항공운임 상승률, 물가상승률²²⁾ 및 현지 치안 수준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확대²³⁾할 필요가 있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연도별 예산액, 파견인원 및 지원액>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상
예산액	-	255	254	237	284	436	363	387	384	408	408	425	417	403	359	359
인원	17	17	18	20	21	31	26	25	24	27	27	15**	13	25	21	10
1인당 지원액***	○ (항공운임 등 정착비) 미국 \$3,000, 중남미-스페인 \$3,400 ○ (월 체재비) 미국-스페인 \$1,407, 중남미 \$1,250															

* '09년 최초 파견 시 각 국제기구 협력기금(사업분담금) 예산 활용

**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미파견

*** 사업 시작 이래 17년째 항공운임 및 체재비 기준 금액 동결

(자료: 외교부)

실제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1인당 약 1,820만원, 한-아프리카재단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파견의 경우에도 1인당 약 1,800만원 수준이라고 함.

한편,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4개의 정부지원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의 경우에도 1인당 지원금액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음.

22) 중남미 85.2%, 스페인 31.5%, 미국 43.9%(2010년 대비 2024년 물가지수 상승률 고려('24년 인턴 파견 11개국 평균 및 미국, 스페인 / 출처 : World Bank))

23) 외교부는 1인당 지원 금액을 '26년 2,375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총 3억 6,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함.

- 정착비: 항공운임 상승 등 고려, 미국 \$3,600, 스페인 \$4,080, 중남미 \$4,150로 인상

- 월 체재비: 물가상승률 등 고려, 미국 \$2,040, 스페인 \$1,829, 중남미 \$2,188로 인상

<정부지원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²⁴⁾

사업명	주관기관	내용	지원금액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	외교부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가 소재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UAE 등 국가에 파견	항공료(실비, 최대 200만원) 및 체재비(매월 150~180만원, 최대 6개월)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환경부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소재한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국가 및 국내에 파견	항공료(실비), 보험료(실비, 최대 50만원), 비자발급비 및 체재비(매월 120~140만원, 최대 6개월)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가 소재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미국 등 국가에 파견	항공료(250만원), 비자발급비(50만원), 체재비(6개월) 등을 포함하여 연수 도시별 정액 지원금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OASIS 프로그램	농림 축산식품부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가 소재한 미국,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태국, 베트남 등 국가 및 국내 소재 사무소에 파견	항공료(실비), 비자발급 등을 위한 준비비(30만원), 및 체재비(매월 120~150만원, 최대 5개월)를 지원

(자료: 외교부)

첫째, 국제기구인사센터에 소개된 인턴파견사업의 경우 파견 대상지가 주로 유럽, 미국, 중동 등 인천발 직항 항공편이 있는 지역으로, 생활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임.

둘째, 중남미 지역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한 32개국 대부분이 직항 노선이 없고, 현지 치안 상황 또한 불안정한 편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거비·보험료 등 생활비 지원이 요구됨.

따라서 단순히 1인당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4)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부지원 인턴 파견 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의 경우 기관 웹사이트 및 최신 공고문을 통해 안내하는 지원 내역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였으며, 우리 정부 지원 금액 외 기구 측의 인턴 지원 사항은 미파악.

실례로 2023년 온두라스(OEI) 파견 인턴의 경우, 강도가 잦아 시내버스 이용이 불가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경비원이 있는 주거단지에 거주해야 함에 따라 교통비 및 월세 등 지출 과다로 체재비 부족을 호소한 바 있음.

<'24년 인턴 파견 중남미 지역 국가 소비자 물가지수 및 범죄율>

국가	소비자 물가지수*	범죄율**
멕시코	184.4	28.2
브라질	223.2	22.4
엘살바도르	129	18.2
온두라스	197.8	38.3
우루과이	290.6	8.9
칠레	178	3.6
콜롬비아	196.3	27.5
트리니다드토바고	163.6	29.4
파나마	128.4	12.7
파라과이	182.9	7.8
페루	163	5.7
평균	185.20	18.43
한국	132.2	0.5

* 2010년 물가지수가 100일 때 2024년 물가지수(출처: World Bank)

**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브라질, 페루는 2020년 통계 / 출처: World Bank)

(자료: 외교부)

이에,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파견 인턴 1인당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남미 지역 특유의 물가·치안·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아울러, 청년층의 중남미 진출 확대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하여 파견 인원 확대 및 예산 증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국제기구 현장에서 실질적 역량을 축적하고, 향후 중남미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비용 일반용역비 전환 신중 검토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는 우리 기업·국민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개소하였으며, 중남미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자원·인프라·신산업 분야 심포지엄 개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음.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중남미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임. 매회 중남미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협력 분야를 대주제로 선정하여 2~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고, 각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함.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현황>

일시	주 제
2010.11.24	재생에너지 및 농업
2011.12.01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2012.12.14	대중남미 자원개발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2.10	대중남미 자원개발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2.19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4.12.14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5.12.11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6.12.16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환경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7.12.13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8.12.17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9.11.27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진출 방안
2020.11.19	2020년 대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 및 유망 분야
2021.12.16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
2022.12.06	2023년 중남미 정세 전망 및 진출 유망 분야
2023.12.06	2024년 대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 및 유망 분야
2024.12.12	2025년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중남미 협력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일반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5년까지 연 1회 개최되던 심포지엄을 2026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하고, 직접 수행하던 업무방식을 전문업체에 대행하도록 변경한 데 따른 것임.

외교부는 그간 행사대행업체 없이 센터 근무 연구원 3인이 심포지엄 준비를 직접 수행해 왔으나, 연구·조사 등 본연의 업무와 병행함에 따라 업무 과중 및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였다고 밝히며, 심포지엄의 내실 있는 진행을 도모하고,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일반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동 심포지엄의 경우 3시간 남짓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행사 규모 및 전문성이 반드시 외부 전문업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연 2회로 행사 횟수를 확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접수행에 비해 일반용역비 예산액이 크게 증대되어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연도별 경비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수용비	5	3	5	-	1
임차료	4	5	8	10	12
업무추진비	3	4	6	14	9
일반용역비	7	-	6	-	-
계	19	12	25	24	22

(자료: 외교부)

<2024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2024. 12. 12. 목. 09:00 - 12:20

장소: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6F)

순서	주제	발언자
개회사		외교부 중남미국장
세션 1	미국 대선 이후 중남미 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조교수
세션 2	한-중남미 협력 1:기회 및 성장 분야	
발표 1	중남미 항공우주산업 동향과 협력 기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협력실장
발표 2	중남미 방위산업 동향과 협력 기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중남미 의약품 시장 동향과 협력 기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
세션 3	한-중남미 협력 2: 주요 투자 및 진출분야	
발표 1	중남미 핵심광물 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협력팀장
발표 2	중남미 인프라 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인프라 사업실장
발표 3	중남미 FTA 활용 전략과 공급망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팀장
질의응답		
폐회		

(자료: 외교부)

특히,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의 경우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남미 관련 연구·조사, 자료 발간, 홈페이지 운영, 심포지엄·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주요업무로 적시하고 있는바, 심포지엄의 수행을 전문업체에 맡김으로써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음.

이에, 외교부는 2026년도 동 심포지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데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제반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의 수립·이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26년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합계	3,139	3,515	3,515	6,727	3,212	91.4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686	2,186	2,186	2,196	10	0.5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297	1,035	982	4,237	3,202	309.4
아중동 외교정책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156	294	347	294	-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35억 1,500만원) 대비 32억 1,200만원 (91.4%)이 증액된 6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내실 있는 준비 필요

외교부는 내역사업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도(10억 3,500만원) 대비 309.4% 증액된 4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및 후속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32억 200만원을 증액한 데 기인함.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상세내역
일용임금(110-05)	61	사무보조 및 에디터 임금
일반수용비(210-01)	80	각 공관홍보비(40), 결과보고서 제작(30), 각종 사례비(5), 행사물품 구입(5)
특근매식비(210-05)	3	사무보조 및 에디터 특근 시 지원
임차료(210-07)	340	외교장관회의 행사장 임차(180), 부대행사 행사장 임차(160)
일반용역비(210-14)	2,369	행사 대행 및 관리 용역
국내여비(220-01)	2	기관협의
국외여비(220-02)	294	출장 항공료 및 체재비
사업추진비(240-01)	47	업무협의(20), 오만찬·선물(10), 주한공관 협의(17)
고용부담금(320-09)	6	사무보조 및 에디터 4대보험료 등
합계	3,202	

(자료: 외교부)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과문서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한-아프리카 양측이 2026년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경제 분야 및 국제무대 협력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사업임.

외교부는 금년 11월 4일(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여, 동 계기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관련 시기, 개최지, 의제 등 주요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의할 예정으로,

별도의 준비기획단 신설 없이 행사대행용역을 이용해 동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안)	
기간 및 장소	2026년 2-3분기, 한국 서울	
참석대상	아프리카 50여 개국 및 국제기구(AU, AfCFTA 등) 장관급 인사 약 60여 명, 주요 및 실무 수행원, 기업인 및 기자단 등 300여 명	
주요 프로그램	1일차	▲ 고위관리회의(SOM) ▲ 환영 리셉션
	2일차	▲ 개회식 ▲ 외교장관회의 ▲ 공식 만찬
	3일차	▲ 한-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설명회 ▲ 문화·산업시찰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광물·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미래산업 협력 토대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1국 1표 원칙의 국제무대에서 54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소재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대규모 국제행사의 특성상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부 일정·장소 확정, 참여국 조율,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국제기구분담금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i) 유엔정규예산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²⁵⁾, ii)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유엔 PKO(Peacekeeping Operations) 분담금 납부²⁶⁾, iii)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 차원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타의 무분담금 납부, iv)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회원국으로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및 v) 우리나라가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단독으로 기여하는 국제기구 신탁 기금 납부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8,262억 2,400만원) 대비 1,444억 2,900만원(17.5%)이 감액된 6,81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5) 각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은 [유엔 정규예산 총액 × 각국의 분담률- 직원공제액* 평균(약 0.08억불)]로 결정되고 있음.

26) 각국의 유엔 PKO예산 분담금은 [유엔 PKO예산 총액 × 각국의 분담률]로 결정되고 있는바, 유엔 PKO예산 총액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매년 6월 중 결정되고 있으며, 각국의 분담률은 유엔의 정규예산 분담률과 같이 3년 주기로 국민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660,365	718,311	707,172	826,224	798,335	681,795
		[2131] 국제기구분담금	660,365	718,311	707,172	826,224	798,335	681,795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97,134	107,284	105,435	123,580	114,191	114,086
		[402] 유엔PKO예산분담금 납부	203,096	212,377	203,709	216,784	198,284	177,706
		[403] 기타의무분담금 납부	84,876	97,036	96,783	102,607	102,607	109,278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75,259	301,614	301,245	383,253	383,253	207,156
		[405]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	-	-	-	-	73,569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의무분담금 납부」 사업은 전년도(1,026억 700만원) 대비 66억 7,100만원(6.5%) 증액된 1,092억 7,800만원으로, 국제기구 회원국·당사국으로서의 재정적 의무 이행 및 이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한편,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전년도(3,832억 5,300만원) 대비 1,760억 9,700만원(45.9%) 감액되어 2,07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기여하고 있는 분담금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에서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735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및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납부」는 2026년 유엔 정규예산 예상액 39.26억불 및 2025/26년 유엔

PKO 예산 53.9억불과 2025-27년 우리나라 분담률(2.349%)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음.

□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최근 5년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다 2026년에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26년의 감소세로 인하여 2026년의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규모가 2024년 이전으로 회귀하였음.

전 부처 기준으로 2026년 국제기구 분담금은 전년 대비 14.4% 감소한 1조 3,91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외교부의 2026년 분담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8.3% 감소한 8,529억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전 부처 (증감률)	9,146 -	10,216 (11.7)	15,070 (47.5)	16,253 (7.9)	13,919 (△14.4)
외교부	5,213	6,618	10,252	10,441	8,529
사업 분담금	1,686	2,767	3,016	3,833	2,807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2,072 ·국제기구 신탁기금 735
(증감률)	-	(64.1%)	(9.0%)	(27.1%)	(△26.8)

(자료: 연도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홍보 자료(2025.8.)」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감액은 일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정

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요 분야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차원에서 분담금을 재조정하였다는 의견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2024년 정부가 ‘우리의 분담금 기여순위가 경제 규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우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분담금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²⁷⁾에 배치되는 것임.

이는 국제사회에 일관성이 결여된 외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국제기구로의 한국인 진출에도 타격을 입히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방향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및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²⁸⁾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²⁹⁾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

27)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28

28)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29)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에 신규 편성된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에 편성하고 있던 분담금 중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기여하고 있는 분담금을 분리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동 사업에는 한-ESCAP 협력기금 등 10개의 분담금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예산안은 2,071억 5,600만원이고,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예산안은 735억 6,900만원으로, 이를 고려 시 재량적 성격의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은 2025년 3,832억 5,300만원에서 2,807억 2,500만원으로 1,025억 2,800만원(26.8%) 감액되었음.

< 2026년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및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301,245	383,253	207,156	△176,097	△45.9
국제기구 신탁기금	-	-	73,569	73,569	순증
계	301,245	383,253	280,725	△102,528	△26.8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의 세부 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2026년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납부대상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1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23,400	22,626	10,350	△12,276	△54.3
2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26,000	24,885	10,695	△14,190	△57.0
3	유엔아동기금(UNICEF)	19,500	18,663	7,314	△11,349	△60.8
4	유엔난민기구(UNHCR)	23,266	23,149	12,240	△10,909	△47.1
5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10,400	10,056	9,936	△120	△1.2
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6,500	5,850	3,226	△2,624	△44.9
7	유엔인구기금(UNFPA)	1,300	2,760	2,208	△552	△20.0
8	유엔자원봉사단(UNV)	5,832	5,829	5,165	△664	△11.4
9	유네스코세계시민교육 기여	1,300	1,199	1,380	181	15.1
10	유엔개발시스템선진화기금	1,927	1,864	1,863	△1	△0.1
11	한-아세안센터	7,600	7,600	7,600	-	-
12	APEC 미래번영기금	-	1,347	1,250	△97	△7.2
13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911	966	476	△490	△50.7
14	APEC 정책지원부서 분담금	229	472	350	△122	△25.8
15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원	17,550	17,980	15,298	△2,682	△14.9
16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1,554	2,664	1,554	△1,110	△41.7
17	글로벌 보건기여	-	48,151	55,200	7,049	14.6
18	OECD 자발적 기여금	2,576	3,073	3,073	0	-
19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68	377	414	37	9.8
20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 기여금(GTF)	650	547	200	△347	△63.4
21	NATO신탁기금	15,600	33,120	23,132	△9,988	△30.2
22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111	118	117	△1	△0.8
23	유엔평화구축기금(PBF)	10,408	9,881	4,364	△5,517	△55.8
24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10,408	5,204	2,174	△3,030	△58.2
25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601	1,387	2,208	821	59.2
26	군축분야 인도적 지원 신탁기금	883	883	828	△55	△6.2
27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260	253	138	△115	△45.5
28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544	4,427	3,123	△1,304	△29.5
29	유엔 평화유지신탁기금	3,900	3,955	3,147	△808	△20.4
30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42	145	319	174	120
31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	3,612	3,497	2,240	△1,257	△35.9
32	ICAO PKD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	42	43	31	△12	△27.9
33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5	63	24	△39	△61.9

연번	납부대상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34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25	315	215	△100	△31.7
3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390	126	74	△52	△41.3
36	해적퇴치 관련 IMO 사업분담금	260	254	220	△34	△13.4
37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사업지원	781	763	483	△280	△36.7
38	아프리카연합(AU)평화기금	6,500	4,918	-	-	폐지
39	대륙봉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26	27	10	△17	△63.0
40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자발적 기여금	426	421	370	△51	△12.1
41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 펠로우십 신탁기금	40	39	41	2	5.1
42	동북아환경협력 계획(NEASPEC)	146	142	123	△19	△13.4
43	글로벌파트너십	911	996	921	△75	△7.5
44	UNIDO 서울투자기술 진흥사무소(ITPO)	468	995	552	△443	△44.5
45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2,600	2,587	1,733	△854	△33.0
46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GSF)	2,838	2,824	2,120	△704	△24.9
47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신탁기금	4,879	5,176	1,380	△3,796	△73.3
48	메콩강위원회(MRC)	1,300	1,380	1,380	-	-
49	아시아-유럽재단(ASEF)	261	261	276	15	5.7
50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65	63	51	△12	△19.0
51	엘시(Elsie)기금	650	666	351	△315	△47.3
52	한-중미통합체제(SICA)협력기금	1,165	1,075	736	△339	△31.5
53	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사업	3,900	3,681	1,761	△1,920	△52.2
54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사업	232	225	201	△24	△10.7
55	비세그라드펀드(IVF)	650	645	368	△277	△42.9
56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기금	91	91	111	20	22.0
57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58	58	38	△20	△34.5
58	아이티 다국적 안보지원단 지원	-	13,470	-	-	-
59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397	357	221	△136	△38.1
6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 기여	-	-	659	-	신규
61	한-인도양위원회(IOC) 협력기금	-	-	306	-	신규
62	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태평양복원력기금(PRF) 지원	-	-	718	-	신규
63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나이로비 UN Complex 확장 및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	-	100	-	신규
64	OECD 민주주의분담금('25년 종료)	-	674	-	-	종료
합 계		231,798	305,263	207,156		

< 2026년도 국제기구 신탁기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납부대상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1	한-ESCAP 협력기금(KECF)	390	378	279	△99	△26.2
2	한-아세안 협력기금	36,400	38,640	38,640	-	-
3	UNIDO 공업개발기금(IDF)	434	652	552	△100	△15.3
4	한-인도양 협력기금	-	539	468	△71	△13.2
5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사업	5,200	5,388	5,388	-	-
6	한-태평양도서국(PIF) 협력기금	3,900	6,209	4,464	△1,746	△28.1
7	한-메콩 협력기금	10,400	11,040	11,040	-	-
8	한-유엔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협력기금	663	626	530	△96	△15.3
9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9,758	8,018	8,018	-	-
10	한-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협력기금	-	6,500	4,190	△2,310	△35.5
합 계		67,145	77,990	73,569	△4,421	△5.7

(자료: 외교부)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예산의 감액 사유 검토

재량분담금의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 예산안이 전년 대비 26.8% 규모로 대폭 감액된바, 개별 분담금 예산의 감액 사유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 국제기구분담금의 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 비하여 20% 이상 감액된 분담금은 총 41개 사업임. 그런데 대부분의 분담금이 매년 시행되는 분담금 자체평가 중 정량평가에서 전체 계속분담금의 평균인 91.56점을 상회하고 있어, 평가 결과와 감액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주요 감액 분담금 현황 >

연 번	분담금명	25 예산	26 정부안	분담금별 감액 사유 및 감액 규모 결정 근거	평가 결과
1	대인지뢰금지협약	28	14	2024년 평가회의 개최로 회의 일수 증가에 따라 2025년 증가한 분담금 예산을 2026년 예년 수준으로 조정	93
2	불어권국제기구(OIF)	52	37	우리 국회 예산 책정 후에 OIF 분담금이 상승하여 발생되었던 2024년도 미납금을 2025년에 완납 (2025년 일시 증가)	87
3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22,626	10,35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5
4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24,885	10,695	사업 우선순위 조정	98
5	유엔아동기금 (UNICEF)	18,663	7,314	사업 우선순위 조정	100
6	유엔난민기구 (UNHCR)	23,149	12,240	사업 우선순위 조정	88
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 소(OHCHR)	5,850	3,226	사업 우선순위 조정	100
8	유엔인구기금 (UNFPA)	2,760	2,208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9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966	476	2025년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미래세대번영’ 이니셔티브 지속 및 정착을 위해서는 2025년 의장국 수임 계기 신설한 ‘APEC 미래번영기금’의 기여수준을 100만불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 동 분담금 감액	97
10	APEC 정책지원부서 분담금	472	350		97
1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2,664	1,55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12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 기여금 (GTF)	547	200	일시적 감액을 통해 WTO 내 한국인 진출 등 우리 관심사안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2026년 APEC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APEC 사업분담금 부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분담금 감액	97
13	NATO 신탁기금	33,120	23,132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14	유엔평화구축기금 (PBF)	9,881	4,36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8
15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	5,204	2,17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16	유엔마약범죄 사무소 (UNODC)	253	138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17	유엔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427	3,123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18	유엔 평화유지신탁기금	3,955	3,147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19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	3,497	2,24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5

연 번	분담금명	25 예산	26 정부안	분담금별 감액 사유 및 감액 규모 결정 근거	평가 결과
20	ICAO PKD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	43	31	PKD 연회비 인하에 따른 초과 예상분 감액	91
21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3	2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4
22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15	215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23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소(ECCC)	126	74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재판 기능 종료 및 잔여 업무로 전환	98
24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사업지원	763	483	사업 우선순위 조정	100
25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자발적 신탁기금	27	1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8
26	UNIDO 서울투자기술 진흥사무소(ITPO)	995	552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27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2,587	1,733	사업 우선순위 조정	96
28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 (GSF)	2,824	2,12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29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신탁기금	5,176	1,380	‘21-’25년 재정주기 동안 우리 공약사항(1,500만불 이상 기여 공약) 이행을 위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바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 조정 감안 감액	97
30	엘시(Elsie)기금	666	351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31	한-중미 통합체제 (SICA)협력기금	1,075	736	사업 우선순위 조정	81
32	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사업	3,681	1,761	여타 기여금 간 우선순위 조정	88
33	비세그라드펀드(IVF)	645	368	사업 우선순위 조정	88
34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58	38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35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357	221	사업 우선순위 조정	96-97
36	한-ESCAP 협력기금(KECF)	378	279	사업 우선순위 조정	94
37	한-태평양양도서국포럼 (PIF) 협력기금	6,210	4,46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4
38	한-아프리카대륙자유 무역지대 (AfCFTA) 협력기금	6,500	4,190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으나 증액 검토 필요	87
39	아프리카연합(AU) 평화기금	4,918	-	국별 칸막이 개선 필요성 감안, 한-AU 협력기금으로 통합	97
40	OECD 민주주의 분담금	674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후속조치로서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74
41	아이티 다국적 안보지원단 지원	13,470	-	MSS 기금은 자발적·비연속적 기여로서 우리 정부는 ‘25년 상당 규모의 지원 시행	81

또한, 감액 사유 또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대부분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 결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번 재량분담금의 감액이 개별 분담금 예산의 효과성, 국익 달성도, 외교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다자관계 협력

가. 프로그램 개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 강화,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활동, 므타 소다자 협력을 통한 우리의 외교 지평 확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 등 국제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개의 단위사업 및 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215억 8,500만원) 대비 10억 5,400만원(4.9%)이 감액된 20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 협력	16,148	24,046	24,853	21,585	21,585	20,531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16,148	24,046	24,853	21,585	21,585	20,531
		[40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9,284	14,115	14,048	16,072	16,072	17,218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148	3,844	3,489	3,751	3,751	1,635
		[405] MIKTA 중견국 외교	147	160	137	244	244	232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409	475	425	451	451	428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	64	63	62	57	57	57
		[41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180	-	-	-	-	-
		[4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916	1,013	877	1,010	1,010	961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4,377	5,815	-	-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이 JPO 파견 인원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억 4,600만원(7.1%) 증액되었고,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이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활동 지원 사업 종료 등에 따라 21억 1,600만원, 「MIKTA 중견국 외교」 1,200만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사업 2,300만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사업 4,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각각 삭감되었으며,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종료되었음.

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은 국제기구초급 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17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억 4,600만원(7.1%) 증액됨.

<2026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합계	14,048	16,072	16,072	17,218	1,146	7.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13,908	15,896	15,896	17,034	1,138	7.2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개최	55	62	62	58	△4	△6.5
국제기구 인사센터	85	114	114	126	12	10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국제기구 다변화 및 비유엔기구 진출 노력 필요

JPO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을 국제기구에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파견하고 국제기구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선발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는 등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사업 예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7.		2026(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7,708	7,436	9,528	9,284	14,115	14,048	16,072	211	17,218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홈페이지에서 JPO 파견기구로 유엔/산하 기구, 유엔 사업 및 기금, 유엔 전문 및 독립 기구, 유엔 협력 및 기타 기구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JPO 파견 국제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JPO 파견 국제기구 현황표 (2025년 기준)>

구분	기구명(영문)	한글명칭	주요업무	본부 소재지	jpo 근무지
유엔/ 산하 기구	United Nations Secretariat (UN)	유엔 사무국	유엔의 행정·정책 집행 중심기구로, 국제평화·안보 유지, 인권, 개발 등 총괄	미국 뉴욕	미국 뉴욕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유엔 인도지원 조정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활동 조정 등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태국 방콕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유엔 아태경제사회 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 등	태국 방콕	태국 방콕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국	국제 재난 경감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약물 규제 및 마약 범죄 예방 등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세네갈 다카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	유엔 우주사무국	평화적 우주 이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구분	기구명(영문)	한글명칭	주요업무	본부 소재지	jpo 근무지
	UN Mine Action Service (UNMAS)	유엔 지뢰행동 조정국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도적 지뢰행동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UN Joint Staff Pension Fund (UNJSPF)	유엔합동직원 연금기금	유엔 직원 연금 관리 및 지급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국제사법 재판소	국가 간 분쟁 해결 등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사업 및 기금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개발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요르단 암만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환경계획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케냐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난민기구	난민 보호 및 정착 지원 등	스위스 제네바	태국 방콕,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요르단 암만
	UN 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세계 식량계획	식량 지원 및 기아 퇴치 등	이탈리아 로마	기니 코나크리
	UN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인구기금	인구 문제 및 정책 지원	미국 뉴욕	미국 뉴욕
	UN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아동기금	아동 권리·보호·교육 지원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케냐 나이로비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인간 정주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케냐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유엔자본 개발기금	자본원조를 통한 경제발전 도모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유엔 전문 및 독립 기구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국제농업 개발기금	국제 농업 개발 및 식량 안보 등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엔교육과학 문화기구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등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공업 개발기구	공업 개발 및 기술 협력 등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 공중보건 및 질병 대응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세계지식재산 기구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구분	기구명(영문)	한글명칭	주요업무	본부 소재지	jpo 근무지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세계기상기구	대기과학·기후학에 대한 국제 협력 촉진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식량 농업기구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등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 수립 및 고용·노동권 보호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유엔 협력 및 기타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이주기구	인도적 이주 관리 및 난민 지원 등	스위스 제네바	독일 베를린, 케냐 나이로비, 카메룬 야운데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경제정책 협의 및 연구 등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 형사재판소	전쟁범죄·인도범죄와 같은 국제범죄 재판 등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체제 이행 등	독일 본	독일 본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화학무기 금지기구	화학무기 폐기 및 비확산 이행 감독 등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Joint Inspection Unit (JIU)	유엔합동 감사기구	유엔 주요 국제 현장 감사 및 점검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JPO 파견 국제기구를 선정할 때 국제기구의 중요도, 우리의 정책적 우선순위,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 등³⁰⁾을 종합 고려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위를 선정한다고 함.

그런데, 현재 JPO 파견은 유엔 사무국(뉴욕) 및 유엔 산하기구가 밀집된 유럽 지역(제네바, 빈, 파리, 로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지역 소재 국제기구로의 파견은 제한적인 실정임. 2025년 기준, 현재 파견 중인 JPO 전체 80명 중 유럽과 북미 지역 파견이 80% 이

30) ▲3년차 연장 가능성 ▲전년도 미선정 기구 ▲현장사무소 직위 등도 고려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은 파견자가 없음.

<2025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지역별 파견 현황>

파견지역	파견인원 (명)	파견기구 수(개)	주요 파견 국제기구	비고
유럽	37	22	UNESCO, WHO, ICC, OECD 등	
북미 (미국·캐나다 등)	29	8	유엔사무국, UNFPA, UNICEF 등	
중남미 (중남미·카리브 등)	-	-		
아시아	5	3	UNESCAP, UNHCR, OHCHR	
아프리카	7	6	IOM, UNEP, UNODC, WFP 등	
중동	2	2	UNHCR, UNDP	
기타	-	-		
합계	80	41		

(자료: 외교부)

이러한 편중 현상은 외교부의 정책 선택이라기보다 JPO 제도가 본질적으로 유엔 및 그 산하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³¹⁾이기 때문에, 파견 지역이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유엔 전문기구의 본부 대부분이 제네바·빈·파리·뉴욕 등에 소재하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는 수가 제한적인 실정임.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지역외교 다변화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파견 국제기구 선정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소재 기구 및 사무소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3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정의)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 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있음.

아울러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상 파견대상 기관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등 비유엔·지역기구로의 진출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7.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³²⁾은 사이버·신기술 등 신종안보 위협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및 협력에 참여하고, 주요 다자안보기구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300] 국제 안보 협력 강화	3,565	6,206	5,675	4,848	4,848	4,848
		[2331] 사이버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3,565	6,206	5,675	4,848	4,848	4,848
		[401]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742	1,115	1,088	3,005	3,005	3,005
		[402]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	3,112	2,830	-	-	-
		[403]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23	1,979	1,757	1,843	1,843	1,843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48억 4,800만원) 대비 동일한 4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2) 2024년 외교부의 직제개편으로 인해 종전의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음.

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신형 군축·비확산 레짐 논의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요 군축·비확산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국제 논의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며,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제재 관련 국제 공조 등을 통한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합계	1,088	3,005	3,005	3,005	-	-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	529	541	541	541	-	-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104	103	103	103	-	-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455	2,361	2,361	2,361	-	-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운영에 대한 성과 중심 예산 집행 필요

지난 15년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해온 ‘안보리 북한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³³⁾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해체된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우

33)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상임이사국 + 한 + 일 + 1 : 총 8인)

- 안보리결의 1874호(2009)에 근거하여 설립, 매년 임무 연장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불법 해상활동, △불법 무기수출,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 정보 수집·분석→연 2회 보고서 발간(권고사항 포함)

리 정부의 주도로 11개국³⁴⁾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024년 10월 출범하였음.

외교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를 위한 내내역사업인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을 신설하고, 일반용역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역	'24 예산	'25 예산안	'26 예산안
○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체제 강화	399	2,361	2,361
－ 반확산 분야 양다자 외교	296	265	538
－ 국제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활동	103	96	57
－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	2,000	1,266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홈페이지 운영·관리	－	－	499

그런데,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당초 일반용역비만 편성된 20억원에 대하여, 다양한 비목으로 세분화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사업 집행내역>

(2025.9. 기준, 단위: 백만원)

비목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2026 예산안
일반수용비(210-01)	－	189	189	252
임차료(210-07)	－	－	－	10
유류비(210-08)	－	－	－	－
일반용역비(210-14)	2,000	441	99	150
국내여비(220-01)	－	－	－	－
국외업무여비(220-02)	－	70	70	35
사업추진비(240-01)	－	－	－	16
정책연구비(260-02)	－	1,300	577	800
합 계		2,000	935	1,263

(자료: 외교부)

34) (MSMT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5년도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MSMT 보고서 발간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5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에 보다 적합한 정책연구비로 13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그 외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협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을 집행하였다고 함.

한편,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내내역사업으로 '다국적제재모니터링 팀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비목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025년	2026년	상세내역(용도)
일반수용비(210-01)	-	252	대북제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임차료(210-07)	-	10	MSMT 관련 회의 개최
일반용역비(210-14)	2,000	150	MSMT 홈페이지 관리
국외업무여비(220-02)	-	35	MSMT 운영위 참석 등 관련 국외출장 추진
사업추진비(240-01)	-	16	MSMT 관련 업무 협의
정책연구비(260-02)	-	800	MSMT 관련 연구용역 추진
자산취득비(430-01)	-	499	MSMT 홈페이지 관리 관련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합계	2,000	1,762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5년에는 일반용역비로 MSMT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2026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전용 내내역사업인 'MSMT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신설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 비목을 변경하였음.

외교부는 MSMT 홈페이지 관리 비용만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해 우리측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은 모든 참여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각 참여국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MSMT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으로서 사무국이 없는 다국적 협의체의 임시 협력체에 불과하고 공식 국제기구나 법적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홈페이지 구축·관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다, 그 외 12억 6,3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성과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MSMT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감시기구인 만큼, UN의 공식 틀 밖에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동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보다 면밀히 계획을 세워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8. 국제개발협력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i)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ii)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iii)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iv)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v) 「글로벌 프로그램」, vi) 「협력사업 지원」, vii) 「전략적협력 강화」, viii)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일부(「인도적지원」 일부³⁵⁾ 및 「민관협력사업」³⁶⁾),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산임.

외교부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단위사업 중 「ODA 선진화」 세 부사업과 「인도적지원(ODA)」 세부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2026년도 동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감액이 이루어진 가운데, 전년도 본예산 1조 9,670억 1,400만원 대비 4,807억 9,300만원 감액(△24.4%)된 1조 4,86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는 2025.1.1.부로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후속조치로서 출국납부금 환불 등을 위한 사업비 116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국별협력사업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18.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검토하기로 함.

35) 2438-402 중 민관협력사업 인도적지원

36) 2438-403

<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124,771	1,968,005	1,883,806	1,967,014	1,933,644	1,486,221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 가원조	219,944	275,641	249,975	307,548	296,178	281,150
		[401] 베트남(ODA)	32,381	49,646	41,869	57,293	52,293	50,094
		[402] 인도네시아(ODA)	15,448	20,971	15,016	17,114	17,114	18,566
		[403] 캄보디아(ODA)	22,636	22,864	22,339	21,232	21,232	24,147
		[404] 필리핀(ODA)	18,137	31,043	21,613	30,470	30,470	27,632
		[405] 방글라데시(ODA)	14,122	13,790	9,410	14,044	14,044	10,125
		[406] 몽골(ODA)	14,848	17,122	16,706	20,937	20,937	22,519
		[407] 라오스(ODA)	25,698	24,652	26,752	27,290	27,290	25,256
		[408] 스리랑카(ODA)	11,044	12,232	18,842	7,975	7,975	8,233
		[409] 네팔(ODA)	7,971	9,438	10,101	14,653	14,653	16,850
		[410] 파키스탄(ODA)	7,337	9,239	8,869	11,315	11,315	12,395
		[411]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9,742	62,841	57,955	83,648	77,278	59,292
		[412] 인도(ODA)	415	853	190	250	250	699
		[413] 미얀마(ODA)	165	950	314	1,327	1,327	5,342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24,943	306,614	289,238	302,087	289,087	249,882
		[401] 가나(ODA)	9,548	15,943	15,943	20,583	20,583	18,795
		[402] 에티오피아(ODA)	31,109	30,643	28,804	28,644	28,644	23,478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24,029	187,826	177,451	178,966	173,966	131,620
		[404] 르완다(ODA)	15,640	15,714	15,714	17,733	17,733	19,850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5] 우간다(ODA)	14,554	14,501	13,620	17,547	17,547	19,697
		[406] 탄자니아(ODA)	14,678	18,927	16,981	17,931	9,931	18,508
		[407] 세네갈(ODA)	8,620	12,853	12,367	12,507	12,507	9,148
		[408] 이집트	6,765	10,207	8,358	8,176	8,176	8,786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87,242	73,671	72,784	94,432	94,432	80,283
		[401] 콜롬비아(ODA)	9,861	7,306	8,306	11,229	11,229	9,720
		[402] 페루(ODA)	6,917	9,964	7,101	9,497	9,497	17,747
		[403] 볼리비아(ODA)	8,408	8,024	9,224	17,250	17,250	13,180
		[404] 파라과이(ODA)	10,892	15,701	15,038	11,100	11,100	9,364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1,164	32,676	33,115	45,356	45,356	30,272
	[2434]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78,072	133,274	119,449	115,139	111,139	93,168
		[401] 우즈베키스탄 (ODA)	11,928	23,767	19,274	22,020	22,020	20,258
		[402]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7,482	88,688	80,027	69,972	65,972	53,749
		[403] 키르기스스탄	8,661	12,950	17,566	12,653	12,653	11,636
		[404] 타지키스탄(ODA)	1	7,169	1,882	5,439	5,439	2,500
		[405] 우크라이나(ODA)	-	700	700	5,055	5,055	5,025
	[2435] 글로벌 프로그램		228,796	313,652	306,090	336,244	331,244	289,145
		[401]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00,858	128,756	123,805	143,026	143,026	127,245
		[402] 글로벌연수(ODA)	51,917	67,378	66,962	67,973	62,973	73,940
		[403] 국제기구협력 (ODA)	51,725	81,915	80,207	80,015	80,015	35,030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4,296	35,603	35,116	45,230	45,230	52,930
	[2436] 협력사업 지원		48,397	59,260	54,450	61,390	61,390	91,576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1] 협력사업지원 (ODA)	48,397	59,260	54,450	61,390	61,390	91,576
	[2437] 전략적협력강화		3,925	8,000	5,661	6,400	6,400	7,300
		[401] 전략적 협력 강화 (ODA)	3,925	8,000	5,661	6,400	6,400	7,3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356,452	797,923	796,159	743,774	743,774	393,717
		[401] ODA선진화	1,149	812	714	1,271	1,271	1,066
		[402] 인도적지원(ODA)	307,774	740,111	740,079	677,503	677,503	331,503
		[403] 민관협력사업 (ODA)	47,530	57,000	55,365	65,000	65,000	49,518
		[404]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	-	-	-	11,630

나. ODA 선진화

「ODA 선진화」 사업은 ODA 정책 관련 각종 회의 개최·참여 및 ODA 현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 6,6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ODA 선진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714	1,271	1,066	△205	△16.1
·ODA 정책·집행·평가체 제 선진화	366	444	426	△18	△4.1
·국제개발협력 리더십 강 화	166	491	169	△322	△65
·현지 ODA 역량강화	182	336	471	135	40.2

내역사업 중 「현지 ODA 역량강화」는 재외공관이 현지 ODA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공관의 ODA 모니터링 확대·강화 필요

외교부는 「현지 ODA 역량강화」 내역사업에서 재외공관이 현지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출장비, 차량 임차료 및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 현지 ODA 역량강화 예산안 산출 근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현지 모니터링 및 검임국 ODA 추진 47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차량 임차 30백만원(75개국x0.2백만원x2회) (임차료) - 현장방문 출장 220백만원(75개국x0.97백만원x3회) (국외업무여비) - 관계기관 업무협의 21백만원(75개국x0.14백만원x2회) (사업추진비) - 모니터링 용역 200백만원(1지역x50백만원x4회) (일반연구비) |
|---|

재외공관은 ODA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제1항,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재외공관이 관계 부처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선정하며, 대상 사업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심의 시에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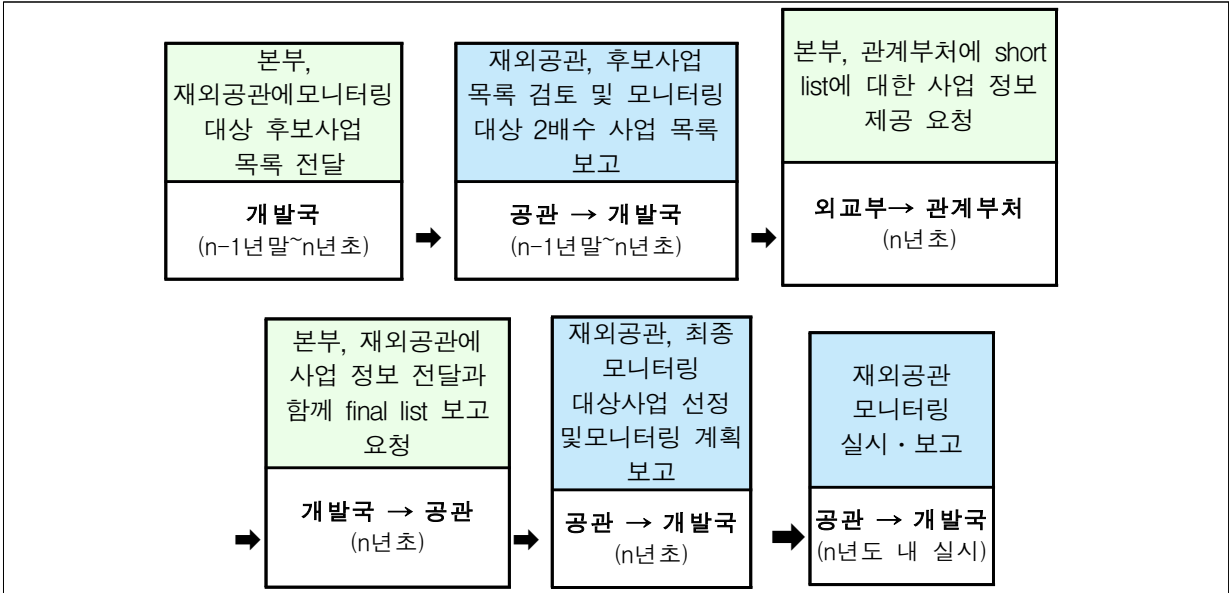
< 재외공관 현지 모니터링 근거 규정 >

구 분	조 문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무상원조 사업 중 30% 이상 진행된 계속사업과 종료 7년 이내의 종료사업 중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 본부가 재외공관에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후보사업 목록과 관련 정보를 재외공관에 제공하면, 재외공관에서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됨. ODA 중점협력국은 최소 7개 이상, 기타 협력국은 5개 이상 사업을 선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재외공관은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재외공관 모니터링 시행 절차 >



2024년에는 30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344개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재외공관 모니터링 수행 현황 >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아시아 · 태평양	네팔	7	아프 리카	우간다	7
	동티모르	5		이집트	8
	라오스	7		잠비아(짐바브웨)	2
	마셜제도(피지)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	1
	말레이시아	2		짐바브웨	1
	몽골	7		차드	1
	미얀마	7		카메룬	3
	방글라데시	7		케냐	5
	베트남	7		코트디부아르	5
	부탄(방글라데시)	5		탄자니아	7
	베트남	7		튀니지	3
	사모아(뉴질랜드)	1	중동 ·	벨라루스	1
	솔로몬제도(PNG)	1		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	2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스리랑카	7	유럽 · CIS	세르비아	5
	아프가니스탄	1		아르메니아(러시아)	1
	인도	1		아제르바이잔	5
	인도네시아	7		요르단	5
	캄보디아	7		우즈베키스탄	7
	태국	5		이라크	4
	투발루(피지)	1		이란	1
	파키스탄	7		조지아	4
	파푸아뉴기니	1		카자흐스탄	3
	피지	3		키르기스스탄	7
	필리핀	7		타지키스탄	8
				투르크메니스탄	1
아프 리카	가나	7	중남미	튀르키예	1
	가봉	1		팔레스타인	5
	나이지리아	5		가이아나(트리니다드토바 고)	1
	남아공	3		과테말라	5
	르완다	7		니카라과	1
	마다가스카르	2		도미니카공화국	5
	말라위(짐바브웨)	2		멕시코	3
	모로코	3		볼리비아	7
	모리타니아(모로코)	2		브라질	2
	모잠비크	5		에콰도르	5
	민주콩고	5		엘살바도르	5
	보츠와나(남아공)	2		온두라스	5
	부룬디(르완다)	1		자메이카	3
	세네갈	7		코스타리카	5
	수단	1		콜롬비아	8
	알제리	3		파나마	1
	앙골라	1		계	344
	에티오피아	7			

현지 ODA 역량강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의 ODA 모니터링 양적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업의 수가 후보사업의 12% 수준으로, 전체 후보사업 2,484개 중 302개만이 선정되었음.

<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현황 >

(단위: 개, %)

구분	2024			2025		
	후보사업 수(a)	수행 사업 수(b)	b/a	후보사업 수(c)	수행 사업 수(d)	d/c
사업 수	2,484	302	12.2	2,772	344(예정)	12.4

2026년의 경우 2025년 예산에 비하여 관련 예산이 1억 3,500만원 증액되어 보다 내실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에도 인력과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업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상원조에 대한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의 모니터링에 관한 현행법령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의 경우 재외공관이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대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유상원조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있음.

그러나 유상원조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장기·복합형 사업이 많아,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적 연계 등을 위해 재외공관의 현장 관찰과 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임.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재정적·기술적 관리 기능과 더불어,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 인도적지원(ODA)

「인도적지원(ODA)」 사업은 해외재난 관련 피해국의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난구호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십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1.1% 감액된 3,460억원임.

< 2026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740,111	677,503	331,503	△346,000	△51.1
·해외긴급구호	694,900	628,396	303,156	△325,240	△51.8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8,500	8,500	5,600	△2,900	△34.1
·국제부담금	31,200	33,120	16,560	△16,560	△50.0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187	187	187	-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5,300	7,300	6,000	△1,300	△17.8

동 사업은 「해외긴급구호」,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국제부담금」,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 예산이 세부사업 예산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①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에 직·간접적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② 「재난대응 시스템강화」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사무국·구조팀·의료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며, ③ 「국제부담금」은 UN인도지원조정실(OCHA)와 UN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안과의 불일치

외교부가 제출한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7,590억~8,960억 규모로 계획되었음.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은 3,315억원으로, 중기재정계획 상 예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과의 비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중기 재정계획	2024~2028	740,111	677,503	<u>896,144</u>	986,084	1,035,388	
	2025~2029		677,503	<u>759,253</u>	819,778	901,756	991,932
2026 예산안		-	-	<u>331,503</u>	-	-	-

(자료: 외교부)

이처럼 중기재정계획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긴급구호」,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국제부담금」 내역 사업의 예산안이 대폭 감액된 데에 기인한 것임.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에 각각 1억불 규모로 편성된 ACT-A³⁷⁾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인도적지원 관련 국제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음.

37)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20.4월 출범한 민관협력체제로 세계보건기구(WHO), Gavi, UNICEF, Unitaid,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

< 해외긴급구호 사업의 2025년 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 비교 >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해외긴급구호		628,396백만원	303,156백만원
	ACT-A	138,000백만원 = 1억불 x 1,380원/달러	-
	우크라이나 지원	138,000백만원 = 1억불 x 1,380원/달러	-
	긴급재난·만성위기 등 대응	352,396백만원	303,156백만원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8,500백만원	5,600백만원
국제부담금		33,120백만원	16,560백만원
	OCHA 기여금	8,280백만원 = 600만불 x 1,380원/달러	1,200만불 x 1,380원/달러
	CERF 기여금	24,840백만원 = 1,800만불 x 1,380원/달러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ACT-A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감액은 글로벌 보건 협력 및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정상 공약이 종료된 데에 따른 결과이며, OCHA 및 CERF 기여금 감액은 내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 및 전체적인 ODA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정상공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기구와 수혜국, INCO 등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감액 사유의 합리성 및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과의 과도한 괴리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예산 일원화 필요

글로벌 보건기구에 관한 지원은 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글로벌 질병퇴치기금」 사업 ② 일반회계의 「인도적 지원」 사업 ③ 일반회계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을 통하여 실시되어 왔음. 지원 대상 국제기

구는 UNITAID, GAVI, Global Fund, CEPI, GPEI 등임.

2025년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를 통하여서만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인도적 지원」 사업 내에 4,500만불(약 621억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에 4,000만불(55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인도적 지원」의 재난지원 예산은 본래 긴급재난과 만성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2022년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2022.5.12.) 계기로 우리나라가 ACT-A에 3년간 3억불 기여 공약을 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ACT-A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어 왔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ACT-A는 종료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글로벌 공중 보건위기 대응·강화’ 목적으로 4,500만불이 편성되었음.

<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현황 >

	2022	2023	2024	2025 예산	2026 예산안
기금 지원(백만원)	48,682	23,270	74,400		
일반회계(인도적 지원)	-	1억불	1억불	1억불	4,500만불
		(ACT-A)			
일반회계(백만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100,000	-	48,151	55,200

주: 2022~2024년은 결산, 2025년은 예산,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외교부)

글로벌 보건기구로의 상세 지원 내역을 보면, 3개의 사업에서 Gavi, Global Fund, UNICEF, Unitaid, CEPI 등 동일한 기구에 대하여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

동일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이 별개의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원 규모 파악이나 성과 관리의 어려움, 국제기구와의 협의 창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2~2025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내역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인도적지원 (ODA) (해외긴급구호) -일반회계	-	(ACT-A 연간 1억불)		
		○ Gavi 7,000만불 ○ UNICEF 2,000만불 ○ Unitaide 1,000만불	○ Gavi 5,000만불 ○ UNICEF 3,000만불 ○ Unitaide 1,700만불 ○ WHO 300만불	○ Gavi 5,000만불 ○ UNICEF 2,000만불 ○ Unitaide 1,500만불 ○ CEPI 1,000만불 ○ WHO 300만불 ○ MMV 100만불 ○ Stop-TB 100만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글로벌 보건기여) -일반회계	-	○ 글로벌펀드 5,000만불 ○ CEPI 2,400만불 ○ GPEI 350만불	-	○ 글로벌펀드 2,500만불 ○ CEPI 889만불 ○ GPEI 100만불
글로벌 (국제질병 퇴치사업) -질병퇴치 기금(폐지)	○ Gavi 1,032만불 ○ 글로벌펀드 824만불 ○ Unitaide 1,000만불 ○ CEPI 600만불	○ Gavi 498만불 ○ 글로벌펀드 800만불 ○ Unitaide 500만불	○ Gavi 118만불 ○ 글로벌펀드 2,500만불 ○ Unitaide 469만불 ○ CEPI 1,800만불 ○ GPEI 273만불	-
합계	질퇴기금 3,456만불	해외긴급구호 1억불 글로벌 보건기여 7,750만불 질퇴기금 1,798만불	해외긴급구호1억불 질퇴기금 5,160만불	해외긴급구호 1억불 글로벌 보건기여 3,489만불

(자료: 외교부)

따라서 2025년까지는 'ACT-A'라는 특수 소요에 따라 「인도적 지원」 사업에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관련 사항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으로 편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은 국제규범 수립, 국제법 법전화 등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남극·항공 관련 국제법적 대응 지속·강화를 통해 국제법 발전 및 국제규범질서 형성에 기여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5,993	6,673	6,310	6,523	6,523	6,774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5,993	6,673	6,310	6,523	6,523	6,774
		[40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5,993	6,673	6,310	6,523	6,523	6,774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65억 2,300만원) 대비 2억 5,100만원(3.8%)이 증액된 6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유는 국제법률기구 진출 관련 내내역사업 신설로서, 향후 우리 인사의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재판소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원 증액되었음.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은 독도 관련 제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격을 제고하며, 해양 및 남극 활동, 한일청구권 협정 대응, 한반도 주변수역 관리, 국제법률기구 진출, 조약 체결 지원 및 검독 강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것임.

< 2026년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6,310	6,523	6,774	251	3.8
영토주권 수호	4,554	5,142	5,144	2	0.04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039	978	1,218	240	24.5
조약 체결 지원 및 검독 강화	716	403	412	9	2.2

□ 국제법률기구 진출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신규 추진되는 ‘국제법률기구 진출’ 사업은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우리나라 법률전문가의 국제법 관련 기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026년도 관련 예산안은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제법률기구 진출 사업 소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 (내내역사업) 국제법률기구 진출	240	210
－ 국외업무여비(220-02)	210	170
－ 사업추진비(240-01)	30	30
－ 일반수용비(210-01)	－	10

동 사업은 분야별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재판소에 우리 인사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적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여 국제사회 내에서의 외교적 기반과 국익 반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외교부는 2026년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³⁸⁾ 재판관 선거 및 국제해저기구(ISA)³⁹⁾ 이사국 진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도에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선거 및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회(LTC) 위원 선거를 위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위 있는 유엔 기구·기관 중 우리나라가 아직 진출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기관으로, 재판관의 배출은 국제적 위상

38)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년 설립된 UN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UN 회원국 193개국이 당사국이며, 국가 간 법적 분쟁 해결(쟁송 사건) 및 유엔 기관과 여타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자문 제공(권고적 의견) 역할을 수행함. 재판소는 총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이 관행적으로 각 1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석은 지역별 안배 원칙에 따라 배분됨((임기 9년, 연임 가능, 3년마다 유엔총회·안보리에서 5명씩 선출).

39) 국제해저기구(ISA)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칙·규정·절차의 제정 및 채택을 담당함. ISA의 총회는 회원국 전체로 구성되며, 이사회 구성 시 총 5개 그룹(A~E)의 국가 명단을 작성하여 각 지역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도록 함(각 그룹별 회원국들은 공식 수만큼의 후보국을 지명하고, 총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사국 확정).

제고와 국익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또한, 국제해저기구(ISA)의 이사회는 동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핵심기구로, 우리나라는 현재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2026년 임기 만료에 맞추어 연임을 추진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통한 국익 증대와 해양자원 관련 국제정책 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기존에 외교부가 동일 세부사업에서 추진해 온 지지교섭 사업의 예산 수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3년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사업,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사업 등의 전례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 국제재판소 및 국제법기구 진출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국외업무 여비	사업 추진비	일반 수용비	일반 용역비	임차료	총계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218	38	44	-	-	300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147	26	44	23	1	240
2022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 선거 지지교섭	74	19	4	16	-	113
2021년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선거 지지교섭	117	9	-	-	-	126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과거 국제재판소 선거 교섭의 실질적 성과⁴⁰⁾와 국제법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단

40) 2023년 ITLOS 재판관 당선(1996년 ITLOS 설립 이래 3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 재판관 진출), 2023년 ICC 재판관 당선(2003년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 재판관 진출), 2021년 ILC 위원 당선(우리나라 3번째 위원 배출)

순한 선거 교섭 지원 성격을 넘어서 필요성이 있음.

향후에는 단기적 교섭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진출 인사의 역할과 활동 성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제법·외교정책과의 연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제법률기구 진출은 국가 위상과 외교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제인 만큼,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의원친선협회 등)의 원외교 및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프로그램 개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며 외국과의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24억 7,500만원) 대비 30억 8,600만원(13.7%) 증액된 25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31]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111	23,110	20,812	22,475	22,475	25,561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6,111	23,110	20,812	22,475	22,475	25,561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517	2,693	2,254	2,423	2,423	2,488
		[402]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5,272	2,470	2,338	2,346	2,346	1,789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189	16,103	14,429	15,754	15,754	18,857
		[404] 국민외교추진 기반구축	614	-	-	-	-	-
		[405] 디지털 공공외교	3,519	1,844	1,791	1,952	1,952	2,427

먼저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지식·정책을 활용한 재외공관 중심의 맞춤형 공공외교,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 및 국

민들의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이 31억 300만원 증액되었음.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운영 및 전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여형·쌍방향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전개를 통해, 전세계인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K-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이 4억 7,500만원 증액되었고,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교육·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체제 구축 및 재외공관을 예술품 전시 등 국가브랜드 거점으로 활용하는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예산이 6,500만원 증액되었음.

주된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때 10주년·25주년 등 양국간 수교 및 특별한 계기를 맞이하는 국가들과 종합적인 외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예산이 5억 5,700만원 감액되었음.

나. 공공외교 역량강화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은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지식 분야별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우리 국가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지식·정책 등 3개 분야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범부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 전략과 수행체제를 수립하며, 해외 친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외교 인프라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일반국민·지자체·재외동포·전문가그룹·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공공외교 참여 지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등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개발하며 차세대 공공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 공공외교」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57억 5,400만원) 대비 31억 300만원(19.7%) 증액된 18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 A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합 계	16,103	-	16,103	14,429	15,754	18,857	3,103	19.7
1. 콘텐츠 활용 공공 외교	13,521	-	13,521	12,109	12,285	13,809	1,524	12.4
2.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1,353	-	1,353	1,200	1,134	1,103	△31	△2.7
3. 국민 공공외교	1,229	-	1,229	1,121	2,335	3,945	1,610	69.0

「공공외교 역량강화」 각 내역사업별 주요사업 최근 3년간 예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예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구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콘텐츠 활용 공 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한국주간	6,133	5,598	6,618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구 K-business포럼)	420	300	300
	지식 공공외교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487	438	438
		퀴즈온코리아	424	382	486
	정책 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기반 구축	3,995	3,611	4,011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2,062	1,956	1,956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통합적 공공외교 매커니즘 운영		240	248	248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구 정책공공외교 협의체 운영)		640	460	455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473	426	400
국민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1,162	1,935	2,845

공공외교 (舊 국민 과 함께 하는 공 공외교)	외교부2030자문단 운영 ⁴¹⁾	67	(이관)	-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네트워크 사업 ⁴²⁾	-	400	400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신규)	-	-	700
합 계		16,103	15,754	18,857

(자료 : 외교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신설에 대한 타당성·중복성 및 기존 사업(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과의 통합 필요성 검토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00명을 파견하는 것과 별도로 지방청년인재 50명을 선발하여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련 예산으로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41) ‘외교부 2030자문단 운영’사업은 외교부 조직 개편(2024.5.)에 따라 2025년부터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이관됨. 청년들이 외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42) 2025년도 신규 사업인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네트워크 사업’은 공공문화외교국과 지역국 간 협의를 통해 우호증진 대상국을 매년 선정하고, 한국과 상대국 청년 각 20명을 「청년 드림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양국 협력 정책 제안, 대국민 홍보 등 상호 우호 증진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2025년 예산과 2026년 예산안 비교>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국민 공공 외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935	2,845 (910 증)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 1,935 ▪ 파견비용 1,820 - 체재비 1,620 (270만*6개월*100명) - 항공료 등 국외여비 200 (2백만원*100명) ▪ 파견 준비 15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킹 등) ▪ 선발 및 관리용역 등 100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 1,935 (좌 동)
			○ <u>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u> : <u>910</u> ▪ 파견비용 910 - 체재비 810 (270만*6개월*50명) - 항공료 등 국외여비 100 (2백만원*50명)

(자료 : 외교부)

동 사업은 지방 청년에게 외교업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교류·협력 역량을 배양하고, 재외공관 내 지자체 민생외교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지님. 특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6개국⁴³⁾ 등 지자체 국제교류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간 50명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예산 항목은 체재비 및 항공료 등 국외여비로 구성되며, 1인당 지원단가는 기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동일함.

43)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또한, 동 사업은 본래 「행정효율성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1-403)」 세 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지방민생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하위 내내역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공공문화외교국 소관 사업인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의 하위사업으로 편성되었음.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00명의 실습생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고 있음. 두 사업은 모두 청년 인재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외교 실무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업무범위·선발방식·운영부서 등이 상이함.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은 비수도권 청년을 중심으로 지자체 외교·국제협력 현장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방점을 두는 반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은 공공외교 및 국제업무 전반에 관심있는 전국 단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 시 비수도권 인재에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임.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VS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비교 >

구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13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설)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해외 공공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방 청년들에게 지자체 외교활동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자체 외교활동 활성화 · 지방청년의 지역인재로의 성장을 도와 지역 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업무범위	· 문화 공공외교(▲한국주간 ▲K-Pop World Festival, ▲공관장배 태권도 대회 등) · 지식 공공외교(▲퀴즈온코리아, ▲한국어·한국학 사업 등) · 정책 공공외교(▲공공외교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등) · 디지털 공공외교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의전 및 행사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 협조 업무(사증발급, 홍보, 간담회 등)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 조사 : 실습기간 내 지방경제·지방외교 관련 분야 보고서 또는 정책 제언 1건 이상 제출→지자체와 교차 검토하여 정책 반영 등에 참고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50명 내외(신규)
활동기간	파견일로부터 6개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는 자(졸업자 포함)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파견대상 공관	·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 (기본)재외공관 수요조사 · (우선 순위)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소재 공관(6개), 지자체 교류 업무 다발 국가
선발기준	< 서류 > · 어학 성적 · 가점부여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기회균등대상자, 사회다양성 대상자(비수도권인재 포함) · 공관 요청사항(컴퓨터 활용 능력, 현지어 구사 등), 자기소개서 등 고려 < 면접 > · 공공외교 이해도, 인성 및 기초소양, 업무 능력, 어학 능력, 현지 적응력 등 평가	지자체별 추천 인재 우선 선발(안) ○ 지자체별 지역 인재 양성 사업(RISE, 무역인재 양성 등)과 연계하여 우수수료자 대상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 - 참여·수료 청년 중 성적 우수자 등 추천 (14개 지자체별 3~5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신 인재 기준 등 공통기준은 외교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
지원내역	왕복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국·영문 수료증(장관명의)	(좌동)

(자료 : 외교부)

외교부는 두 사업이 파견 목적, 업무 범위, 선발 방식 등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함. 즉,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사업이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 세계 공관에 청년 인재를 파견하는 반면, 지방청년 인재 파견사업은 '지방외교 활성화 및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을 중점 목표로 하여 지방 청년이 지자체 관련 외교활동 현장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시 1차 서류심사 단계에서 비수도권 인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균형 차원의 보완 조치일 뿐, 지원 자격을 지역으로 한정하지는 않음. 반면 지방청년인재 파견 사업은 지원 대상을 지방 청년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 인재의 해외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별도 취지를 가진다고 강조함. 따라서 두 사업은 대상과 목적, 운영체계 측면에서 구분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구조를 비교해보면, 재외공관의 업무 특성상 공공외교·정무·경제·영사 등 기능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공공외교 외의 분야'만을 실습 대상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비효율적임.

따라서 외교부가 제시한 '공공외교를 제외한 여타 분야 경험 제공'이라는 구분은 실질적인 차별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

또한 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동일한 재외공관 내에 '공공외교 실습원'과 '지방청년 실습생'이 병존하게 되어, 파견인력의 관리·지원 업무가

이중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행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서 통합적 사고와 업무 간 유기적 연계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실습기회를 사업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방청년인재라 해서 지역외교 분야로만 한정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 기회의 폭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임. 오히려 관련 실습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외교분야(공공외교, 경제외교, 지역외교 등)를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자 입장에서, 행정효율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결국 지방청년에게 외교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외교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러한 이원적 운영은 단순히 관리상의 비효율을 넘어, 실습제도의 목적 자체를 분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신규사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2026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국민 공공 외교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	700 (700 순증)	
			○ 국민 공공외교 포럼 개최 2회	200
			○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 2회	300
			○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0

‘국민 공공외교 포럼’은 K-이니셔티브 실현과 K-컬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민의 외교 참여를 촉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26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이 편성됨. 국내외 전문가, NGO,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지역 순회 및 (신설될) 국민 공공외교 플랫폼 연계를 통해 참여와 성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은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26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이 편성됨. 글로벌 의제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행사·캠페인·공동연구 등을 공모·시행하고, 결과를 (신설될) 국민 공공외교 플랫폼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외교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6~2027년 개념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억원이 편성되었음. 가칭 ‘위디플(Wediplomacy) 플

랫폼'을 통해 공공외교 정보 제공, 사업 관리 및 민관 협업 지원, 역량 강화 콘텐츠 제공, 소통 기능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공공외교 참여 기반을 온라인상에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외교부는 「공공외교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기반 강화를 위해 세부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내역사업으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하위 내역사업으로 '통합적 공공외교 매커니즘 운영'을 시행 중임.

이 사업에는 공공외교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공공외교 관계기관 협의, 정책연구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중앙정부/지자체/재외공관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⁴⁴⁾'과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민·관의 자발적 공공외교 활동을 발굴·시상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026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공공 외교 인프라 구축	통합적 공공외교 매커니즘 운영 中	○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140	○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중앙정부/지자체/재외공관 공공외교 우수 사례 발굴 (1회 × 40백만원)	40	(좌 동)
		-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1회 × 100백만원)	100	

(자료 : 외교부)

44) 「공공외교법」에 따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재외공관 등 부문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대외홍보와 기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와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지자체/재외공관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최근 3년간 집행내역 >

연도	내용	금액(원)
2022	심사위원 사례비	1,200,000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20,000,000
2023	심사위원 사례비	1,600,000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20,000,000
2024	상장 및 위촉장 인쇄	399,300
	동영상 영문 감수	1,500,000
	심사위원 사례비	1,200,000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15,000,000
2025	(4분기 집행 예정)	

(자료 : 외교부)

<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⁴⁵⁾ 최근 3년간 집행내역 >

연도	내용	금액(원)
2022	해당 없음(2023년부터 실시)	-
2023	공모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750,000
	공모전 용역계약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30,000
	공모전 용역비	70,906,000
	공모전 광고용역	23,622,300
	합계	95,308,300
2024	공모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1,000,000
	용역 제안서 평가회의 다과 및 음료 구입	314,930
	공모전 용역계약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30,000
	공모전 용역비	72,534,000
	공모전 광고용역	30,308,910
	합계	104,187,840

45) 민간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외교 사례를 접수, 우수작을 선정,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공공외교 주체의 외연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창출/ 2회차부터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명칭 변경

2025	공모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1,000,000
	공모전 용역계약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30,000
	공모전 광고용역	15,192,000
	공모전 용역비	4분기 집행 예정

(자료 :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함으로써 민간 공공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과 국민을 주체로 한 공공외교 활동을 공모·선정·홍보하는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외교부는 신규 편성된 사업은 국민들이 공공외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국민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점과 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민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가칭 '위디플') 구축, 기존 인프라 개선·활용 방안 검토 필요

외교부는 국민의 직접 참여형 공공외교 기반 조성과 관련 정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민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가칭 '위디플', Wediplomacy Platform)' 구축비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편성하였음.

동 플랫폼은 국가·지역별 공공외교 정보 제공(지도형 인터페이스), 국민 공공외교 사업 목록 및 진행과정 확인(공모사업 대시보드), 민관 협업 창구 운영, 역량강화 콘텐츠 제공 등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라고 함.

한편,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관련 정보와 자원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국민의 접근성과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관 단위로 개별 플랫폼을 중복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이용자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공외교는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분절된 다수 플랫폼보다 통합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외교부가 신규 구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시스템⁴⁶⁾과의 목적·이용 대상·성격 차이로 통합이 어려운 경우,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46) 기존 공공외교 관련 플랫폼

기존에 구축한 사이트의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우, 동일 플랫폼 내에서 ‘수요기관 관리자용’과 ‘업체·일반회원용’ 인터페이스를 분리·병존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플랫폼 역시 이러한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능을 추가·확장하고 ‘기관 전용 포털’과 ‘대국민 참여 포털’을 분리·연동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이용자 분산을 방지하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개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디지털 공공외교

「디지털 공공외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대중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K-이니셔티브 실현 등 주요 외교 방향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세부사업은 KOREAZ 채널 중심의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과 재외공관 협업형 캠페인인 ‘디지털

운영주체	시스템명	내용	비고
외교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정부기관 간 공공외교 관련 정보 공유	2020년 구축 일반인 접속 불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국민 대상 공공외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021년 구축 대국민용

털 글로벌 캠페인 공공외교'로 구성됨.

KOREAZ 채널에 소개되는 다양한 영문 콘텐츠 및 전 재외공관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9억 5,200만원) 대비 4억 7,500만원(24.3%) 증액된 2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 안 (B)	증감 (B-A)	증감율 (B-A)/ A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합 계	1,844	1,844	1,791	1,952	2,427	475	24.3
1.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1,239	1,239	1,200	1,439	1,737	298	20.7
2.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공공외교	605	605	591	513	690	177	34.5

* (구)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 「KOREAZ」 채널의 구독자 증가세 지속 및 콘텐츠 생산성 강화 필요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사업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인 「KOREAZ」⁴⁷⁾ 운영을 통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지식·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작년 대비 2억 9,800만원 증액된 1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 사유는 콘텐츠 품질 향상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단가상승, 4개 플랫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의 주기적 생산 필요, 그리고 중·러 등 SNS 환경이 다른 주요국 대상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확대 필요에 따른 것임.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교부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전문용역업체⁴⁸⁾계약 현황 >

연도	계약업체명	수행인력
2021	컨소시움(피알원, 씨제이이엔엠, 니트커뮤니케이션즈) (주)문화방송 (주)인터즈 (주)디노마드 연세대학교	38명
2022	(주)디지털조선일보 (주)한국교육방송공사 (주)인터즈 (주)더에스엠씨그룹	34명

47) '21년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4개 플랫폼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Korea A to Z)'을 의미함. 2025.8.21.기준 구독자 수는 100.1만임.

48)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일반용역(210-14)은 2023년까지 프로젝트별로 5~6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예산 대폭 삭감과 채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1개 업체와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주)매일방송 (주)브랜뉴뮤직	
2023	(주)디지털조선일보 (주)제이레퍼토리 (주)해긴 (주)매일방송 (주)클레온	40명
2024	(주)문화방송	12명
2025	(주)문화방송	12명

*(구)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자료 : 외교부)

외교부는 공공외교의 주요 홍보 창구로서 영문 SNS 채널 「KOREAZ」를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별 구독자 수와 콘텐츠 제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운영 현황 >

채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말 기준	
	구독자 수	콘텐츠 수	구독자 수	콘텐츠 수	구독자 수	콘텐츠 수	구독자 수	콘텐츠 수	구독자 수	콘텐츠 수
유튜브	19,244	248	47,085	306	136,773	312	290,119	183	507,873	220
페이스북	215,919	475	302,828	584	352,173	368	394,364	245	499,642	257
인스타그램	17,126	458	33,401	561	52,813	334	61,031	200	71,709	263
X	14,442	612	19,802	542	28,228	366	23,951	233	23,132	257

(자료 : 외교부)

이처럼 구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콘텐츠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

적으로 확대하여 구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채널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강화, 해외위난상황 대비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각종 매체를 통한 최신 해외안전정보 전달 등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955	15,744	12,711	14,679	14,679	14,790
	[273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468	15,744	12,711	14,679	14,679	14,790
		[401] 재외국민 보호	12,468	15,510	12,117	13,959	13,959	13,920
		[402] 영사서비스 지원	487	234	594	720	720	870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146억 7,900만원) 대비 1억 1,100만원(0.75%) 증액된 14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영사협력원 운영 사업(4억 1,500만원),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사업(3,700만원), 영사서비스 물품(사증업무용 여권판독기)

구매·보급 사업(3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무자력자 긴급 지원 사업(1억원),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사업(1억 4,700만원),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전자결제 수수료 지원 및 확대 사업(2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나.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외에 「해외위난상황 대비 역량 강화」,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등 총 4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도 예산안은 전년도(139억 5,900만원) 대비 3,900만원(△0.3%)이 감액된 13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국민 보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합 계	12,117	13,959	13,920	△39	△0.3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3,884	4,216	4,407	191	4.5
해외위난상황 대비 역량 강화	1,806	2,546	2,492	△54	△2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4,500	5,680	5,651	△29	△0.5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1,926	1,517	1,370	△147	△9

□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사업 내 내내역사업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진단 수행 및 분석, 영사회의 방문특강, 해외공관 방문 상담을 통한 고위험군 케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재외공관의 해외안전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500만원(△10%) 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22년 2억원 대비 약 32.5%가 감소한 수준임.

<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	200	200	200	150	135

(자료: 외교부)

2024년도 사업 위탁 수행기관의 최종 운영보고서⁴⁹⁾에 따르면,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직원 상당수가 가족과의 원거리 거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현지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갈등, 트라우마성 사건

49) 외교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복지 마음센터 전문기관인 (주)이지앤웰니스에서 작성함.

경험 후 심리적 후유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담 수요가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조직 단위의 심리케어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트라우마 발현 사고가 발생한 공관의 경우 전 직원이 심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상담 인력 및 방문 횟수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가족 동반 상담 지원, 고위험군 공관 중심의 장기 파견상담 프로그램, 조직단위 집단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상담 지원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심리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외공관 근무 인력이 겪는 업무적·심리적 부담이 심화되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예산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사업 실적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문가 심리상담 케어	47명(151회)	56명(212회)	52명(252회)
지역별 영사담당 회의 계기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49명	116명	44명
고위험군 케어	267명(91회)	155명(69회)	221명(95회)
공관 맞춤형 상담 /강의 프로그램	-	-	74명(10회)

※2025년의 경우, 10월말 기준 52명(202회)에 대해 전문가 심리상담 케어를 시행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전문기관이 제시한 종합적 지원방향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외공관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 시 외교 인력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모전 시상금 집행의 비목 적정성 확보 필요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은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사업 내 내내역사업인 ‘해외안전여행 대국민 홍보’의 세부 추진과제로,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를 경험한 국민의 사례를 공유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취지와 영사조력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음.

동 사업은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이 공동 주관하며, 공모전 홍보, 접수 및 심사, 시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해당 공모전 예산은 일반용역비 2,200만원으로 배정되어 이 중 약 820만원이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집행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도 2,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시상금 규모 역시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5년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 내역 >

구 분	대상 (1명)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2명)
상금 (응모분야) ※ 총 820만원	200만원 (수기)	100만원(동영상) 100만원(인스타툰) 50만원(수기)	50만원(동영상) 50만원(인스타툰) 25만원(수기)	25만원(동영상) 25만원(인스타툰) 10만원(수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금 또는 격려금은 ‘포상금(310-03목)’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 사업의 시상금은 일반용역비 내에서 지급되고 있어 예산 비목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외교부 또한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포상금 1,000만 원을 별도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외교부는 향후 포상금 항목으로의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전 포상 외에도 항공권 또는 부상 지급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이와 같이 공모전의 시상금이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것은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공모전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해외안전 인식 제고에 있는 만큼, 공익적 행위에 대한 포상 성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포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포상금 항목 신설을 통해 예산 비목을 정비하고, 금전 포상 외에도 수상작의 홍보 활용, 체험공유 프로그램 연계 등 비재정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 여권업무 선진화

가. 프로그램 개요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우리 여권의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로 국제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국민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1,238억 9,300만원) 대비 151억 8,400만원(12.3%)이 증액된 1,39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권 예상발급량('25년 398만권→'26년 438만권)에 따른 여권 제조 및 발급비용 증가(151억 3,000만원), 실무관 인건비 증가(5,400만원)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51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900]	여권업무 선진화		109,482	141,030	158,899	123,893	123,893	139,077
	[193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58,899	123,893	123,893	139,077
		[65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58,899	123,893	123,893	139,077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은 여권제조·발급업무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⁵⁰) 운영, 국내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16개 출장소 및 국외 187개 재외공관 여권민원실 운영,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1,238억 9,300만원) 대비 151억 8,400만원(12.3%)이 증액된 1,39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합계	158,899	123,893	123,893	139,077	15,184	12.3
여권 제조 및 발급	150,639	115,549	115,549	130,679	15,130	13.1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478	7,612	7,612	7,666	54	0.7
전자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782	732	732	732	-	-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 예산 증액 검토 필요

외교부는 대국민 여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16개 출장소 및 국외 187개 재외공관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역 사업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7% 증액된 76억 6,600만원임.

50)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Passport Information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실무관 인건비	731	785	54
대행기관 국고보조	5,610	5,610	-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운영	559	559	-
대행기관 출장소 설치	23	23	-
국내외 여권업무 행정지원	689	689	-
합 계	7,612	7,666	54

(자료: 외교부)

김해공항은 영남권의 주요 관문공항으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김해공항 내 긴급여권 발급 등을 위한 여권민원센터 신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전국 주요 공항 이용객 수*(국제선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인천공항	11,955,756	3,189,589	17,823,783	55,763,768	70,669,246	48,855,539
김해공항	1,153,504	20,142	1,161,872	6,521,513	9,005,803	6,718,916
김포공항	543,863	14,890	375,676	3,215,907	3,937,089	2,865,349
제주공항	282,798	4,781	93,912	1,195,005	2,447,610	2,008,895
청주공항	48,111	0	2,550	522,033	1,468,685	1,131,934
대구공항	229,061	6,244	92,680	1,115,003	1,406,122	990,693
양양공항	14,718	0	28,507	55,587	17,910	10,060
무안공항	87,884	0	29,394	233,337	356,403	0

* 출처: 한국공항·인천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 외교부)

인천공항의 경우 여권 분실·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여권민원센터⁵¹⁾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여권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김해공항에는 여권민원센터가 부재하여 민원인이 긴급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선 청사로부터 각각 18km, 7.6km 떨어진 부산광역시청이나 강서구청을 방문해야 함. 게다가 이들 기관은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여행객이 집중되는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사실상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주요 발급장소별 긴급여권 발급량 연도별 추이 >

(단위 : 건)

순위	발급장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1	인천공항	3,331	382	3,728	13,339	14,738	9,818
2	부산광역시청	15	14	352	2,129	1,478	1,004
3	인천광역시청	1	12	225	2,084	1,520	822
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0	9	186	1,429	1,317	858
5	대구광역시청	5	16	200	1,629	1,019	650

(자료: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사유는 주로 기간만료, 분실·도난, 미소지 등으로, 공항 이용객 수 증가에 비례하여 긴급여권 발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부산광역시청과 강서구청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최근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

51)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현황

구분	위치	근무인원	업무	업무시간
제1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	무기계약직 4인	긴급여권 발급,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신고	9시~18시 (토·일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제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무기계약직 5인		9시~18시 (연중무휴)

거주자들의 긴급여권 관련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은 영남권 공항 이용객의 긴급여권 발급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말·공휴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 효과가 기대되므로, 외교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⁵²⁾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2) 외교부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을 위해 3억 7,300만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출근거)

- 공무직 4인 인건비 1억 7,700만원(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 임차료 7,000만원
- 자산취득비 6,000만원
- 운영비 3,0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3,600만원

※ 참고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3. 경제외교

가. 프로그램 개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 제고와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125억 6,600만원) 대비 993억 7,200만원이 감액(88.3%)된 13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경제외교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10,463	12,860	11,171	112,566	129,841	13,194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612	4,562	3,875	103,257	120,532	2,976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166	1,395	1,293	1,557	1,557	1,147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446	707	518	870	870	1,507
		[403] 2025 APEC 의장국	-	2,460	2,064	100,830	118,105	322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8,851	8,298	7,296	9,309	9,309	10,218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763	5,381	4,515	6,549	6,549	6,982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088	2,917	2,781	2,760	2,760	3,236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사업 중 「주오이시디대표부 사업」 예산이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 중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예산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억 8,100만원,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 중 「미국 경제동향대응」 사업 예산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모니터링과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4억 7,600만원 증액되었음.

한편,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사업 중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사업 예산이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실 해체 및 APEC 성과물 관련 일반용역비 및 정책연구비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6,200만원 감액되었고, 「2025 APEC 의장국」 사업 예산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행사 종료에 따라 1,005억 800만원 감액되었음.

나.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양자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경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65억 4,900만원) 대비 4억 3,300만원(6.6%)이 증액된 6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예산안⁵³⁾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합계	4,515	6,549	6,549	6,982	433	6.61
유럽경제동향대응	576	524	524	524	0	0.00
경제협력사절단 파견	18	12	12	8	△4	△33.33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437	411	411	380	△31	△7.54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450	509	509	1,090	581	114.15
전략국가와의 경제외교강화	112	204	204	204	0	0.00
중국 경제동향대응	292	346	346	346	0	0.00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회복력 강화 협력	132	154	154	104	△50	△32.47
수입규제 대응체제	354	375	372	365	△10	△2.67
북미 경제외교 강화	273.5	333	333	318	△15	△4.50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1,870	1,985	1,988	1,985	0	0.00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	1,398	1,398	1,310	△88	△6.29
에너지 및 광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	297	298	348	51	17.17

53) 2025년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 중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및 ‘에너지 및 광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외교부 조직개편(‘24.5.28.)으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에너지과학외교과가 폐지되고 양자경제외교국 경제안보외교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과학외교과 내역사업 중 일부 내내역사업을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이관한 것이 반영된 사업임.

□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의 우회적 증액 지양 필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은 중국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정례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양국 간 우호 친선 및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억 8,100만원(114.15%)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509	509	1,090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351	351 =35.1백만원x10개공관	1,090 =109백만원x10개공관
- 한중 우호주간 행사	158	158 =79백만원x2회	-
○ 비목합계	509	509	1,090
- 일용임금(110-04)	6	6	-
- 일반수용비(210-01)	158	158	302.5
- 임차료(210-07)	133	133	304
- 국외업무여비(220-02)	106	106	172
- 업무추진비(240-01)	106	106	311.5

(자료: 외교부)

동 내역사업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과 ‘한중 우호주간 행사’ 두 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교부는 2026년도에 ‘한중 우호주간 행

사'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7억 3,900만원 (210.5%) 증액하여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와 한중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우호주간 행사가 중국 정부 결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 향후 재개 시 '내수시장' 항목에서 집행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런데, 세부사업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은 2022년 및 2023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⁵⁴⁾에서 내역사업 간 중복성이 지적되어 예산이 감액된 이력이 있음.

즉,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한중 기업교류 강화」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나아가 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⁵⁵⁾과의 중복성도 지적되어, 2024년도에 「한중 기업교류 강화」 사업을 폐지한 바 있음.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대상 공관에 공관별 예산액이 3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감액사업을 우회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54)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2.10., 148면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3.8. 137면

55)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3032-402)-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강화

다.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및 우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및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7억 6,000만원) 대비 4억 7,600만원(17.25%)이 증액된 3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합계	2,781	2,760	2,760	3,236	476	17.25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	1,497	1,500	1,500	1,517	17	1.13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	271	309	309	292	△17	△5.50
미국 경제동향 대응	1,013	951	951	1,427	476	50.05

□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예산 운용의 실효성 강화 필요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은 미국 내 경제안보 관련 입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문회사를 통해 미국의 경제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통해 한국인 전문직 인력의 해외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9억

5,100만원) 대비 4억 7,600만원(50.05%)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는 2012년 이래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비자(E-4) 쿼터 15,000개 확보를 목표로 미 의회 내 ‘한국동반자법 「Partner with Korea Act」’의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단독법안 발의⁵⁶⁾와 함께 美 통합이민법안, 국방수권법(NDAA) 등 주요 법안에 포함하여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지지의원 확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회사명	활동 내용
2020	654	650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2021	724	682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및 우리 전문 인력의 對美 진출 현황 추가조사
2022	724	747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2023	724	712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2024	1,014	1,013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DGA Group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 대상 아웃리치
			Mercury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 대상 아웃리치
2025	952	943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BGR Group	관세 등 한미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자문

(자료: 외교부)

56) 우리전문인력에 대한 연 최대 15,000개 취업비자 부여가 골자

정부는 미 의회 회기마다 한국계 또는 친한(親韓) 의원과 협력하여 동 법안을 지속하여 발의 중이나,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 反이민 정서 강화 및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비자 관련 사안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발의의원 현황>

구 분	발의 의원수		
113대 (2013-14)	118명	하원	112명 (공화 58, 민주 54)
		상원	6명 (공화 4, 민주 2)
114대 (2015-16)	87명	하원	81명 (공화 33, 민주 48)
		상원	6명 (공화 3, 민주 3)
115대 (2017-18)	84명	하원	81명 (공화 37, 민주 44)
		상원	3명 (공화 2, 민주 1)
116대 (2019-2020)	55명	하원	53명 (공화 21, 민주 32)
		상원	2명 (공화1, 민주 1)
117대 (2021~2022)	54명	하원	42명(공화1, 민주2)
		상원	3명(공화1, 민주2)
118대 (2013-2024)	45명	하원	42명(공화11, 민주31)
		상원	3명(공화2, 민주1)
119대 (2024-2025)	6명*	하원	6명(공화3, 민주3)
		상원	상금(10.15.) 미발의

* 하원에서 7월 23일에 공동발의(Young kim의원, Sydney Dove 의원) 된 후 현재 공동발의자 추가 모집 중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전방위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미국 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유연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나, 실제로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14억 2,700만원은 모두 자문회사 용역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저조한 성과가 외교부 예·결산 심의 과정 및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예산 증액분을 여전히 로비·자문에 반복투입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고율 관세 부과, 이민 규제 강화, 자국 내 제조업 유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는 외교적 설득만으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는 기존의 로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의, 주정부·의회 네트워크, 한미 산업계 및 교민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 예산 투입의 반복보다는, 변화된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다층적·입체적 접근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전문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⁵⁷⁾

57)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자문 예산 비중 축소 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 및 입법 모니터링 및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므로, 현재 신규 내부사업으로 국회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함.

-(내역사업명) 미국진출우리기업활동지원

-(상세내용)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력, ▲우리기업 대상 비자 설명회, ▲비자 안내자료 발간, ▲미국 의회 대상 설명회 개최, ▲미측 주요인사 및 현지진출 우리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14.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프로그램 개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미국, EU 등 주요 과학 기술 선도국과 신흥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국제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AI, 우주, 퀀텀⁵⁸⁾,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Post-2020 신기후체제 이행 협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양자 및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녹색성장 및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환경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다자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⁵⁹⁾과 1개의 세부사업⁶⁰⁾으로 구성됨.

2026년도에는 전년도(26억 9,800만원)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27억 2,100만원(0.9%)이 편성되었음.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9,806	-	11,187	10,386	2,698	2,721	23	0.9

58) 양자(Quantu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

59) 에너지 외교 및 기후변화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60)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는 첨단·핵심·신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강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정립·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B-A)	증감률 (B-A)/A
	결산	본예산 (A)	예산안 (B)		
합 계	9,806	2,698	2,721	23	0.9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⁶¹⁾	1,355	(이관)		-	-
에너지 및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⁶²⁾	494	(이관)		-	-
과학기술외교강화	909	1,317	1,307	△10	0.7
기후변화외교강화	416	855	922	67	7.8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55	145	108	△37	25.5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⁶³⁾	7,053	270	270	-	-
북극 국제협력 강화	104	110	114	4	3.6

(자료 : 외교부)

61) 외교부 조직 개편(2024.5.)에 따라,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사업 중 원전수출 지원공관 업무는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 관련 업무는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이관됨.

62)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이관

63) 2024년 단년도 사업인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음. 이 협상 위원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국제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부산 회의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 기후·에너지·과학기술 분야 외교의 집행률 제고를 통한 사업 실효성 강화 필요

기후·에너지·과학기술 외교 분야는 외교부 내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전략 분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전환과 과학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의 각 내역사업별 집행률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의 각 내역사업별 집행률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2022		2023		2024		2025 (9월말 기준)		26년 예산안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과학기술 외교강화	367	57.5	1,059	60.8	909	82.4	714	54.2	1,307
기후변화 외교강화	603	87.1	876	83.2	416	91.6	609	71.2	922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108	77.1	131	86.2	55	76.4	67	45.9	108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289	79.6	291	71.1	7,053	96.6	172	67.7	270
북극 국제협력 강화	73	59.8	123	74.5	104	81.9	77	70.0	114
연도별 평균 집행률		72.22		75.16		85.78			

(자료: 외교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각 내역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7.3%이며, 특히 「과학기술 외교강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북극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서 불용이 크게 발생함.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전문관 채용 절차 지연이나 국제행사 일정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집행공백이 발생하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사업 역시 국제회의의 회차 개최로 집행액이 줄었으며, 「북극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러시아의 의장국 역할 중단으로 관련 다자외교가 위축되면서 실적 확보가 어려웠음.

또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례에서도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계획의 불충분으로 인한 집행 한계가 확인됨. 2023년 기준 회의는 14회 개최되었으나, 예산 집행률은 6%에 불과함. 이는 회의 일정·운영 범위·소요 예산 등이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집행률 및 세부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개최 횟수(회)	
				전체회의	분과회의(64)
2023	83	5.9	7	2	14
2024	10	9.8	98	-	10
2025. 9월 말	42	2.7	6	-	7
2026 예산안	12			3(계획)	

(자료: 외교부)

64) 과기외교정책,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 기후변화·탄소중립, 우주, 바이오, 원자력, 사이버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연도마다 변동폭이 크며, 이는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침. 2026년도 예산안 또한 전년 대비 급감하였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일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의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 공조’ 내내역사업 증액⁶⁵⁾으로 인해 내내역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함.

이러한 변동은 세부 내역사업 간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 수립 시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차원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기후·에너지·과학기술 외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성과’간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외교부는 각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을 높이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하는 등 집행률 개선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기능 강화 필요

기후에너지협력센터(Climate Energy Cooperation Center, CECC)는 2024년 5월 조직 개편 이후 기후변화외교과에 신규 편입된 기관으로, 현재 연 구원 4명만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인력은 없음. 동 센터는 당초 ‘글로벌

65) AI, 우주, 원전, 바이오 등 신기술·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규범 논의 선도와 국제협력 주도, 우리 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공조’ 내내역사업이 증액됨.

별에너지협력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외교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자 개편된 조직임.

기후·에너지 연계협력의 외교적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나, 공식 홈페이지의 센터 소개 및 주요활동 문구⁶⁶⁾는 여전히 과거 '에
너지외교·기업지원 중심'의 내용에 머물러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녹색전환' 등 개편 취지를 반영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최근 몇 년간 발간된 주요 간행물⁶⁷⁾이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저
널',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등 에너지 중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2024년 9월 이후 매월 '기후·에너지 포커스'를 발간(총 15건)해 왔으
나, 향후 정책뉴스레터 형태 외 공식 정기간행물 발간 등 기후분야 연구

66) [센터 소개]

기후에너지협력센터(CECC)는

- **재외공관과 에너지 기업간의 가교역할 수행** : 재외공관의 축적된 에너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사업진출을 지원합니다.
- **기업을 찾아가는 쌍방향 에너지협력외교 구현** : 기업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주요활동]

1.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입찰정보,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원전동향 등을 관련 협회와 기업, 유관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쌍방향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재외공관으로부터 입수한 에너지 인맥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의 에너지 관련 유력인사 또는 재외동포인사 정보를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 및 협회와 공유합니다.
3.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정보를 '국제에너지자원동향'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에너지정보책자 등을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67) 정기간행물 발간 실적(2025. 9월 말 기준)

2022	2023	2024
○ 제15호 글로벌 에너지협력외교 저널 ○ 2022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 제16호 글로벌 에너지협력외교 저널	○ 2024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및 정책 협력 확장 검토가 필요함.

향후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연계한 외교 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정책 발굴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외 홍보 및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시적 성과 창출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15.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프로그램 개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전략과 중장기 외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회의를 통해 외교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사업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은 국립외교원 소관 사업이며, 「외교전략 수립」은 외교부 조직 개편(2024.5.28.)⁶⁸⁾으로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내 ‘외교전략기획국’과 ‘외교정보기획국’ 소관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49억 4,500만원) 대비 10억 1,700만원(6.8%) 증액된 15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641	15,964	13,057	14,945	14,945	15,962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1,456	13,051	11,102	12,388	12,388	12,831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793	3,498	2,880	3,304	3,304	3,271
		[402] 국내외 교육훈련	6,723	7,433	6,252	7,132	7,132	7,231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94	463	427	417	417	417

6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24.5.28.)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	본부장, 본부장 밑에 정책관 등 2명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87	414	400	393	393	393
		[405]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904	1,059	970	959	959	1,038
		[407]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55	184	173	183	183	481
	[3532]	외교전략 수립	1,185	2,913	1,955	2,557	2,557	3,131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185	1,067	780	1,067	1,067	949
		[402]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	846	389	100	100	-
		[403]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	1,000	786	1,390	1,390	1,332
		[405] 지역전략수립 및 이행(신규)	-	-	-	-	-	850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의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으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은 국외연수 체재비, 현지어학습비 등 9,900만원,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은 교육생 재외공관 현장실습 경비 등 7,900만원 증액됨.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은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비 등 3,300만원이 감액됨.

또한, 「외교전략 수립」 단위사업 내에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전략수립 및 이행」 사업은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울러,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은 전년 대비 5,800만원 감액된 1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은 우리 국민들의 외교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외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외교 정책 및 정세에 관한 강의와 실제 외교 사례 체험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억 8,300만원) 대비 2억 9,800만원(162.8%) 증액된 4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3531-403]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55	184	-	173	183	481
· 국민외교아카데미교육과정 운영 ⁶⁹⁾	56	20	-	20	19	19
· 국민외교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지원 ⁷⁰⁾	199	164	-	153	164	164
· 국민외교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 개발(신규)	-				-	298

☐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외교 역량 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학사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필요

국립외교원은 2020년 ‘국민외교타운’ 출범에 이어 2021년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축적한 외교 지식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69) 강사비, 교육자재 구입비 등

70)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지원 용역비,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활동비, 전담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등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립외교원만의 특색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임.

동 사업은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석·박사연구자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각 과정별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음.

< 국민외교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자격 요건)	신청자 수(명)		수강생 71) 수(명)	비고 (과정)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고등학생	2021	281	165	총 8회
		2022	213	133	
		2023	205	165	
		2024	151	100	
		2025.9월말 기준	167	105	
대학생 외교 연수과정	대학생	2021	354	111	총 10회
		2022	228	87	
		2023	182	94	
		2024	136	50	
		2025.9월말 기준	168	50	
미래 지도자 과정*	대학원생 (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	2021	-	-	총 10회
		2022	-	-	
		2023	-	-	
		2024	68	49	
		2025.9월말 기준	46	39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2021	-	-	2회차 과정 (상·하반기 반복운영)
		2022	-	-	
		2023	-	-	
		2024	231	229	
		2025.9월말 기준 ※ 하반기과정 준비중	66	58	
대국민 특강	국민 전체	2021	91	70	비정기
		2022	94	94	
		2023	297	103	
		2024	227	150	
		2025.9월말 기준	109	108	

* <미래지도자 과정> 및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2024년부터 신설
(자료: 국립외교원)

71) 수강생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구비 성실성, △과정 참여 의의 열의 및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함.

국립외교원은 국립외교원 공식 홈페이지,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직원용 교육훈련관리시스템(e-KNDA, 일반인 접근 불가) 및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등 총 4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 중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관련 소개와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외교부 및 재외공관 직원용 교육훈련관리시스템(e-KNDA)과는 구분됨.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액은 국립외교원 공식 홈페이지,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e-KNDA 등 3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하였음.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2년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신규 개설되었으며,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유료 유지보수로 전환되면서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음. 동시에 2023년부터는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립외교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가 외교부의 '외교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에 포함되었음.

< 국립외교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예산액 및 집행액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0	162	160	
2021	150	147	
2022	150	148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구축, 1년간 무료 유지보수
2023	220	202	외교부 외교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에 포함됨. 통합유지보수사업 전체 예산 중 국립외교원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유지보수요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보수대상 포함에 따라 유지보수 총액 증가
2024	276	207	

(자료 : 국립외교원)

한편, 국립외교원은 2013년부터 외교부 내 역량평가, 국외연수, 외국어능력 검정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시스템(e-KNDA)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구축 이후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아 심각한 노후화 상태⁷²⁾임.

< 국립외교원 학사관리시스템(e-KNDA) 연혁 >

연도	추진 경위
2012	국립외교원 출범
2013	학사관리시스템 e-KNDA* 구축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예산 약 15억 원) * ①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등의 학사관리 ② 외교부 직원 국외 연수 및 외국어 검정 ③ 역량 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을 위한 학사 통합 관리 시스템
202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노후 교체 대상 시스템' 분류

(자료 : 국립외교원)

72) 국립외교원 학사관리시스템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정부의 주요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당 시스템 장비의 내용연수(7년)가 이미 경과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하여 불안정, 용량 과부하, 외부 바이러스 공격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20년 이후 매년 노후장비 교체를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존 학사관리시스템(e-KNDA)의 용량이 부족하여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엑셀을 활용한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⁷³⁾.

이에 따라 국립외교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민외교아카데미 학사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 항목으로 2억 9,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국민외교아카데미 강의 전반의 효율·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학사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립외교원 학사관리시스템(e-KNDA)’을 활용하여 국민외교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을 추가하고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함.

당초 국립외교원은 시스템 구축 소요액을 약 4억원으로 산출⁷⁴⁾하여 정부안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2억 9,800만원으로 삭감된바,

수강생 종합평가,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핵심 기능의 미탑재로 시스템 효율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수강생의 학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미비할 경우, 수기 업무 지속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 등 운영상 비

73) 연간 약 6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수강생 및 강사 관리, 출석관리, 교육이력(참가확인서, 수료증, 상장 등) 관리 등 학사관리 전반을 모두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7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개발용역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구성

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립외교원은 핵심 기능을 우선 구현하고 시스템 설계의 확장성을 확보하여 국민외교아카데미의 교육 운영의 체계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라.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은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⁷⁵⁾를 기반으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우방국의 외교정보기관과 유사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공관 등으로부터 외교정보를 보다 신속·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배포·활용하는 등 외교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3억 9,000만원) 대비 5,800만원(△58%) 감액된 1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한미 외교정보 동맹 체계 구축」이 전년도 대비 2천 700만원 감액된 3억 6,400만원, 「선진 우방국가와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전년도 대비 3천 700만원 감액된 2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이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된 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75) 美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의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2024.6.24.)로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 마련

< 2026년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000	-	1,005	786	1,390	1,332	△58	△4.2%
· 한미 외교정보 동맹체계 구축	391	-	381	323	391	364	△27	△7%
·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	333	-	338	245	723	729	6	1%
· 선진 우방국가와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276	-	286	218	276	239	△37	△13%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의 집행을 제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성과 강화 필요

외교부는 외교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 개편(2024.5.)을 통해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 ‘외교정보기획국’을 신설하고, ‘외교정보1과’와 ‘외교정보2과’를 구성하여 해외정보 수집·분석·공유를 전담하도록 함.

이러한 조직 개편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도 예산 또한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⁷⁶⁾하여 편성되었음.

76) 2024년 5월 말 신설된 외교정보기획국은 예산 수요 및 집행 소요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2024년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러나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정보 수집·분석·공유 전담 부서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약 3억 9천만원 증액되었음.

연도	2024	2025.9월말 기준
사업비 (예산현액 기준)	1,005	1,390
집행액	786	731.5
집행률	78.6	52.6

특히 2024년도 예산 대비 증액분(3억 9,000만원)은 국 신설에 따른 인사 이동(동북아국→외교정보기획국)으로 인한 인건비(동북아 정세분석 연구원 4명) 이관 및 신시장 정세분석에 특화된 전문 연구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었음.

그러나 현재 외교정보기획국의 신시장 정세분석 연구원 1명은 아직 미채용 상태임.

< 외교정보기획국 인력 현황 >

(단위 : 명, 2025.9월 말 기준)

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정보1과	외교정보 2과	비고
공무원 (일반임기제 포함)	7	8	현원 기준, 부서별 정원은 비공개 ⁷⁷⁾
공무직 (연구원)	3	2	
공무직 (행정)	1	0	

(자료: 외교부)

이에 따라 향후에는 미충원 연구인력의 조속한 보강을 통해 외교정보 분석 역량을 한층 선진화하고, 사업의 집행을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외교부는 사업의 보안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실적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성과 관리체계와 집행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파급효과를 동시에 높여야 할 것임.

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마.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은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안은 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폐지)	846	-	846	389	100	-	-	-
·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신규)	-	-	-	-	-	850	850	순증

동 사업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⁷⁸⁾ 국가로의 외교 지평 확대,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입장국 및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지역별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관리·심화하기 위한 외교부의 새로운 지역전략 틀로 이해됨.

한편, 2024년 5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24.5.28.)을 통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⁷⁹⁾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되고, 그 산하에 외교전략

78)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 미·중 전략경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단일체가 아닌 다양한 국가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래 미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러시아·한국·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로 통칭돼 왔음.(출처 : '변환하는 세계, 왜 글로벌 사우스인가?', 「글로벌 이슈 브리프」 2025년 4월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국을 두었음. 외교전략기획국은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등 외교전략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의 주관부서임.

즉, 인도·태평양 중심의 단일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별 전략을 포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체계로 외교전략기획 기능이 확장·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전략 수립·이행의 체계적 추진 및 내실화 필요

2026년 신규 편성된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은 「지역전략 글로벌 포럼」, 「지역전략 아웃리치 및 협력 강화」 및 「지역전략 수립·보완 연구」임.

<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합계						850	850	순증
· 지역전략 글로벌 포럼	-	-	-	-		250	250	순증
· 지역전략 아웃리치 및 협력 강화	-	-	-	-	-	500	850	순증
· 지역전략 수립·보완 연구						100	100	순증

동 사업은 지역전략 관련 협의체 및 국제회의 참여·개최, 주요국과의 재외공관 차원의 협력 강화, 정책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안보 환경 불안정성 속에서도 주요 지역별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관리·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동 사업은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지역적 접근을 강화한 발전·확대형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외교적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 중 2024년 12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은 본래 인태 전략 관련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외교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다자간 고위급 회의로 기획되었으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잠정 연기되었다가, 이후 ‘해양안보 심포지엄’을 개최⁷⁹⁾로 대체된 바 있음.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이 정책결정자 간 전략적 논의를 촉진하는 고

79) 외교부는 2025.5.27. 해양안보 분야의 해외 주요 전문가와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의 참여하에 「해양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이작 카든(Isaac Kardon)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아닐 쿠마르 초올라(Anil Kumar Chawla) 인도 국방전략 연구소 명예연구원(前 해군제독),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소장, 마크 쥘리엔(Marc Julienne)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연구부장 등 해양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안보 관련 우리 정부 유관 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해양안보 심포지엄」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25.5.27.)

위급 다자외교 플랫폼으로 기획된 것과 달리, 해양안보 심포지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질서와 미·중 전략 경쟁을 주제로 한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 성격이 강하며,

규모와 참여 수준, 정치적 위상 면에서 본래 사업 목표였던 ‘인도·태평양 지역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 강화’라는 성과 달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신규 사업인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획 단계부터 세부사업별 목표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목적 외 전용이나 단순 행사성 집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16. 재외공관운영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은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의 개선 및 유지·관리와 대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8,011억 8,200만원) 대비 264억 700만원(3.3%) 증액된 8,27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712,023	776,394	744,765	801,182	801,182	827,589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74,222	299,243	299,243	309,353
		[1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74,222	299,243	299,243	309,353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1,154	148,954	148,954	150,454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1,154	148,954	148,954	150,454
	[4012]	재외공관 운영	21,409	21,000	20,524	22,099	22,099	22,899
		[251]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17,151	17,063	16,663	18,042	18,042	18,842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258	3,937	3,861	4,057	4,057	4,05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192,743	224,367	224,367	234,582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192,743	224,367	224,367	234,582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47,097	117,746	116,122	106,519	106,519	110,301
		[401] 재외공관 시설장비 및 관리사업	27,244	28,180	24,706	5,926	5,926	6,117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19,853	23,466	22,930	25,082	25,082	25,261
		[40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	66,100	68,486	75,511	75,511	78,923

2026년도 재외공관운영 관련 예산은 재외공관 인건비 3.4%,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5억원(1%),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8억원(4.4%), 재외공관 행정 직원 역량강화 102억 1,500만원(4.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34억 1,200만원(4.5%)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음.

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은 노후화된 재외공관 공용 차량의 적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4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3,861	4,057	4,057	-	-

(자료: 외교부)

□ 재외공관 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면밀한 편성 필요

재외공관의 차량은 용도에 따라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 “공관장 차량”),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 “행정용 차량”)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용 차량”)으로 구분됨.⁸⁰⁾ 2024년 말 기준으

80)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3조(용도구분)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공관장차량”이라 한다),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행정차량”이라 한다)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로, 공관장 차량은 173대, 의전용 차량은 91대, 행정용 차량은 412대임.

< 재외공관 차량 현황 >

(단위: 대)

구분	공관장 차량	의전용 차량	행정용 차량	계
대 수	173	91	412	676

(자료: 외교부)

그런데 최근의 교체·구입 실적을 보면 공관장 차량은 예산 편성 시의 계획 대비 매년 초과 교체·구입되고, 행정용 차량은 계획에 미달하여 교체·구입되었음.

< 용도별 차량 교체·구입 현황 >

(단위: 대)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계획	16	11	53	11	10	51	8	8	47	15	10	30
집행	11	18	43	20	6	28	13	8	29	-	-	-

주: 2025년 집행 실적은 2025. 8. 31.까지의 현황임

(자료: 외교부)

예산과 실제 집행 사이에 편차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외교부는 신규 공관 개설 및 사전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관장 차량 교체·구입이 증가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공관장 차량의 단가가 행정용 차량 단가의 2배에 달하여 공관장 차량 교체·구입 건수가 계획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행정용 차량 교체·구입의 제약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노후화 수준이 낮은 공관장 차량의 경우 교체를 차년도로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관장 차량과 행정용 차량의 교체·

구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행정용 차량의 교체 예상 건수가 30대로, 2023년도 계획인 53대에 비하여 70% 수준에 불과함. 행정용 차량은 영사 업무를 비롯한 공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차량으로, 매년 90대 이상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용 차량 교체 계획 축소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차량 교체·구입 예산을 수요에 기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7. 외교 행정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외교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외교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외교 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8개의 단위사업과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외교 행정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 행정지원			213,322	217,268	212,727	235,305	235,305	239,720
	[7001] 본부인건비		87,730	94,669	90,218	97,277	97,277	97,983
		[101] 본부 인건비	87,730	94,669	90,218	97,277	97,277	97,983
	[7002] 소속기관 인건비		8,573	9,064	9,258	9,403	9,403	10,145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8,573	9,064	9,258	9,403	9,403	10,145
	[7011] 본부 기본경비		44,620	44,704	45,217	50,261	50,261	51,671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9,520	10,072	9,364	10,757	10,757	11,565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17	19	21	19	19	20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31	32	21	33	33	33
		[204]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총액)	31	32	36	31	31	31
		[205] 외교전략기획국 기본경비(총액)	17	20	17	19	19	20
		[206]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23	35	18	35	35	35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30	41	34	43	43	43
		[208]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총액)	47	48	40	35	35	35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18	24	14	24	24	24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29	28	30	25	25	25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4	41	31	34	34	34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1	24	20	24	24	24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7	32	25	32	32	32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26	35	32	34	34	35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54	173	172	173	173	189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8	18	18	18	18	18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34	29	22	33	33	33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4	27	26	25	25	25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40	39	29	39	39	39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8	30	28	30	30	30
	[223] 국제안보국 기본경비(총액)	18	24	21	25	25	25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34	33	29	33	33	33
	[225]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총액)	-	-	6	18	18	18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4,458	22,303	23,186	27,266	27,266	27,339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003	3,980	3,815	4,047	4,047	4,507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460	329	2,205	325	325	350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2	74	77	74	74	81
	[255]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	433	508	380	415	415	414
	[256] 외교전략기획국 기본경비	598	503	454	518	518	525
	[257]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215	234	188	230	230	235
	[258] 북미국 기본경비	169	242	154	279	279	274
	[259]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	223	298	162	210	210	210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208	254	181	290	290	303
	[261] 유럽국 기본경비	437	427	317	411	411	409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321	347	311	375	375	394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578	712	623	261	261	271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429	502	356	485	485	485
	[266] 영사안전국 기본경비	313	336	259	398	398	345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858	915	912	902	902	902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203	202	179	206	206	214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400	440	308	486	486	508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44	276	215	274	274	290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310	318	280	344	344	357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66	272	170	265	265	240
	[274] 국제안보국 기본경비	132	166	150	251	251	258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169	210	199	216	216	206

	[276]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	-	-	82	194	194	188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666	7,043	6,562	7,231	7,231	7,423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381	2,588	2,437	2,653	2,653	2,873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285	4,455	4,126	4,578	4,578	4,550
	[7031] 외교 정보화	44,111	36,662	36,582	47,020	47,020	49,283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225	20,882	19,739	22,049	22,049	21,876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684	10,989	12,151	9,916	9,916	11,644
	[503]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450	-	-	-	-	-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7,131	2,125	2,124	1,801	1,801	1,801
	[505]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4,313	2,666	2,569	13,254	13,254	13,962
	[506] 해외 주요 인사 대상 E-Diplomacy 강화(정보화)	307	-	-	-	-	-
	[7032] 외교정책연구(R&D)	401	356	355	338	338	338
	[401] 정책연구개발	401	356	355	338	338	338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19,718	22,502	22,468	21,734	21,734	20,836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4,628	5,472	6,611	5,325	5,325	4,743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770	7,649	6,894	7,445	7,445	6,631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379	1,802	1,139	1,617	1,617	1,957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	2,807	2,303	2,914	2,188	2,188	2,341
	[405] 외교기록 개방 서비스 강화	317	301	294	286	286	286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884	900	655	500	500	505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33	4,075	3,962	4,373	4,373	4,373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1,503	2,268	2,066	2,041	2,041	2,041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1,503	2,268	2,066	2,041	2,041	2,041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은 윈도우10 지원종료에 따른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업무환경 정보보안 강화 소요 등을 반영하여 17억 2,900만원(17.4%)이 증액되었으며,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및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 체계 운영 소요 등을 반영하여 7억 800만원(5.3%)이 증액되었음.

나.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동 사업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통되고 있는 외교 정보의 보안과 기밀성을 확보하고,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외교정보전용망 및 외교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2,151	9,916	11,644	1,729	17.4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17억 9,800만원, 업무환경 정보보안 강화 사업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대도청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1억 7,800만원, 재외공관 노후 비상위성통신 장비 교체 사업 4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외교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DR) 구축 예산 확보 필요

외교부는 2025년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화재로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 이후, 전 부처 대상 보안·안전시설 전수점검 지시에 따라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정보보안·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였음.

점검 결과, 외교부 본부 청사 14층 내 외교통신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DR)⁸¹⁾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및 타 부처와 재외공관 간 문서유통이 단절되어 외교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 역시 하드웨어 장애에만 대비한 동일 장소 내 백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해·재난 발생 시 외교자료의 대규모 소실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외교부는 ‘외교정보자원 관리·안전 강화 TF’를 구성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단기적으로는 2026년도에 외교타운(서울 서초 소재) 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산실을 구축하여 백업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원격 자동백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재난 발생 시 최소한의 복구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를 목표로 물리적·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전용 재해복구시스템(DR센터)을 구축하여, 재해 상황 발생 시에도 실시간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무중단(Zero-Downtime) 전환체계를 마련하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외교정보 인프라의 업무연속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81) DR(Disaster Recovery)은 재해·재난시 원격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시스템을 말함.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는 단기적으로 백업 및 재해복구 전산실 시설공사에 60억원, 백업시스템 구축 등에 60억원이 소요되고, 중·장기적으로 전용 DR센터 구축에 약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최소 복구능력 확보에 필요한 120억원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최소 복구능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안 >

항목	세부내용	예산(억원)
재해복구 전산실 구축 (외교타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기반시설 건축 공사 전기, 기계 통신, 구조, 소방 등 공사 CCTV / 접근통제 등 물리적 보안 공사 감리비 / 시설부대비	60
백업용 전용회선 구축	네트워크장비 / 보안장비 전용회선 회선비용	10
백업시스템 구축 (일반/비밀 분리)	통합 백업 스토리지 데이터 백업 솔루션 백업검증 시스템	45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5
계		120

※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인력 예산 제외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정보시스템은 국가 외교문서, 조약, 외교전문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루고 있어, 재난이나 사이버공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외교 안전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교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단순 정보화사업이 아닌 외교안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의 국가적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예산을 확보하여 백업데이터 분산 및 자동복구체계 구축을 선행하고, 향후 DR센터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 외교정보의 안전성과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동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핵심기술(데이터-스마트업무환경-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하여 외교환경의 변화와 업무영역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분류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합 계	2,569	13,254	13,962	13,962	708	5.3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운영	448	1,632	2,204	2,204	572	35.0
재외공관 스마트업무환경 구축 후 운영관리	235	-	-	-	-	-
스마트 업무 환경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017	1,017	1,017	-	-
지능형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	10,605	10,741	10,741	136	1.3
5G정부망 운영	600	-	-	-	-	-
5G정부망 통신료	300	-	-	-	-	-
외교정보단 DB 구축	986	-	-	-	-	-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운영 사업이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 업무환경 시스템 운영 및 지능성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예산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교수행 체제 및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19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6년도는 2단계인 전략 AI 구축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단계에 해당하며, 관련 예산으로 107억 4,100만원이 편성됨.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차 구축)	2026년 (2차 구축)	2027년 (3차 구축)	총사업비
합 계	10,605	10,741	10,632	31,978
일반수용비 (210-01목)	59	45	40	144
일반연구비 (260-01목)	4,405	4,710	4,506	13,621
자산취득비 (430-01목)	6,141	5,986	6,086	18,213

2025년도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및 실무업무 효율화 과제 중심 중점을 두었으며, 2026년도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전략 AI 구축을 목표로 외교인물 관계 분석, 외교이슈 동향 감지, 허위정

보 탐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GPU(고성능 연산장비) 증설 및 기술변화에 따른 솔루션 반영 등 AI 서비스 확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외교 핵심데이터를 유통하는 외교통신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재구축 사업이 병행되고, 재외공관 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6년도에는 아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산출 세부내역 비교 >

(단위 : 백만원)

사업 내역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10,605	10,741
- 정보보안 강화 및 인프라 구축	3,349 - H/W 2,219, S/W 1,130	5,986 - H/W 2,713, S/W 3,273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6,003 - S/W 2,792, 개발비 3,211	3,829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사업관리 및 수행	1,194 - PMO 용역비, 감리용역비	881 - 사업관리 및 수행 등
- 조달수수료 및 평가수당	59	45

(자료: 외교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략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인 만큼, 구축된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외교정책 의사결정 지원체제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성과 목표와 활용계획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교 현안 감지나 허위정보 탐지 등 핵심 기능이 정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적 운용과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각 실·국별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된 활용방안을 병행 설계하여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데이터 품질과 운영조직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외교자료의 보안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가능한 데이터의 폭을 넓히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표준화와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함.

더불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재외공관 대상 시범사업이 단순한 기술 확산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현지 공관의 인력·환경 여건을 고려한 운영지원 체계 및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사업 전반의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동 사업은 외교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직원 간의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역량 강화, 산하기관 평가, 외교역량 강화 정책 연구, 재외공관 운영지원담당관 역량 강화, 청년인턴 채용,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6년도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합 계	1,139	1,617	1,957	340	21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94	116	116	0	-
산하기관 평가	26	30	30	0	-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10	10	10	0	-
재외공관 운영지원담당관 역량강화	0	100	100	0	-
청년인턴 채용	1,009	1,294	1,216	△78	△6.4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	67	485	418	623.8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예산은 12억 9,400만원에서 12억 1,600만원으로 소폭 감액된 반면,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4억 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외교부는 지방정부의 외교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의 외교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6월 비직제 조직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팀은 외교부-지자체-재외공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 및 청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하는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에 6,700만원이 편성되어 외교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2030 자문단 운영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2030 자문단 운영 사업과 6개의 신규 내내역사업을 본격 추진될 예정임.

신규사업은 청년정책 분야와 지방외교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 청년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지방외교 분야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외교 제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외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목적
【청년정책 분야】	
지방 청년 국제화 네트워크 행사 등 개최	외교부 청년정책 방향성을 소개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차원 청년 국제화 네트워크 행사 개최 및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 청년 행사 개최
청년정책 박람회 참여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지원	국무조정실 주최 ‘청년정책 박람회’ 개최 시(매년 9월 셋째 주),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 청년정책 부스 운영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지원 행사 개최
청년사업 통합관리 사이트 개편	부내 각 실·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청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지방청년 해외 스타트업 원격 일자리 사업	지방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4차산업 중심의 해외진출의 경우 지방청년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전무한 현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원격 일자리 사업 추진
【지방외교 분야】	
주한 외교단·외국상의·외신과의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킹	지자체 중 일부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등)를 제외하고는 주한 외교단 등 글로벌 네트워킹 관련 정보·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의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기회 제공
국제관계대사 정례회의 확대 및 지방민생외교 전문가 포럼	지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외교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국제관계대사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사업은 외교정책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완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외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외교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지방외교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6개 신규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행사 기획, 기념품 제작, 간담회 개최 등 일회성 성격의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성과 중심의 집행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2026년도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산출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안
지방 청년 국제화 네트워크 행사 등 개최	- 기념품 제작비(일반수용비) 4백만원 - 정책 제언 원고료(일반수용비) 5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임차료) 60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60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9백만원	138
청년정책 박람회 참여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지원	- 국제교류 분야 상담인력 초빙(일반수용비) 12백만원 - 기념품 제작(일반수용비) 5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20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3백만원	40
청년사업 통합관리 사이트 개편	- 홈페이지 개편(일반용역비) 30백만원	30
지방청년 해외 스타트업 원격 일자리 사업	- 홍보 및 자료제작(일반수용비) 2백만원 - 지자체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3백만원 - 현지 방문 출장(국외여비) 20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5백만원	30
주한 외교단·외국상의·외신과 의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킹	- 기념품 제작비(일반수용비) 8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임차료) 40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40백만원 - 행사 추진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 3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9백만원	100
국제관계대사 정례회의 확대 및 지방민생외교 전문가 포럼	- 기념품 제작비(일반수용비) 8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임차료) 40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20백만원 - 행사 추진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2백만원 - 간담회 식사(사업추진비) 10백만원	8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외교부는 청년 및 지자체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네트워킹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도화 및 지역 외교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업의 성과가 지방정부와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대학·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요

1) 수입·지출 예산안 개요

2026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출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총 1조 2,225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1조 3,644억 5,400만원) 대비 1,419억 3,800만원(△10.4%)이 감액되었음

< 2026년도 한국국제협력단 수입 및 지출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A)	추경		2025년 대비 (B-A)	%
수 입	정부출연금	1,295,540	1,262,170	1,148,022	△147,518	△11.4
	자체수입 ⁸²⁾	68,914	68,914	74,494	5,580	8.1
	－ 이자수입	4,144	4,144	5,592	1,448	34.9
	－ 이월결산잉여금	50,301	50,301	51,810	1,509	30.0
	－ 잡수입	14,469	14,469	17,092	2,623	18.1
	－ 임의보유금	－	－	－	－	－
	계	1,364,454	1,331,084	1,222,516	△141,938	△10.4
지 출	인건비	51,040	51,040	53,485	2,445	4.8
	경상운영비	1,756	1,756	1,599	△157	△8.9
	사업비	1,310,267	1,276,897	1,165,999	△144,268	△11.0
	예비비	1,391	1,391	1,433	42	3.0

82)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이월결산잉여금, 잡수입, 임의보유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자수입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예치로 발생한 수입을 말하고, 이월결산잉여금은 직전년도 결산잉여금으로서 출연금 사업비 중 발생한 잉여

수입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은 총 1조 1,480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1조 2,955억 4,000만원) 대비 1,475억 1,800만원 ($\Delta 11.4\%$)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자체수입은 55억 8,000만원(8.1%) 증액된 74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534억 8,500만원이, 경상운영비는 전년대비 8.9%가 감소한 15억 9,900만원이, 사업비로는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1조 1,659억 9,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금을 의미함. 잡수입은 사업비 정산잔액, 유형자산 처분 이익(차량처분 등), ODA교육원 운영 수익, 임대 수익(구내매점, 은행 등 임대료 수입) 등이 해당하고, 잡수입은 결산 시 불용액, 이자수입초과달성분 등으로 구성되며, 임의보유금은 현금성 자산 중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차년도 이후 수입 편성이 가능한 잉여금을 말함.

2) 주요 사업별 예산안 개요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4개 지역 국가원조로 구성된 국별 협력사업 예산은 7,044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7억 2300만원이 감액(△14%)되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 역시 전년 대비 △14.0% 감소한 2,891억 4,500만원이 편성됨.

한편, 일부 사업의 증액은 ODA 예산 효율화를 위한 내역 사업 이관 및 유사 사업 통폐합에 기인*한 것임. 협력사업지원은 전년 대비 301억 8600만원이 증액(49.2%)된 91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각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조사관리비 337억원과 사업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행정부 31억원이 협력사업지원 내 신규 내역 사업으로 통합·이관되었음.

* 사업조사관리비 : '25년 41,082백만원 → '26년 33,799백만원 (△17.7%)

사업행정부 : '25년 4,309백만원 → 26년 3,166백만원 (△26.5%)

< 2026년도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2025년 대비 (B-A)	%
계	1,232,412	1,139,643	1,295,540	1,262,170	1,148,022	△147,518	△11.4
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75,641	249,271	307,548	296,178	281,150	△26,398	△8.6
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6,614	282,575	302,087	289,087	249,882	△52,205	△17.3
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3,671	72,893	94,432	94,432	80,283	△14,149	△15.0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2025년 대비 (B-A)	%
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3,274	119,607	115,139	111,139	93,168	△21,971	△19.1
5. 글로벌 프로그램	313,652	298,342	336,244	331,244	289,145	△47,099	△14.0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128,756	119,778	143,026	143,026	127,245	△15,781	△11.0
글로벌연수	67,378	63,889	67,973	62,973	73,940	5,967	8.8
국제기구협력	81,915	80,193	80,015	80,015	35,030	△44,985	△56.2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603	34,481	45,230	45,230	52,930	7,700	17.0
6. 협력사업지원	59,260	51,975	61,390	61,390	91,576	30,186	49.2
7. 전략적협력강화	8,000	5,206	6,400	6,400	7,300	900	14.1
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62,300	59,774	72,300	72,300	55,518	△16,782	△23.2
민관협력사업	57,000	54,487	65,000	65,000	49,518	△15,482	△23.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5,300	5,287	7,300	7,300	6,000	△1,300	△17.8

2026년도 국별협력사업 예산안은 아래와 같음.

< 2026년도 국별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1]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01,042	275,641	249,271	307,548	296,178	281,150
	[11] 일반	[401] 베트남	28,783	49,646	41,413	57,293	52,293	50,094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	14,358	20,971	12,966	17,114	17,114	18,566
	[11] 일반	[403] 캄보디아	22,128	22,864	22,310	21,232	21,232	24,147
	[11] 일반	[404] 필리핀	16,724	31,043	21,414	30,470	30,470	27,632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	13,506	13,790	9,349	14,044	14,044	10,125
	[11] 일반	[406] 몽골	14,360	17,122	16,772	20,937	20,937	22,519
	[11] 일반	[407] 라오스	25,276	24,652	26,369	27,290	27,290	25,256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8] 스리랑카	10,952	12,232	18,821	7,975	7,975	8,233
	[11] 일반	[409] 네팔	7,784	9,438	10,123	14,653	14,653	16,850
	[11] 일반	[410] 파키스탄	6,689	9,239	8,810	11,315	11,315	12,39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	39,912	62,841	60,440	83,648	77,278	59,292
	[11] 일반	[412] 인도	411	853	189	250	250	699
	[11] 일반	[413] 미얀마	160	950	295	1,327	1,327	5,342
[2432] 아프리카지역원조			212,829	306,614	282,575	302,087	289,087	249,882
	[11] 일반	[401] 가나	9,222	15,943	15,613	20,583	20,583	18,795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	29,697	30,643	28,186	28,644	28,644	23,478
	[11] 일반	[403] 아프리카 일반협력 국가그룹	115,324	187,826	174,739	178,966	173,966	131,620
	[11] 일반	[404] 르완다	15,329	15,714	15,475	17,733	17,733	19,850
	[11] 일반	[405] 우간다	14,334	14,501	13,159	17,547	17,547	19,697
	[11] 일반	[406] 탄자니아	13,984	18,927	16,448	17,931	9,931	18,508
	[11] 일반	[407] 세네갈	8,295	12,853	11,262	12,507	12,507	9,148
	[11] 일반	[408] 이집트	6,644	10,207	7,693	8,176	8,176	8,786
[2433] 중남미지역원조			79,819	73,671	72,893	94,432	94,432	80,283
	[11] 일반	[401] 콜롬비아	9,370	7,306	8,243	11,229	11,229	9,720
	[11] 일반	[402] 페루	6,703	9,964	6,970	9,497	9,497	17,747
	[11] 일반	[403] 볼리비아	7,361	8,024	9,101	17,250	17,250	13,180
	[11] 일반	[404] 파라과이	10,600	15,701	14,873	11,100	11,100	9,364
	[11] 일반	[405] 중남미 일반협력 국가그룹	45,784	32,676	33,706	45,356	45,356	30,272
[2434] 중동·CIS지역원조			72,516	133,274	119,607	115,139	111,139	93,168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	11,310	23,767	19,130	22,020	22,020	20,258
	[11] 일반	[402] 중동·CIS 일반협력 국가그룹	52,927	88,688	81,235	69,972	65,972	53,749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	8,278	12,950	16,767	12,653	12,653	11,636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	1	7,169	1,775	5,439	5,439	2,500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	0	700	700	5,055	5,055	5,025

나. 총 관

□ 종료예정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률 관리 및 후속 조치 필요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별 협력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 제반 여건 등을 조사하는 기획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이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사업종료연도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낮아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사업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의 기간이 길었음에도 그동안의 공정률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2026년 종료 예정인 국별 협력사업 중 2025년 9월 말 현재 공정률⁸³⁾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26건으로, 이 중 10건은 공정률이 25% 미만임.

< 2026년 종료 예정 국별 협력사업 중 공정률 부진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국가	2026년 종료 사업명	총사업비	25.9월말	
				집행액	공정률
1	베트남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1,997	0	0.0
2	베트남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23-'26/495만불)	6,386	1,440	22.5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21-'26/1,041만불)	12,691	3,974	31.3
4	몽골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21-'26/1,400만불)	16,940	8,192	48.4
5	몽골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2-'26/800만불)	9,040	2,084	23.1

83) 총사업비/누적집행액

6	라오스	라오스 디지털혁신중소기업학과 설립 및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사업('22-'26/500만불)	5,650	1,541	27.3
7	파키스탄	파키스탄 KP주 아보타바드시 하베리안지역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21-'26/1,200만불)	14,520	6,974	48.0
8	부탄	부탄 스포츠,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사업('22-'26/680만불)	7,684	2,440	31.8
9	미얀마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19-'26/950만불)	10,450	2,552	24.4
10	가나	가나 세무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2-'26/220만불)	2,486	999	40.2
1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 조성사업('20-'26/1,300만불)	15,470	6,998	45.2
12	카메룬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2-'26/823만불)	9,337	2,585	27.7
13	모로코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16,770	1,707	10.2
14	탄자니아	탄자니아 도도마주 유수물 제고 시범모델 구축 및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23-'26/382만불)	4,928	602	12.2
15	세네갈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6/1,100만불)	13,453	5,546	41.2
16	세네갈	세네갈 국가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사업('22-'26/600만불)	6,780	2,510	37.0
17	볼리비아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13-'26/500만불)	6,900	2,637	38.2
18	파라과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대학 ICT 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ICT 경쟁력 강화 사업('22-'26/960만불)	10,848	5,036	46.4
19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버스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21-'26/590만불)	7,139	1,516	21.2
20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	6,502	694	10.7
2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사 역량강화 및 유아교육진흥센터 건립사업('21-'26/1,199.7만불)	14,686	5,605	38.2
2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22-'26/1,415만불)	15,990	4,185	26.2
23	요르단	요르단 제라시주 마스타바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22-'26/1,034만불)	11,890	3,210	27.0
24	이라크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 사업('22-'26/500만불)	5,650	3	0.1
25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2차 사업('23-'26/1,400만불)	18,060	581	3.2
26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자롤리디니 발키-뽀지 포온 철도신설 타당성조사 사업('24-'26/400만불)	5,200	2,048	39.4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특히,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과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 강화 사업(’22-’26/500만불)’의 경우 각각 2023년, 2022년 착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정률이 0%대에 불과하여 2026년 종료 이전에 사업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 추진 이전에는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중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지 정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해 국별 협력사업이 사업종료연도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저조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8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263억 9,800만원 감액(△8.6%)된 것으로, 2026년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39.9%를 차지함.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1]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01,042	275,641	249,271	307,548	296,178	281,150
	[11] 일반	[401] 베트남	28,783	49,646	41,413	57,293	52,293	50,094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	14,358	20,971	12,966	17,114	17,114	18,566
	[11] 일반	[403] 캄보디아	22,128	22,864	22,310	21,232	21,232	24,147
	[11] 일반	[404] 필리핀	16,724	31,043	21,414	30,470	30,470	27,632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	13,506	13,790	9,349	14,044	14,044	10,125
	[11] 일반	[406] 몽골	14,360	17,122	16,772	20,937	20,937	22,519
	[11] 일반	[407] 라오스	25,276	24,652	26,369	27,290	27,290	25,256
	[11] 일반	[408] 스리랑카	10,952	12,232	18,821	7,975	7,975	8,233
	[11] 일반	[409] 네팔	7,784	9,438	10,123	14,653	14,653	16,850
	[11] 일반	[410] 파키스탄	6,689	9,239	8,810	11,315	11,315	12,39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	39,912	62,841	60,440	83,648	77,278	59,292
	[11] 일반	[412] 인도	411	853	189	250	250	699
	[11] 일반	[413] 미얀마	160	950	295	1,327	1,327	5,342

□ 인도네시아(ODA) 사업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감액 필요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71억 1,400만원) 대비 14억 5,200만원 증액되어 18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5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런데, 그 중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은 2025년 8월 말까지 누적 공정률이 0%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을 촉진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질, 형평성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5예산 (A)	'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24-'28/300만불)	200	1,000	800	400
－ 전문인력파견	200	210		
－ 역량강화	0	200		
－ 기자재	0	590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작성된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연차점검 결과 보고”에서 사업 구성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2025년 8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집행계획에서 2025년 연내 예정한 PMC 조달이 아직 사전공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후 사업 추진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큼.

둘째,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은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의 행정업무 지원을 관장하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 국가사무처(SETNEG, Ministry of Secretariat)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5예산 (A)	'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25-'27/300만불)	3	500	497	16,566.7
- 전문인력파견	0	200		
- 역량강화	0	200		
- 직접지원/프로그램	3	100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 4월에 작성된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내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R/D 체결, 3분기 내 PMC 선정이 이루어지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 현재까지도 R/D 체결이 아직 안 되어 PMC 선정 및 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대상이 대통령실 직속 국가사무처인 만큼 기밀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다소 어려운 상태이나, 사업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함.

셋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은 인도네시아 철도 운영 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발하고, 연계 가능한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복지와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5예산 (A)	'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25-'30/1,195만불)	450	3	△447	△99.3
- 전문인력파견	450	3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의 집행액이 8월 말까지 전혀 없으며, 2025년 연내 역량강화 초청연수 등 계획한 세부성과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분담 사항에 대해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 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국국제협력단은 기획조사 단계에서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집행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에 따른 재검토 필요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26-’31/1,300만불)’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겨울철 채소 생산 역량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국민건강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5예산 (A)	’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26-’31/1,300만불)	0	5	5	순증
- 직접지원/프로그램	0	5		

동 사업은 울란바토르시 농업기술센터 구축 및 온실 농가 지원 정책을 통한 겨울철 채소 생산역량 강화를 추진함.

그런데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동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사업 비교>

구분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
사업 주체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배경	몽골은 전통적으로 <u>겨울철 채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u> 육식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 비만 등의 문제 발생	몽골의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한 <u>겨울철 채소 생산이 어려워</u> 스마트 온실 구축을 통해 연중 과일 및 채소 생산 확대 필요
기대 효과	몽골의 기후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u>온실과 울란바토르시 산하 농업기술센터 조식을 신설해</u> , 농촌지도사를 통한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겨울철 채소 생산 역량강화	몽골 연중 안정적인 채소 자급을 위한 <u>국가 스마트농업단지 육성을 통해</u> 채소 재배기간 확대, <u>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u>
총사업비	179억 4,000만원	59억 8,000만원
대상지역	울란바토르시 (항울구)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후구)
사업 내용	<u>농업기술센터 구축</u> 및 온실 농가 지원 정책을 통한 <u>겨울철 채소 생산역량 강화</u>	<u>채소연구개발센터 및 첨단형 연동온실 등 시설 구축</u> , 한국전문가 파견 및 재배 기술 현지 교육 등을 통한 <u>채소 생산 역량 강화</u>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분석 당시 동 사업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이 아닌 겨울철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이 포함되어 중복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도 채소연구개발센터(825㎡), 첨단형 연동온실(864㎡), Mid-Tech 단동 이중하우스(3,200㎡ 육묘장 1동 포함 10동), 한면밀폐형 온실(360㎡), 노지시험포장(5,000㎡), 컨테이너팜(40ft, 2개동)과 같이 구체적으로 시설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은 2022년 타당성조사 이후 2023년 PCP 접수,

2024년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 착수가 이루어져, 2025년에 채소연구개발센터 실시설계 및 컨테이너 팜 구축 등이 진행되고 2026년부터 시설물 인수인계가 예정된 상태인데,

동 사업의 2024년 11월 사전 타당성조사 당시 충분히 사업의 중복·유사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은 부처 간 ODA 분절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중복·유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사업을 조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49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522억 500만원 감액(△17.3%)된 것으로, 2025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35.5%를 차지함.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2] 아프리카지역원조			212,829	306,614	282,575	302,087	289,087	249,882
	[11] 일반	[401] 가나	9,222	15,943	15,613	20,583	20,583	18,795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	29,697	30,643	28,186	28,644	28,644	23,478
	[11] 일반	[403] 아프리카 일반협력 국가그룹	115,324	187,826	174,739	178,966	173,966	131,620
	[11] 일반	[404] 르완다	15,329	15,714	15,475	17,733	17,733	19,850
	[11] 일반	[405] 우간다	14,334	14,501	13,159	17,547	17,547	19,697
	[11] 일반	[406] 탄자니아	13,984	18,927	16,448	17,931	9,931	18,508
	[11] 일반	[407] 세네갈	8,295	12,853	11,262	12,507	12,507	9,148
	[11] 일반	[408] 이집트	6,644	10,207	7,693	8,176	8,176	8,786

마.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80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141억 4,900만원 감액(△15.0%)된 것으로, 2025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11.4%를 차지함.

< 2026년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3] 중남미지역원조			79,819	73,671	72,893	94,432	94,432	80,283
	[11] 일반	[401] 콜롬비아	9,370	7,306	8,243	11,229	11,229	9,720
	[11] 일반	[402] 페루	6,703	9,964	6,970	9,497	9,497	17,747
	[11] 일반	[403] 볼리비아	7,361	8,024	9,101	17,250	17,250	13,180
	[11] 일반	[404] 파라과이	10,600	15,701	14,873	11,100	11,100	9,364
	[11] 일반	[405] 중남미 일반협력 국가그룹	45,784	32,676	33,706	45,356	45,356	30,272

바.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중동CIS지역 국가원조」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93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219억 7,100만원 감액(△19.1%)된 것으로, 2025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13.2%를 차지함.

< 2026년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4] 중동·CIS지역원조			72,516	133,274	119,607	115,139	111,139	93,168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	11,310	23,767	19,130	22,020	22,020	20,258
	[11] 일반	[402] 중동·CIS 일반협력 국가그룹	52,927	88,688	81,235	69,972	65,972	53,749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	8,278	12,950	16,767	12,653	12,653	11,636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	1	7,169	1,775	5,439	5,439	2,500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	0	700	700	5,055	5,055	5,025

□ 중앙아시아 지역 의회 관련 ODA 사업의 집행을 제고 및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내에는 의회 관련 ODA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23-’27/1,395만불)’과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23-’27/840만불)’이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공정률이 낮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먼저,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23-’27/1,395만불)’은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회 내 통합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시군의회 간 연계기반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4차연도인 2026년에 3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당초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85.6%인 155억1,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 초 기준 누적집행률은 6.7%이며, 2025년도 예산 18억 1,400만원 중 12억 1,200만원(66.8%)이 집행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025년 11월초기준 실제 공정률
금액	2,626	12,891	2,548	68	18,135	1,215
누적집행률	14.5	85.6	99.6	100.0	100.0	6.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부진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함.

첫째, 당초 하원의회를 대상으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의의사록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년 지연이 발생하였음.

둘째, 2024년 11월 PMC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배정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5년으로 PMC 선정 및 그에 따른 선금 지급 및 업무 진행이 이월됨.

그러나 동 사업이 상·하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이후에 수립된 집행계획에서도 “2024년 3분기에 PMC를 선정하고, 2024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만큼, PMC 선정 절차 자체를 빠르게 진행했다면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재선정 작업을 통해 일정 순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23-’27/840만불)’은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를 통해 국회 입법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4차연도인 2026년에 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⁸⁴⁾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025년 11월초 기준 실제 공정률
금액	503.1	4,192.5	5,289	606.3	245.1	10,836	2,251.9
누적집행률	4.6	43.3	92.1	97.7	100.0	100.0	20.8
본예산	50	1,200	2,200	-	-	-	-
예산현액	50	2,188	2,200	-	-	-	-
실집행액	49.5	2,171.4	31 ⁸⁵⁾	-	-	-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 사업의 3차연도인 2025년 11월 초 기준 공정률은 49.3%로, 예산집행 계획 상 2025년까지의 누적 집행률이 92.1%인 것을 고려하면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각각 99.09%, 99.25%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현재 공정률이 낮은 것은 당초 집행계획에 비해 2023년과 2024년에 배정된 예산이 적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연계 성과사업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별 협력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참고할 때, 위 두 사업은 2025년 한-중앙아 국회의장 회의, 2026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이후 연계 성과사업 차원에서 중요성이 큼.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은 두 사업이 계획대로 2027년에 종료될 수 있도록

84) 집행계획 내 미화 예산 집행계획을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 편성환율인 1,290원으로 원화 환산한 금액임.

85) 2025년 8월말 기준

성과를 낼 수 있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계획 대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 글로벌 연수

「글로벌 연수」는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고유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7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억 6,700만원이 증액(8.8%) 된 것임.

< 2026년도 글로벌 연수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글로벌 연수	66,962	67,973	73,940	5,967	8.8

「글로벌 연수」는 크게 단기 과정인 국별연수·다국가연수와, 장기 과정인 석·박사 학위연수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더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부처 연수지원’이 신설되었음.

< 글로벌 연수 사업 세부 내역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연수과정 운영비	50,621	53,352	2,731	5.4
- 국별연수	27,384 (2,775명x9.9백만원)	29,885 (2,717명x11백만원)	2,501	9.1
- 다국가연수	4,105 (555명x7.4백만원)	5,534 (465명x11.9백만원)	1,429	34.8
- 특별과정연수	1,100 (100명x11백만원)	-	△1,100	순감
- 학위과정연수(석사)	16,759 (1,055명x15.9백만원)	16,909 (1,063명x15.9백만원)	150	0.9
- 학위과정연수(박사)	1,273 (42명x30.3백만원)	1,024 (34명x30.3백만원)	△249	△19.6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二	4,200 (221명x19백만원)	4,200	순증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二	2,200 (220명x10백만원)	2,200	순증
부처연수지원(N-1)	二	3,000 (24건x125백만원)	3,000	순증
연수지원경비	3,253	2,700	△553	△17.0
- 사업활동지원	1,550 (1식x1,550백만원)	1,400 (1식x1,400백만원)	△150	△9.7
- 연수지원업무	1,703 (1식x1,703백만원)	1,300 (1식x1,300백만원)	△403	△23.7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1,732	1,656	△76	△4.4
- 지식확산 활동 지원	382 (1식x382백만원)	200 (1식x200백만원)	△182	△47.6
- 성과관리 및 평가	45 (1식x45백만원)	45 (1식x45백만원)	-	전년동
- 국별동창회 운영비	1,305 (1식x1,305백만원)	1,411 (1식x1,411백만원)	106	8.1
[83]연수센터지원	6,623	6,832	209	3.2
[91]사업행정비	744	-	△744	순감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사업 준비 여부 검토 필요 등

신규 사업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에서 고용과 실습을 연계하고, 본국 귀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2026년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글로벌 연수	66,962	67,973	73,940	5,967	8.8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	-	4,200	4,200	순증

기존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사업이 개도국 공공부문 인재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비하여, 신규 연수 사업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석사 과정 중 인턴십 과정도 함께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인재가 본국으로 귀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연수사업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비교 >

	기존 KOICA 석사학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연수 대상자	수원국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수원국민
연수기간	최대 17개월	30개월
인 원	1개 국가당 2~3명	1개 국가당 최대 50명
수원국 공식 추천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연수기관	국내 소재 대학으로 개도국 대상 학위과정 추진을 위한 충분한 역량,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춘 연수기관	
인턴십 여부	X	O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동 사업이 기존에 한국 국제협력단이 수행하던 연수 사업과 그 방식 및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사업 규모도 연수생 221명을 대상으로 4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 준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내년 상반기 공고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오리엔테이션(OT)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사업의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표준 절차(안) >

2026년(1차년도)							2027년(2차년도)												2028년(3차년도)											
상 반 기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준 비	OT & 한국어						전공 1학기			인턴 1차			전공 2학기			인턴 2차			전공 3학기			인턴 3차			전공 4학기					

동 사업을 위해서는 수요 조사 및 수원국의 교육기관, 행정기관 및 국내의 교육기관, 산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완료될 계획임.⁸⁶⁾

이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용역과 병행하여 세부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 초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

86)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침서 및 전문 인재 양성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5년 10월 착수보고를 진행하였음.

명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단순한 연수 사업에서 나아가 국내의 노동 부족 문제 해결 및 본국 귀환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전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사업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체 예산 대비 운영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42억원으로, 예상 인원 221명에 1인당 단가를 1,900만원으로 하여 계상한 것임. 1인당 단가 1,900만원 중 약 260만원은 운영비, 1,640만원은 사업비 성격으로,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약 14% 수준임.

< 미래 인재 사업 단가표(1인당) >

구분	지원 내역	세부내역/단가기준 (단위: 천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단가	수량	소계	1차년 (6개월)	2차년 (12개월)	3차년 (12개월)	
총 계		-	1인	96,000	19,064	39,435	37,501	
I. 운영비	소 계		-	11,591	2,687	4,540	4,364	
	위탁 용역	700	3년	2,100	700	700	700	단가: KOICA 석사 단가
	행정비	350	3년	1,050	350	350	350	단가: KOICA 석사 위탁 용역 단가 50%
	예비비	8,441	1식	8,441	1,637	3,490	3,314	단가: 사업비의 10%
II. 사업비	소 계		-	84,409	16,377	34,895	33,137	
	항공료 (평균)	1,500	2회	3,000	1,500	-	1,500	단가: 최단 운항순로 2등 왕복항공료
	등록금 (한국어)	1,300	3분기	3,900	2,600	1,300	-	단가: GKS 한국어 연수비 단가와 동일
	등록금 (본과정)	7,000	4학기	28,000		14,000	14,000	단가: KOICA 인문 석사 단가 (이공계 실습비 등 포함) 수량: 2년 과정(4학기)
	기숙사비 (평균)	400	24개월	9,600	2,400	4,000	3,200	단가: KOICA 석사 단가 수량: 학교 내 체류기간 24개월 (한국어 8개월 + 수업 16개월)
	생활비 (학생)	1,200	24개월	28,800	7,200	12,000	9,600	단가: KOICA 석사 단가 수량: 학교 내 체류기간 24개월 (한국어 8개월 + 수업 16개월)
	생활비 (인턴)	400	6개월	2,400	-	800	1,600	단가: KOICA 기숙사비 단가 (인턴 월급 발생에 따른 기본 숙박비만 제공) 수량: 인턴기간 2개월 * 3회
	정착지원금	1,200	1회	1,200	1,200	-	-	단가: KOICA 학위과정 단가
	귀국지원금	600	1회	600	-	-	600	
	건강보험료 (평균)	79	24개월	1,896	474	790	632	
	위탁수수료 및 계수조정 (평균)	5,013	1식	5,013	1,003	2,005	2,005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그런데, 교육부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의 경우 1인당 단가가 약 1,900만원으로 계상된 점은 동일하나, 전체 예산 1,275억원 중 운영비는 1% 수준인 12억 2,300만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비하여 운영비의 비율이 매우 낮음.

< 교육부 GKS 사업 예산 산출 근거 >

(단위: 백만원)

구분		비용	비고
총계		127,529	
운영비		1,223	
	신규선발 경비(심사, 오리엔테이션 등)	412	
	학사관리	205	
	동문관리	317	
	사업 전반 운영	289	
사업비(장학금)		126,306	
	한국어연수비	7,960	분기당 1,300천원
	등록금(학부, 대학원)	31,466	
	학업장려금	82,298	정착지원금, 건보료, 생활비 성격
	입국/귀국항공료	4,664	
	학업우수장학금	25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예산(확정) 사업설명자료)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석사학위 과정 제공뿐 아니라 인턴십 기회, 국내 취업 연계, 본국 귀환 촉진 등을 포함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모델로, GKS 등 기존의 장학 연수 사업에 비하여 관리 부담이 큰 사업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편성된 운영비가 유사 사업들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셋째, 현재 진행 중인 'KOICA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침서 및 전문 인재 양성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용역'에서 국내 대학과 해외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중인바, 해당 결과를 면밀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할 필요가 있음.

국내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단기 석사과정생에 대한 산업체의 인력 수요 부족 문제, 현장 인턴십 등을 위한 한국어 능력 문제 등이 발견되었음.

개발도상국 현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국가별 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수원국 산업 단계별 성숙도에 맞춘 국내 대학의 정밀 매칭이 필요하고, 인턴십 과정에서 발생할 언어적 장벽의 문제, 수원국과 국내의 IT 인프라 격차 문제 등이 제시되었음.

< 국내 대학 및 개발도상국 현지 수요조사 결과 시사점 >

국내 대학	○ 어학 성적과 실제 의사소통 능력 간 괴리가 커 인턴십 애로사항 발생 우려 ○ 단기 석사과정생보다 연구 지속성이 높은 박사과정 유학생 선호 경향 ○ 기업 현장에서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학생 지원금에 대한 우려
KOICA 현지 사무소	○ 국가별 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하여 수원국 산업단계별 성숙도에 맞춘 국내 대학 정밀 매칭 필요 ○ 산업현장 인턴십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언어·문화적 장벽 제시 ○ 첨단산업 외 기초/뿌리 산업인력 수요 병존 ○ 내전 등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 존재 ○ 수원국과 국내 IT 인프라 및 교육수준 간의 간극 발생

(자료: KOICA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침서 및 전문 인재 양성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 2025. 10.)

동 사업이 교육부의 GKS 사업과 차별화를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과 개발도상국 인재와의 수급 매칭, 충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연수 종료 후 지방 기업으로의 취업 제공 또는 본국 귀환 등 체계적인 사후 지

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동 사업 참여 주체인 국내 대학, 지방의 산업체,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준비 철저 필요

신규 연수 사업인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기·소규모·공무원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중장기·대규모·민간포함 연수를 실시하여 개도국 현지의 우수한 청년 인재에 대한 효과적인 연수를 제공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글로벌 연수	66,962	67,973	73,940	5,967	8.8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	-	2,200	2,200	순증

동 연수 프로그램은 2개년에 걸쳐 진행됨. 1차년도인 2026년의 경우 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연수(1주)와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지연수(5주) 등 총 6주의 연수를 제공할 계획임.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연수생 중 우수 연수생 약 60명을 선발하여 국내에서 2~3주 정도의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연수 대상은 개도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며, 공무원 외에도 민간 부분을 포함할 예정임. 연수 주제는 리더십 교육 및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요 >

□ 주요 방향

- 개도국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청년층(약 5개국, **220여명**) 대상 리더십 교육 등 중장기(2년간, 약 8주) 연수 제공
 - ※ 기존 단기연수는 총 3년(2주씩) 간 매년 공무원 위주로 연수생 15명 선발

□ 추진 목적

- **(우수인재 확보)** 개도국 현지의 우수한 청년 미래인재 확보하여, 한국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회 제공
 - ①인원 증대·연수대상 다양화를 통한 상호학습 증진, ②기간 확대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③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도 확대

□ 프로그램 운영방안

- **(연수방식)** ^{1차년도}220명 대상 6주간 온라인연수(1주)·거점국가* 중심 현지연수(5주), ^{2차년도}우수연수생(60명 이내) 대상 국내 초청연수(2주) 제공
 - 1차년도 연수 시 연수기관 주관 평가(역량·학업성취도) 고득점순 우수연수생(30% 이내) 선정, 인센티브로서 2차년도 초청연수 제공
 - * 차년도 거점국가(아프리카)는 사무소 소재국 중심, 대규모 연수 여건이 마련된 국가 선정(현지조사 예정), 인근국 연수생을 거점국가로 초청
- **(연수대상)** 개도국 청년층(만 35세 미만) 중심으로 공무원 외에도 민간 부문 포함(학계, 사회적기업, 시민사회 종사자 등)
 - 수원국 정부·대학·공관 등 다양한 채널 통한 연수생 추천 기반으로, 업무경험·영어능력 여부 등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발
- **(연수주제)** ^{1차년도}청년층 리더십을 함양하는 리더십 교육 및 우리 비교우위분야 중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예: ICT - AI, 코딩 등), ^{2차년도}우리나라 발전경험 특화교육, 발전상 공유를 위한 현장방문 등 심화과정 운영
 - * 거점국가 선정 후, 거점국가·인근국 수원기관 대상 연수주제 수요 확인 예정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아직 연수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연수생 선발 기준, 사업 수행 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

동 사업은 기존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해온 단기 연수가 평균 약 17명⁸⁷⁾

87) < 단기 연수 운영 현황 >

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2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임. 또한, 연수가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연수의 형태도 온라인연수-현지연수-초청연수를 혼합한 형태임.

따라서 대규모 인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커리큘럼 설계, 200명 이상을 4~5주 동안 현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선정 등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나, 2025년 11월 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은 11월 중 기획조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여건의 적절성 검토, 사업수행 및 의사결정체계 설계, 연수 커리큘럼 기획 및 연수생 선발기준 마련, 산출물·성과지표 및 점검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지연수를 수행할 거점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 기획조사 개요 >

- (파견인원) 3인
- (파견기간) 2025. 11. 16. ~ 11. 22. (한국 출입국 기준) / 가나 아크라
- (주요 과업)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등 현지여건 적절성 검토
 - 사업수행·의사결정체계 설계(이해관계자 업무 협조체계, 현지 수행기관-국내 기관 연계방안, 관계기관 여건 파악)
 - 연수 커리큘럼 기획 및 연수생 선발기준 마련
 - 연수 관련 거점국 및 인근국 정책 분석
 - 표제 사업 산출물·성과지표 및 점검계획 수립

	운영횟수	참여국 수	참여자 국가 수	참여자
2020	74회	24국	32국	1,385명
2021	194회	45국	61국	3,842명
2022	216회	48국	51국	4,100명
2023	232회	48국	72국	3,750명
2024	234회	47국	89국	3,613명
합계	950회	212국	305국	16,690명

또한, 동 사업은 현지의 수요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이는 기존에 수행하던 연수 사업들이 n-2년에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수를 설계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동 사업은 거점국가를 우선 선정하고 그 이후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임.

< 사업 추진 절차 비교 >

구분	사업 절차
기존 소규모 연수	<u>수요조사(n-2년)</u> → 사업계획수립 → 기관선정 및 착수조사 → 사업 실시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사업 계획 수립 → 거점국가 선정 → <u>수요조사</u> → 사업실시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설계 등 연수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민간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활성화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우리 기업의 민간재원, 혁신기술, 비즈니스 전략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77억원(17%)이 증액된 529억 3,0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116	45,230	52,930	7,700	17.0

동 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외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사업, ② 개도국에 대한 우리 민간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개도국 내 사회적 가치(일자리, 소득증대 등) 창출에 기여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③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나 국가에서 양자/다자 파트너의 관련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의 협업사업인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사업 등이 있음.

202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과 ‘혁신적기술프

로그램(CTS)-TIPS 연계'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각각 2026년도 예산안은 15
억원, 30억원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11,051 (39건x283.4백만원)	11,751 (42건x279.8백만원)	700	6.3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24,725 (60건x412.1백만원)	27,975 (62건x451.2백만원)	3,250	13.1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5,150 (9건x572.2백만원)	4,850 (9건x538.9백만원)	△300	△5.8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2,654	2,354	△300	△11.3
- 기후 전략 및 제도(사업관리체계) 고도화	480 (5건x96백만원)	238 (3건x79.3백만원)	△242	△50.4
- 기후 지식 경험 공유 활성화	40 (4건x10백만원)	122 (4건x30.5백만원)	82	205.0
- 기후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2,134 (158.4만불x1,347원)	1,994 (144.5만불x1,380원)	△140	△6.6
조달청 혁신제품-CTS	-	1,500 (1식X1,500백만원)	1,500	순증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TIPS 연계	-	3,000 (5건X600백만원)	3,000	순증
사업관리비	1,500	1,500	-	전년동
사업행정비	150	-	△150	순감

□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의 한국국제협력단으로의 이관 부적절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은 조달청이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한 '혁신제품'⁸⁸⁾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공공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15억원임.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유사 ODA 사업 통합 관점에서 동 사업을 조달청에서 외교부로 이관할 계획이나, 이미 조달청에서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가 진행된바, 현 상황에서 외교부 이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2025년부터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실상 기존의 조달청 사업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관한 것임.

조달청은 총 동 ODA 사업을 3개년(2025년~2027년)으로 계획하였으며, 1차년도 7억 2,000만원, 2차년도 12억 3,300만원, 3차년도 5억 1,3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예산으로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임.

조달청은 '혁신제품 ODA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88)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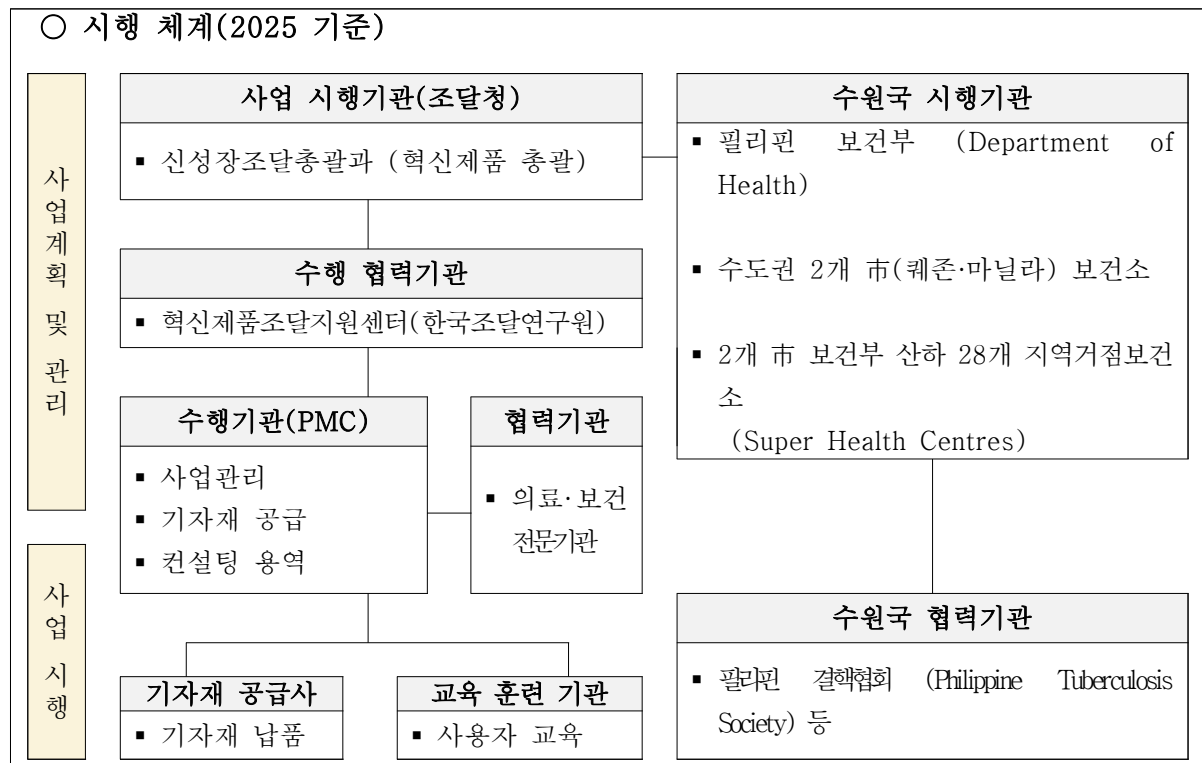
(CTS)⁸⁹⁾은 국내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과 개도국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양 사업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예산이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2025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대상 국가와 사업 내용도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 수행자도 ‘한국조달연구원·대한결핵협회’로 지정되어 계약이 진행 중으로, 휴대용 X-ray, 검출기 등 납품 예정인 기자재의 종류도 모두 정해진 상태임.

<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 개요 >

○ 사업명 : <u>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사업</u>					
○ 예산 및 기간 : 24억원, 총 3개년 사업 ('25~'27년)					
○ 사업 내용 : 혁신제품 기반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					
- 필리핀 결핵진단 프로세스 컨설팅 및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 체계 구축					
- 결핵진단 혁신제품 지원 및 필리핀 관련 혁신기술 역량 강화					
○ 기자재 구성 및 납품 목표					
구분	휴대형 X-ray	검출기	방사선 보호가운	노트북 (데이터 포함)	진단 장비 소모품
1차년도	6	6	20	6	1,500
2차년도	20	20	30	20	-
3차년도	3	3	20	3	-
계	29	29	70	29	1,500

89) 한국국제협력단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또는 소셜벤처가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목표는 수원국 발굴, PCP 접수,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사 선정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이나, 동 사업은 이미 수원국 발굴부터 수행사 선정까지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역할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올해 10월 말 체결된 협의의사록(RD)에도 한국 측 수행기관이 ‘조달청’으로 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의 이관은 오히려 수원국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이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이라는 일반적인 사업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미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조달청을 통해 추진 중인바, 동 사업의 시행기관을 조달청에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관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1차년도인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이 부진하며, 사업관리비가 과다 편성된 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조달청은 1차년도인 2025년을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여 기초 조사 완료 후 기자재를 일부 공급하고 역량강화 등 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인 2026년에는 기자재 공급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음.

<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 사업의 연도별 사업예산 등>

○ 연도별 사업예산 (총 3년, 2,400백만원)

년도	주요 사업 내용
2025년도 (1차년도, 720백만원)	결핵진단 운영 고도화(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 전문가 파견 2억 1,000만원 - 기자재 공급 4억 5,000만원 • (휴대용X-Ray) 15,000,000 x 6개 • (검출기) 12,000,000 x 6개 • (보호가운) 378,000 x 20개 • (노트북) 2,000,000 x 12개 • (데이터) 17,150,000 x 1개 • (AI진단장비) 80,000,000 x 3개 - 역량강화(전문가 초청 및 연수) 6,000만원
2026년도 (2차년도, 1,200백만원)	시범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 수립, 적용확산을 위한 전문가 대상 교육 운영
2027년도 (3차년도, 480백만원)	관련 유관기관 등 대상 교육 및 사업 평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그런데 수원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며 2025년 11월 초 현재 협의의사록(RD) 체결만이 진행된바, 이는 RD 체결이 4월 초에 종료될 것으로 계획된

것에 비하여 반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상황임.

또한, 당초 2차년도 예산에는 사업관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사업관리비로 3억원이 편성된바 이는 전체 예산 15억원의 20%에 해당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사업 관리비 비교 >

당초 계획	편성 (2026년도 예산안)
3,300만원 - 일반수용비(5.4백만원) •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50,000원×100부 = 5,000,000원 • 홍보물, 소모품 등 운영경비 : 10,000원×4명×5일×2회 = 400,000원 - 임차비(10백만원) • 사업운영 관련 수원기관과 회의장 임차 : 1,000,000원×3일×2회 = 6,000,000원 • 차량임차 : 400,000원×5일×2회 = 4,000,000원 - 국외업무여비(15.5백만원) • 항공비 : 900,000원×4명×2회 = 7,200,000원 • 일비 (필리핀 5급) : \$30x 4명x 5일x 2회 = 1,680,000원 • 숙박비 (필리핀 5급) : \$81x 4명x 5일x 2회 = 4,536,000원 • 식비(필리핀 5급) : \$37x 4명x 5일x 2회 = 2,072,000원 - 사업추진비(2.4백만원) • 수원기관과의 오만찬비 : 40,000원x 30명 x 2회 = 2,400,000원	3억원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의 지연 상황, 사업관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19.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외교부 출연금은 전년도(46억 4,9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4.93%) 감액된 4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수 입	정부출연금	4,649	4,420	△229	△4.93
	계	4,649	4,420	△229	△4.93
지 출	인건비	1,718	1,721	3	0.17
	경상운영비	582	582	-	-
	사업비	2,349	2,117	△232	△9.88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5조⁹⁰⁾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며,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체 예산은 100%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됨.

90)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수입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재단 사업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어 추진됨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2,900만원(△4.93%) 감액된 4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26년 일용임금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00만원(0.17%) 증액된 17억 2,100만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9.88)이 감액된 21억 1,700만원, 경상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합계	2,246	2,349	2,117	△232	△9.88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764	694	△70	△9.16
－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85	120	109	△11	△9.17
－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501	444	403	△41	△9.23
－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116	200	182	△18	△9.00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1,116	622	△494	△44.27
－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282	208	187	△21	△10.10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300	524	－	△524	순감
－ 한-아프리카 청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	－	－	90	90	순증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 Af-PRO)	39	56	50	△6	△10.71
－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328	295	△33	△10.06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469	801	332	70.79

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55	227	177	△50	△22.03
-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 대화) 및 연구증진	307	242	200	△42	△17.36
-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424	424	순증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나. 총괄 검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확보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의 정원은 임원을 포함해 32명이나, 현재 24명의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음. 재단은 2018년 설립 당시부터 정원보다 부족한 17명의 인건비를 편성해 오다, 2021년 정원이 32명으로 늘어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24명 정도의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음.

<재단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임원*	일반직
직제정원	32	2	30
현원	22	2	20

*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 감사(비상근) 1인 미포함

** 정원외: 일반직 2인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 2인과 인턴 4인으로 총 6인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 설립 이후 한·아프리카재단 인건비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	878	1,182	1,222	1,376	1,593	1,718	1,718	1,718	1,721
정 원*	21명	21명	22명	32명	32명	32명	32명	32명	32명
편성근거				임직원 18명 계약직 3명 인턴 2명	임직원 23.5명 계약직 2명 인턴 3명	임직원 24명 계약직 1명 인턴 3명			

* 임원 2인(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 포함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국제사회에서 정치·안보 및 자원·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대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전략적 접근, 외교인프라 강화, 국민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단의 업무 범위와 사업 규모의 확대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단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임시 인력⁹¹⁾에 의존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의 직제 정원 32명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5억 6,500만원의 증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91) 육아휴직 2인 중 1인의 경우 상용임금이 편성되지 않아,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건비 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액안	최종안	산출근거*
인건비	1,718	1,721	565	2,286	· 임원(2명) 322백만원 (161백만원 X 2명) · 직원(30명): 1,964백만원 (65.46백만원 X 30명)

* 재단 보수규정 직급별 평균임금 기준 및 경영평가, 퇴직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포함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제출자료 재작성)

□ 고유사업비 축소로 인한 위탁사업 비중 과다 구조 개선 필요

재단은 지속적인 인건비 부족에 더해, 최근에는 사업비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관의 재정 구조가 점차 왜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구성된 기관운영출연금 대비 사업출연금(고유사업비)의 비율은 2021년 114.8%에서 2026년에는 9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단 본연의 기능 수행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연도별 기관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총 계	4,155	5,193	4,771	4,425	4,649	4,420
기관운영출연금(A) (350-01)	1,934	2,151	2,248	2,179	2,300	2,303
사업출연금(B) (350-02)	2,221	3,042	2,523	2,246	2,349	2,117
사업비 비율(B/A)	114.8	141.4	112.2	103.1	102.1	91.9

이러한 고유사업비 축소는 결과적으로 위탁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재단은 2024년부터 정채된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적극 수행해 왔으나, 위탁사업의 규모가 고유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예산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한·아프리카재단 2024~2025년 위탁 수행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2025년 10월 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연도	사업명			
2024	글로벌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96	194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범부처 협업 사업
2024	아프리카 외교관 역량강화 특별연수	111	88	외교부 KOICA 소관
2025	글로벌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375	251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범부처 협업 사업
2025	양자협력사업 아프리카 정책포럼	70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입찰 공모

* 2025년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하반기 집행할 계획임.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 재단 고유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 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고유사업비(A)	2,246	2,349	2,117
위탁사업비(B)	307	445	-
위탁사업비 비율(B/A)	13.7	18.9	-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위탁사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업 수행 성격이 강해 재단의 중장기 전략 사업 추진과는 결이 다르며, 본래 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단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고유사업비의 확충을 통해 기관운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탁사업은 재단의 전문성과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재단이 對아프리카 외교·협력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비 대비 고유사업비율의 정상화와 인건비 증액을 통한 인력 운용 안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 2026년도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 (B-A)	(B-A)/A
합 계	562	893	801	△92	△10.30
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55	227	177	△50	△22.03
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307	242	200	△42	△17.36
3.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424	424	-	동결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사업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 등 주요 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간행물 등을 통해 국민의 아프리카 이해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8억 9,300만원) 대비 9,2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조사·연구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개발 노력 필요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의 내역사업인 「차세대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은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사업과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재단은 2025년에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 사업을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로 이동하였음.

이에 따라, 동 조사·연구 사업의 예산현액이 2025년 8억 9,3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에는 9,2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이에 대해 재단은 기존의 「차세대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 중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⁹²⁾는 교육홍보부가 담당하고,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사업은 조사연구부가 담당했던 상황으로, 사

92) ‘한-아프리카 청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함.

업 예산과 주무부서의 일치를 위하여 부서별 내역사업 이동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도 주요사업 및 내역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년 8월말)

항목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결산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 (8월)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815	1,116	692	256	622	△494	△44.27
-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282	264	208	208	24	187	△21	△10.10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300	290	524	-	-	-	△524	순감
- 한아프리카 청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	-	-	-	120	58	90	90	순증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 Af-PRO)	39	15	56	46	3	50	△6	△10.71
-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246	328	318	171	295	△33	△10.06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552	469	893	422	801	332	70.79
-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55	251	227	227	127	177	△50	△22.03
-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회) 및 연구증진	307	301	242	242	66	200	△42	△17.36
-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	424	229	424	424	순증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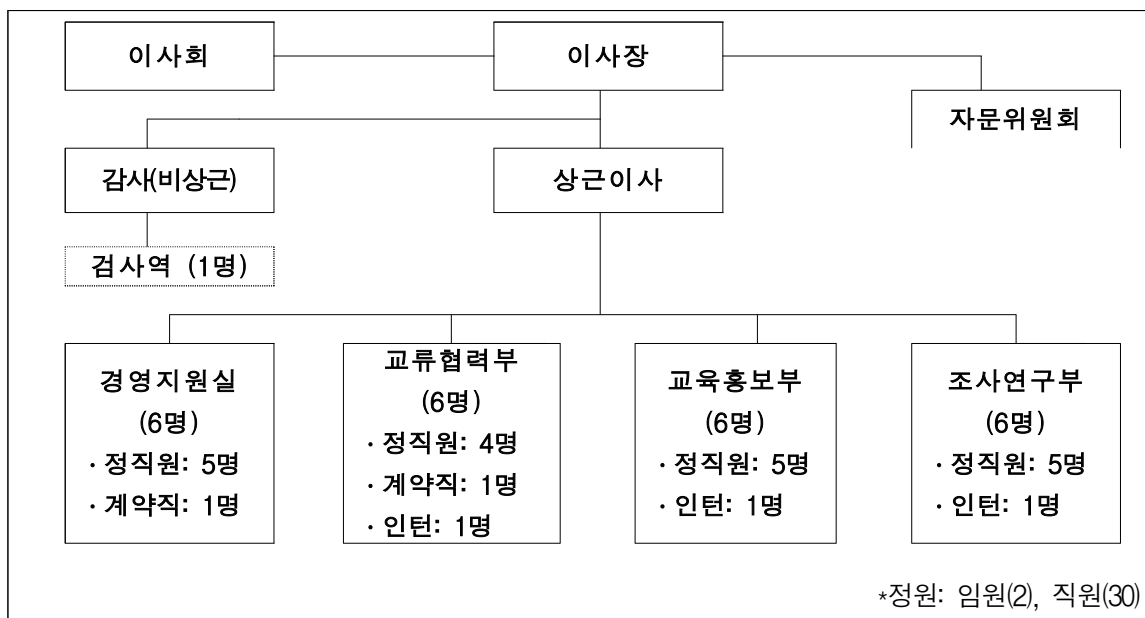
그러나,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on Africa, YPA) 양성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언어능력 등 종합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리 청년들을 아프리카지역 소재 국제기구·싱크탱크 등에 파견하여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질적 업무경험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 조사·연구

보다는 교육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음.

재단은 2026년도에는 연구형(Think-tank) 트랙과 실무형(International Organization) 트랙으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조사·연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차별화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멘토링, 취업 컨설팅)을 강화하여 정규화된 아프리카 전문가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장경험-전문성-기여역량의 3단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나, 이 또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됨.

기존에 동 사업을 조사연구부가 담당한 것은 재단의 소규모 인원을 각 부서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려다 보니 업무 분배의 과정에서 사업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한·아프리카재단 조직도>



이러한 사업 배치는 표면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 및 업무가 균형 있게 보일 수 있으나, 성격에 안 맞는 예산의 이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사·연구

사업의 축소 및 위축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실제로 동 사업의 이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조사·연구 사업은 재단의 세가지 카테고리 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연구 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_YPA 파견 사업 이동 없는 경우>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비중	본예산 (A)	비중	예산안 (B)	비중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35.71	764	32.52	694	32.78	△70	△9.16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39.27	1,116	47.51	1,046	49.41	△70	△6.27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25.02	469	19.97	377	17.81	△92	△19.62
사업출연금 합계	2,246	100	2,349	100	2,117	100	△232	△9.88

<연도별 조사연구사업 비율 현황_YPA 파견 사업 이동 없는 경우>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전체 사업비(A)	1,500	2,221	2,221	3,042	2,523	2,246	2,349	2,117
조사연구사업 (B)	358	508	508	769	609	562	469	377
조사연구사업 비중(B/A)	23.9	22.9	22.9	25.3	24.1	25.0	20.0	17.8

「한·아프리카재단법」은 제1조⁹³⁾ 및 제7조⁹⁴⁾에서 재단의 설립목적과

93)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4)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호 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단의 사업구성을 보면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사업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재단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연구 기능을 재정비하고, 교육·홍보 사업 중심의 구조적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교육적 성격의 사업을 조사·연구 항목으로 이관하기보다,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의 국별·권역별·분야별 정책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축적할 수 있는 신규 조사·연구사업을 발굴·확대해야 함.

이를 통해 재단이 아프리카 정책 연구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정부 및 민간의 대(對)아프리카 전략 수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Ⅲ. 2026년도 외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국제교류기금】

1. 개 요

가. 수입 계획안

국제교류기금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수입계획안의 총 규모는 1,35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059억 800만원 대비 298억 9,800만원(28.2%)이 증액되었음.

감액내역은 없으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교류재단의 주 수입원으로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수입(법정부담금)이 전년도(544억 7,000만원) 대비 93억 1,500만원 증액 반영⁹⁵⁾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을 회수하는 기금예탁원금회수는 전년도 대비 196억 9,900만원 순증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전년도(3억 3,500만원) 대비 8억 8,400만원(263.9%) 증액된 12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음.

한편, 기금적립금의 금융기관 예치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수

95) 법정부담금 산출근거(2026년도 수입 각목명세서) : 총 637억 8,500만원

1. 복수여권

가. 10년 : 12,000원 × 4,676,392건 = 561억 1,700만원

나. 5년 : 9,000원 × 852,032건 = 76억 6,800만원

입은 27억 3,000만원으로, 국내법인 또는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민간출연금은 20억 1,300만원으로, 재단이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판매대, 구독료 및 전년도 사업비 잔액 환입금 등의 기타잡수입은 5억원으로,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기금 중 2026년에 만기도래하여 회수할 금액인 458억 6,000만원으로,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되었음.%)

<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계획 (당초)	2025년계획		2026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156,567	105,908	105,908	135,806	29,898	28.2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730	2,730	2,730	2,730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730	2,730	2,730	2,730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1,608	56,483	56,483	65,798	9,315	16.5
법정부담금 (59-593)	69,595	54,470	54,470	63,785	9,315	17.1
민간출연금 (59-594)	2,013	2,013	2,013	2,013	-	-
69 잡수입	500	500	500	500	-	-
기타잡수입 (69-691)	500	500	500	500	-	-
85 정부예금회수	52,889	45,860	45,860	45,860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52,889	45,860	45,860	45,860	-	-
92 예탁원금회수	28,000	-	-	19,699	19,699	순증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28,000	-	-	19,699	19,699	순증
95 예탁이자수입	840	335	335	1,219	884	263.9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840	335	335	1,219	884	263.9

96) 기타 잡수입 산출근거(2026년도 수입 각목명세서) : 5억원

- 정기간행물 판매수입 : 3,500만원
- 사업비 환입수입 : 4억 6,500만원

나. 지출 계획안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1,35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059억 800만원 대비 298억 9,800만원(28.2%)이 증액되었음.

국제교류기금의 실질적인 주요사업은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서, 2026년도 사업비 규모는 376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423억 6,300만원) 대비 47억 4,700만원(△11.2%)이 감액되었으며,

해외한국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한국학진흥」,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협력강화」, 「지정기부금운영」, 「국제교류정보화」 등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음.

<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총 예 산				199,318	156,567	240,192	105,908	135,806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63,126	54,017	81,012	42,363	37,616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7,947	19,634	17,738	14,773	13,505
		[401] 한국학기반확대		17,947	19,634	17,738	14,773	13,505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21,162	19,497	20,275	15,339	13,868
		[401] 글로벌인적교류		5,430	3,850	3,996	2,200	2,090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9,239	8,474	10,626	7,343	6,570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2,167	2,048	1,219	1,342	1,275
		[404] 글로벌 협력 강화		4,326	5,125	4,434	4,454	3,933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12,055	10,361	9,804	7,683	7,107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6,573	5,507	5,413	3,765	3,443
		[402] 글로벌문화교류		5,482	4,854	4,391	3,918	3,664
	[2635] 지정기부금운영			9,196	1,759	30,383	1,802	370
		[401] 지정기부사업		9,196	1,759	30,383	1,802	370
	[2636] 국제교류정보화			2,766	2,766	2,812	2,766	2,766
		[40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766	2,766	2,812	2,766	2,766
[7000] 외교 행정지원				14,775	14,690	14,632	14,665	15,103
	[7076] 기금운영비			14,775	14,690	14,632	14,665	15,103
		[101] 인건비		10,341	10,745	10,383	11,068	11,456
		[201] 기타운영비		4,434	3,945	4,249	3,597	3,647
[90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70,000	-	19,699	61,568
	[9001] 공공자금관리기금			-	70,000	-	19,699	61,568
		[9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70,000	-	19,699	61,568
[9700] 여유자금운용				121,417	17,860	144,548	29,181	21,519
	[9711] 여유자금운용			121,417	17,860	144,548	29,181	21,519
		[970] 통화금융기관예치		121,417	17,860	144,548	29,181	21,519

다. 자산운용 현황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여유자금회수'로 45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27억 3,000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2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여유자금예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 215억 1,9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15억 6,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음.

< 여유자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여유자금 예치	36,217	31,634	53,504	65,651	84,161	76,409	52,889	17,860	29,181	21,519
공자기금 예치	10,000	60,000	60,000	60,000	20,000	76,000	28,000	70,000	19,699	61,568
여유자금 회수	36,000	56,863	69,200	82,239	66,964	66,964	76,409	52,889	45,860	45,860
예탁원금 (공자기금) 회수	10,000	30,000	40,000	40,000	60,000	78,070	-	28,000	-	19,699
기타재산 이자수입 (이자수입)	1,032	848	1,297	1,297	2,730	2,730	2,730	2,730	2,730	2,730
예탁이자수입 (공자기금)	625	1,113	2,000	1,910	1,450	1,446	560	840	335	1,219

라. 재정운용 계획 및 국제교류기금의 적립금 현황

2026년도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수익이 657억 9,800만원이고 사업 비용이 376억 1,600만원으로, 사업 총이익은 281억 8,200만원이 예상되며,

인건비 및 기타운영을 위한 비용 등 관리비용이 151억 3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130억 7,9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는바,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26년도 재정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말 실적	2025년 말 계획		2026년 말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96,192	57,000	57,000	65,798	8,798
2. 사업비용	79,762	42,400	42,400	37,616	-4,784
3. 사업총이익(1-2)	16,430	14,600	14,600	28,182	13,582
4. 사업관리비	16,539	14,700	14,700	15,103	403
5. 사업이익(3-4)	-109	-100	-100	13,079	13,179
6. 사업외 수익	6,945	2,700	2,700	2,730	30
7. 사업외 비용	9	-	-	-	-
8. 경상이익	6,827	2,600	2,600	15,809	13,209
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	-	-
12. 법인세비용	-	-	-	-	-
13. 당기순이익	6,827	2,600	2,600	15,809	13,209

<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및 증감률 >

(단위: 백만원)

연 도	기 금 적 립 금	증 감 율(전년도 대비)
2015	144,019	4.4%
2016	155,870	8.2%
2017	182,814	17.3%
2018	190,384	4.1%
2019	192,925	1.3%
2020	155,328	△19%
2021	108,526	△30%
2022	79,639	△26.4%
2023	81,913	2.9%
2024	88,740	8.3%
2025.9.	87,251	△1.7%

2. 주요사업별 검토

< 세부사업별 2025년 예산 및 2026년 예산안 비교표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2025계획액 대비 2026년 정부안 증감	삭감 사유 또는 배경
합 계	42,363	37,616	△4,747	재단은 정부의 부담금 개편(2024년 7월)에 따른 기여금 수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사업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조정 감액안을 제출함.
한국학기반확대	14,773	13,505	△1,268	
글로벌인적교류	2,200	2,090	△110	
정책공공외교강화	7,343	6,570	△773	
공공외교기반확대	1,342	1,275	△67	
글로벌협력강화	4,454	3,933	△521	
한국문화해외확산	3,765	3,443	△322	
글로벌문화교류	3,918	3,664	△254	
지정기부사업	1,802	370	△1,432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766	2766	—	

가. 한국학 기반확대

「한국학 기반확대」는 한국학 강좌운영 지원사업(교수직 설치, 현지교원 고용 지원, 한국학 온라인 강의, 객원교수 파견 등)을 통해 해외 대학의 정규 강좌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기획 및 해외사무소 등 협업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학 장기 발전 및 지한 인사 배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 전문가 육성사업(해외 대학의 한국 전공 석박사 재학생 대상 장학지원, 한국학 박사학위 취득 우수 신진학자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한국학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여 해외 차세대 한국 연구자 양성 및 한국 관련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전년도(147억 7,300만원) 대비 12억 6,800만원(△ 8.6%) 감액된 135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국학 기반확대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A)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합 계	19,634	18,356	17,738	14,773	13,505	△1,268	△8.6
1. 한국학강좌운영	15,080	13,492	13,006	12,489	11,314	△1,175	△9.4
2. 한국전문가육성	3,563	3,507	3,485	2,284	2,191	△93	△4.1
3. 한국이해저변확대	991	1,357	1,247	-	-	-	-

□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사업 내실화 및 재원 다각화 노력 필요

한국학 기반확대는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비 376억 원⁹⁷⁾ 중 약 135억 원(36%)을 차지하며 세부사업 중 지출규모 1위임. 이는 재단의 순수 사업비 중 3분의 1 이상이 투입되는 수준으로, 기금의 운용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

그러나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학 강좌운영’은 교수직 설치, 현지교원

9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분	2026년 계획안(백만원)	비율(%)
총지출	52,719	100
사업비	37,616	71.4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운영비)	15,103	28.6

고용 지원, 객원교수 파견 등 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재단이 직접 성과를 관리하기가 용이한 '사업형'이라기보다 '인력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음.

최근 3년간 사업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객원교수 파견 사업은 2026년 이후 일몰 예정이며, 현지교원 고용 지원 역시 축소되는 추세임. 반면, 교수직 설치 및 온라인 강의 사업은 유지⁹⁸⁾되는 구조로 조정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 강의는 국내-해외 연계형 중심으로 추진되며, 발신·수신 대학이 협의한 LMS, Zoom 등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또는 VOD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물리적 인력 파견 대비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수진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해외대학 한국학 지원사업 지출 구조조정 내역 >

구분	2023		2024		2025.9월 기준		2026년 예산안		구조조정 내역
	개교 수	집행액	개교 수	집행액	개교 수	집행액	개교 수	예산안	
객원교수 파견	69	3,020	47	1,880	21	663	2	70	폐지 (기협약된 26년도까지 지원 후 사업 일몰 예정)
교수직 설치	26	5,510	29	5,647	18	2,307	35	5,449	
현지교원 고용 지원	25	874	15	523	6	351	10	513	축소
온라인 강의	52	4,104	20	4,957	20	3,674	20	4,844	
합계		13,508		13,007		(6,995)		10,876	

※대학수: 지원금 수혜 대학 기준(중복 제외) / 집행액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98) 집행액 기준

< 최근 3년간 한국학 온라인 강의⁹⁹⁾ 현황 >

구분	2023		2024		2025.9월 기준		2026년 예산안		구조조정 내역
	개교 수	집행액	개교 수	집행액	개교 수	집행액	개교 수	예산안	
국내-해외 연계형	16	3,256	18	4,330	18	3,005	18	4,220	
해외 컨소시엄형	3	819	2	586	2	615	2	579	축소 (2024, 중남미 컨소시엄 폐지)
사업관리	3건	29	3건	41	3건	54	3건	45	
합계	-	4,104	-	4,957	-	3,674	-	4,844	

※대학수: 지원금 수혜 대학 기준(중복 제외) /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편, 재단의 주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2024.6.4.)으로 수입액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재단은 단기 교원 지원 및 인력 파견 중심의 인력 의존형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사업 효율화와 구조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99) [한국학 온라인 강의]

사업 구분	사업설명
국내-해외 연계형	- 한국어·학 교육 수요가 있는 해외 대학에 관련 온라인 강화를 실시간 또는 VOD 형태로 제공 - 전문 교수진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초빙교원 파견 및 학습체계 구축
해외 컨소시엄형	- 해외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학 강좌 상호 교환
사업관리(회계검토, 연차보고서, 홈페이지 운영 등)	- e-스쿨 회계 검토 및 연차 평가 시행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 관리 효율성 강화 및 환류 -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e-스쿨 사업 홍보

그러나 K-팝,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한국학 수요 급증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대학에서는 한국학 강좌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재단은 단순한 인력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 한국학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한국학의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대학 등 다양한 자원 확보 및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글로벌 인적교류

「글로벌 인적교류」는 각국의 여론 주도층인 유력·고위인사 방한초청을 통해 타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해외유력인사 초청」,

향후 정책결정자로 성장할 권역별 차세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양국 차세대 지도자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차세대지도자교류」,

우리 청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해외 국제교류기관에 대한 글로벌 인턴십을 추진하는 「글로벌 챌린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전년도(22억원) 대비 1억 1,000만원(△5.0%) 감액된 2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글로벌 인적교류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A)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합 계	3,850	4,062	3,996	2,200	2,090	△110	△5.0
1. 해외유력인사초청	1,177	1,174	1,144	1,000	890	△110	△11.0
2. 차세대지도자교류	736	674	651	624	624	-	전년동
3. 미평화봉사단재방한	100	155	153	-	-	-	-
4. KF글로벌챌린저	1,837	2,059	2,048	576	576	-	전년동

□ 한중청년교류사업, 재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확충 필요

「차세대지도자교류」는 각 국가 및 권역별로 향후 지도층으로 성장할 차세대 인사와 청년들을 방한 초청·파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차세대 지도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전략지역별로 미래지향적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년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계기 등의 후속사업으로 ‘청년 교류사업’이 시행되기도 함¹⁰⁰⁾.

100)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한-중 청년교류사업
 - 2008년 한중 정상회담 후속 성과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청년교류를 위한 한-중청년교류사업 시행(2009년-2019년), 2024년 한중청년교류 방중을 재개
 - 재단-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MOU 갱신(2013, 2024)을 통해 사업 시행 중
- 한-일 대학생교류사업
 - 1971년 한일 각료회의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시행, 1992년부터 외교부 요청으로 재단으로 사업 이관, 52년 간 지속 운영 중
- 한-베트남 청년교류사업
 - 2013년 한-베 양국 정상회담 계기, 후속사업으로 시행. 재단-베트남 내무부 MOU 체결 (2013.12월) 후 5년간 사업 시행하였으며, 2019년 쌍방향 교류 사업으로 MOU 체결

차세대지도자교류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근 3년간 차세대 및 청년교류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차세대 및 청년교류 연도별 세부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교류 건수	인원(명)	국가	교류인원 ¹⁰¹⁾	집행액
2023	9	153	미국	초청 8명	231
			인도네시아	초청 16명	58
			호주	방한 20명, 방호 10명	159
			일본	방한 30명, 방일 29명	165
			베트남	방한 30명, 방베 10명	123
2024	8	199	미국	초청 8명	186
			인도네시아	초청 16명	58
			호주	초청 7명	33
			중국	방중 58명	39
			일본	방한 30명, 방일 30명	145
			베트남	방한 30명, 방베 20명	161
2025 9월 말 기준	7	180 (추진 중)	인도네시아	초청 17명	71
			호주	방호 6명	34
			중국	초청 53명	151
			일본	방한 30명, 방일 30명	150
			베트남	방한 29명, 방베 15명	(추진 중)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101) 보충 설명

구분	사업명	교류형태
미국	미국의회 보좌관 초청사업	방한 초청만 시행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	방한 초청만 시행
호주	한·호정치차세대교류사업	격년으로 상호 방문(2024년 방한, 2025년 방호)
일본, 베트남	청년교류사업	청년들 간 상호교류, 네트워킹 기회 마련

이 중 한중청년교류사업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 후속 성과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4년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었음.

한중청년교류사업의 집행액과 연도별 교류인원은 다음과 같음.

< 한중청년교류사업 연도별 세부집행내역¹⁰²⁾ >

(단위 : 백만원)

연도	집행액	교류인원(명)	비고
2009	872	(중) 392	방한 2회(각 194명, 198명) 시행
2010	765	(한) 99 (중) 294	방한 2회(각 145명, 149명) 및 방중 1회 시행
2011	764	(한) 94 (중) 294	방한 2회(각 145명, 149명) 및 방중 1회 시행
2012	794	(한) 119 (중) 292	방한 2회(각 148명, 144명) 및 방중 1회 시행
2013	497	(한) 120 (중) 198	방한, 방중 각 1회 시행
2014	494	(한) 122 (중) 177	
2015	475	(한) 111 (중) 178	
2016	433	(중) 172	방한만 1회 시행
2017	-	-	
2018	105	(한) 120	방중만 1회 시행
2019	400	(한) 120 (중) 175	방한, 방중 각 1회 시행
2020~ 2023	-	-	코로나19로 사업 미시행
2024	39	(한) 58	5년만의 방중 재개 ¹⁰³⁾
2025	151	(중) 53	6년만의 방한 재개 ¹⁰⁴⁾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102) 상호주의에 의거, 초청 측이 상대국 참가자의 국제선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103) 2024년 한·중청년교류사업 재개 당시, 재단 측 사업비 부족으로 방중·방한 각 50명씩 총 100명 규모로 축소하였으며, 연내에는 방중만 시행하고, 2025년에 중국 청년 방한 초청을 실시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함.

104) 2025.4.21.~26.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청년 53명을 초청하여 한 중청년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함.(출처 : 재외동포신문, 2025.4.21.)

최근 사회적 혐한·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간 직접 교류는 양국 간 공공외교를 안정시키고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글로벌 사우스 외교 및 외교 다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복원을 위해 청년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중청년교류사업은 재개된 기회를 활용하여 상호주의 기반의 상호교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층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정책공공외교강화

「정책공공외교강화」는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을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친한(親韓) 환경을 조성하고,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과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73억 4,300만원) 대비 7억 7,300만원(△10.5%) 감액한 6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정책공공외교강화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계획액 (A)	2026 계획안 (B)	증감 (B-A)	증감율 (B-A)/A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합 계	8,474	10,656	10,626	7,343	6,570	△773	△10.5
1. 해외정책연구소지원	2,398	5,262	5,251	2,249	2,120	△129	△5.7
2.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6,076	5,394	5,375	5,094	4,450	△644	△12.6

세부사업 「정책공공외교강화」는 「해외정책연구소 지원」과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외정책연구소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및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이슈 및 글로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 계획안은 전년도(22억 4,900만원) 대비 1억 2,900만원(△5.7%) 감액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은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한미관계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대미 특화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50억 9,400만원) 대비 6억 4,400만원(△12.6%) 감액된 4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해외정책연구기관 지원사업의 환류체계 점검 및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

내내역사업 「해외정책연구소 지원」과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는 해외정책연구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비(非)미국 지역과 미국 지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해외 주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정책연구 및 현지 행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업 성격과 목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재단은 매년 7~8월경 KF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지역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면평가 방식의 개별심의·대면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함. 심의 결과는 12월에 개별 통보되며, 차년도에 선정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원 절차가 진행됨.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사업 성과를 점검한다고 설명함.

<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 진행 절차 및 연간 일정 >

구분	일정	방식	내용
신청서 접수	7~8월	온라인	○ KF 온라인신청시스템 통해 신청서 접수
▼			
개별심의	9월	온라인	○ 내용: 신청서 각 건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자 : 지역별 외부 전문가
종합심의	11월	대면	○ 내용: 종합심의(국제협력네트워킹 분과회의) 개최 및 확정 ○ 평가자 : 국제협력 네트워킹 분과위원 및 내부위원
▼			
결과 통보	12월	서면	○ 심의 결과 개별 통보

구분	일정	방식	내용
▼			
협약 체결	차년도 연중	서면	○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수령 ○ KF-기관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전도
모니터링		대면/ 온라인	○ 사업 진행 사항 모니터링 - 행사 참관(온·오프라인), 사업추진자 면담, 언론 모니터링 등
결과보고		서면	○ 결과보고서 접수 및 보고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2025년도 해외정책연구기관 공모사업 지원 현황 >

	국가명	기관명	지원액 (백만원)
1	미국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57
2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306
3		Center for Bioethics, New York University	117
4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98
5		Brookings Institution	97
6		Foreign Policy Association	64
7		University of Notre Dame, Keough School of Global Affairs	55
8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98
9		The Project 2049 Institute	103
10		The Henry L. Stimson Center	58
11		Korea Society	949
12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109
13		US-Asia Institute	56
14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101
15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FSI), Stanford University	182
16		Atlantic Council	138
17		U.S.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	99
18		RAND Corporation	145
19		Asia Society	171
20		Ban Ki-moon Foundation	55
21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140
22	독일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98
23		Interface	88
24	말레이시아	Monash University Malaysia, Southeast Asia Research Centre for Digital Tech and Society	29
25		Universiti Malaya, East Asian Studies	14
26	벨기에	VUB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117
27	브라질	Federal University of Minas Gerais	21

	국가명	기관명	지원액 (백만원)
28		Getulio Vargas Foundation	28
29	스웨덴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68
30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160
31		Center for Asian Studies,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56
32	스위스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55
33	스페인	Elcano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59
34	슬로바키아	Adapt Institute	22
35	싱가포르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36
36	영국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84
37	오스트리아	One Earth Future Austria	42
38	우즈베키스탄	Institute for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17
39	이탈리아	International Affairs Institute	112
40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55
41	인도	Mahatma Gandhi University	42
42		Council for Strategic and Defense Research	66
43	인도네시아	Center for East Asia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Muhammadiyah Malang	22
44		Universitas Indonesia,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38
45	일본	The University of Tokyo	21
46		Kyushu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31
47		KEIO Center for Contemporary Korean Studies	71
48		Center for 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Studies, Ritsumeikan University	82
49	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44
50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9
51		Central South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21
52	체코	European Values, Center for Security Policy	30
53	캐나다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69
54	키르기스스탄	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Initiativ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22
55	태국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Thammasat University	22
56	폴란드	The Casimir Pulaski Foundation	59
57	헝가리	National Archives of Hungary	41
58	호주	University of Sydney	71
59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42
60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Korea Research Center	29
61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Myanmar-Korea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21
62	칠레	Pontifical University of Chile	35
합 계			5,267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해 해외경상이전¹⁰⁵⁾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사업 결과물이 해외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확인 가능한 반면,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공개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¹⁰⁶⁾되었음. 이는 예산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환류체계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해외경상이전으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산출물의 공개를 포함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글로벌 협력강화

「글로벌 협력강화」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주도의 지식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각종 국제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요 외교 전략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된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 정책 시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해외 친한 인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동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 및 지역 간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양자 간 이슈

1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106) 2025.10.28.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

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수립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도급 인사 중심의 지적 대화체를 운영하는 「포럼 및 세미나」 사업 ② 우리 외교의 주요 상대국과 양자 간 이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맞춤형 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전략사업」 ③ 한-중앙아 각국 정부 간 정례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협력포럼(2007년~)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포럼에서 발굴된 협력 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사업임.

2026년도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44억 5,400만원) 대비 5억 2,100만원(△11.7%)이 감액된 39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계획액 (A)	2026 계획안 (B)	증감 (B-A)	증감율 (B-A)/A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합 계	5,125	4,672	4,434	4,454	3,933	△521	△11.7
1. 포럼 및 세미나	1,343	1,604	1,458	1,143	1,091	△52	△4.5
2. 지역전략사업	2,133	1,419	1,410	1,762	1,444	△318	△18.0
3.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1,649	1,649	1,566	1,549	1,398	△151	△9.7

□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2026년 정상회의 대비 역할 강화 필요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이하 사무국)은 한국 및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공식 다자 대화채널인 ‘한-중앙아협력포럼’¹⁰⁷⁾의 내실화 및 포럼에서 발굴된 협력 사업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2017년도에 재단 내에 설치된 상설 사무국임.

사무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앙아협력포럼’에서 논의된 의제 및 협력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과 산·학·민·관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한편, 2026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¹⁰⁸⁾되어 있는바, 정상회의는 한-중앙아 협력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행사로,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방향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무국은 행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시행하던 ‘봄맞이축제 나우르즈’ 행사를 확대하여 정상회의의 부대행사 성격으로 ‘중앙아시아 복합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

사무국은 6대 중점협력분야인 ①교통·물류 ②에너지 ③산업 현대화·다변화 ④기후 변화·환경 ⑤보건·의료 ⑥교육·문화·관광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

107)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관계 강화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고위급 다자협의체.

108) 관련 예산안은 6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단위사업 : 동북아시아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세부 사업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으며, '중앙아시아 복합문화행사' 관련 예산은 이 중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해당함. 2026년도 교육·문화·관광 사업 예산안 5억 2,500만원은 복합문화축제, 유라시아청년아카데미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복합문화행사 관련 예산안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6 예산안	비고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1,398	
-	교육·문화·관광	525	복합문화축제, 유라시아청년아카데미 등 포함

나우르즈 축제는 중앙아시아 전통 공연·전시·체험존·푸드존 등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 중앙아시아 특화 복합문화행사로, 2026년에는 축제를 더욱 다변화하여 국민과 재한 중앙아인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정상회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봄맞이 축제 나우르즈 최근 5년간 행사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행사명(날짜)	기간	주요내용 및 성과	집행액
2021	2021 중앙아시아 봄맞이축제	3.19.-4.3.	중앙아 소개영상, 공모전, 영화주간, 쿠킹클래스 등 온오프라인 문화체험 운영 오프라인 1천여명, 온라인 3.5만여 회 참여	203
2022	2022 중앙아시아 문화주간 ¹⁰⁹⁾	10.22.-31.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기념 중앙아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리 국민, 재한중앙아인 1.7만여 명 참여	256
2023	2023 중앙아시아 봄맞이축제	5.13.-14.	중앙아 패션쇼 및 문화체험 부스 운영 우리 국민, 재한중앙아인 1.1만여 명 참여	190
2024	2024 중앙아시아 봄맞이축제	5.18.-19.	중앙아 공연 및 문화체험 부스 운영 우리 국민, 재한중앙아인 1.6만여 명 참여	209
2025	2025 한-중앙아 문화의 날 ¹¹⁰⁾	10.4.-6.	국내 중앙아 순회공연(광주, 서울) * 사업 성과 및 사업비 정산 진행중	-

(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

109) 2022년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봄맞이축제'를 10월로 연기·확대하여 '문화행사'로 명칭 변경

110) 2025년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당초 봄 개최 예정이던 '봄맞이 축제'를 '문화행사'로 전환하여 10월 개최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 간 협력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는 만큼, 사무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의 완성도 제고와 협력 네트워크의 실질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63

02)6788-5264

02)6788-5266

02)6788-5270
